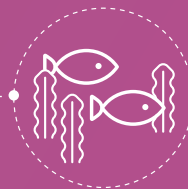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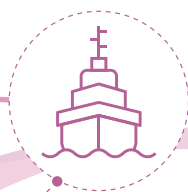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A Study on Building a Foundation for Maritime Foreign Strategy
in Response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박수진 · 최지연 · 이해영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A Study on Building a Foundation for Maritime Foreign Strategy
in Response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박수진 · 최지연 · 이해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박수진, 최지연, 이해영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해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연구기간	2025. 4. 1. ~ 2025. 10. 30.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박수진 연구총괄, 제1장 서론, 제2장제1절 일부, 제2장제2절 일부, 제3장제1절 일부, 제4장제1절 일부, 제4장제2절, 제4장제3절 일부, 제5장
내부연구진	최지연 제2장제1절 일부, 제4장제1절 일부, 제4장제3절 일부 이해영 제2장제2절, 제3장제1절 일부, 제3장제2절 일부, 제4장제1절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이용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장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기 수준을 넘어 경제산업 구조와 기술 패러다임, 안보와 기후·환경의 가치체계가 동시에 변화하는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 경제·사회·안보 구조가 재편되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관세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분쟁 상황은 국제정치·경제 질서 전반에 다자주의의 구조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면서 기존의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 해양질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한 항행의 자유,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행사와 협력, 해양환경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기존의 국제 해양질서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안보·기술 경쟁의 재편, 공급망과 에너지 전략의 변화, 2023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일명, BBNJ 협정)' 채택 등 해양법 질서의 변화를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해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단일 분야의 접근,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24년에 일시적이었지만 이미 지구 연간 평균 기온이 파리협정의 목표인 1.5℃를 넘어섰으며, 급증하는 플라스틱 오염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2024년 한 해에만 5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소비되었고, 이 중 상당량은 빠르게 4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로 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2060년까지 약 12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¹⁾ 더불어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해양산성화, 해양서식지 훼손 등 해양생물다양성 위기의 확산과 국제 공동 대응의 시급성은 국제 해양질서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2023년 6월에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하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BBNJ 협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26년 1월에 새로운 국제조약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지구상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새로운 국제규범인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 협상이 진행 중이고, IMO도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 UNEP,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검색일: 2025.9.3.)

요컨대 기후위기 및 생물다양성 위기, 해양오염 증가 등 해양과 해양자원의 압력요인이 증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항행과 통항의 이슈가 안보와 경제, 환경과 결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글로벌 위기요인의 증가와 첨단 과학기술이 급속한 발전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해양질서의 패러다임이 다층적 규제로 전환되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국제 해양질서 전환의 주요 동인과 특징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와 주요 해양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국의 해양대외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기존의 해양대외전략이 해양안보,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에 대해 분절적으로 접근해 온 틀을 넘어, 향후에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연구진은 유엔해양법협약과 BBNJ 협정과 같은 규칙 기반 국제 해양질서가 전환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규범적 기반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해양대외전략 수립 및 이행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해양질서 형성과 이행 과정에서 리더십을 강화하여 다자간·소다자간, 지역간 해양협력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해양질서 전환기에 요구되는 해양대외전략은 경제적 이해의 확장이나 해양안보, 해양환경적 관점에서 산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해양오염, 에너지 전환, 기술발전, 지정학 리스크는 상호작용을 통해 해양대외전략에 핵심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전환기 국제 해양질서에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책임 있는 해양강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책임을 맡아주신 해양연구본부의 박수진 선임연구위원과 최지연 부연

구위원, 이해영 전문연구원 등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조계연 심의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이상길 과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이용희 교수, 고려대학교 정서용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심사와 감리를 맡아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우리 원의 최상희 부원장, 윤성순 본부장, 이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5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 정 희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 i

Executive Summary _ xi

01

서론 _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7
3.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0
1. 연구 내용	10
2. 연구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3
1. 선행연구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02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과 해양이용 _ 19

제1절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19
1. 국제 해양질서의 개요	19
2.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요인과 특징	22
3. 소결	48
제2절 전환기 국제 해양질서와 해양이용	50
1.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해양자원의 이용	50
2. 해양과학기술 협력 강화 및 격차 해소	59
3. 블루 이코노미 및 재정 메커니즘 확대	63
제3절 종합	67

03	주요국의 해양대외정책 분석 _ 69	
	제1절 유럽연합(EU) 및 벨기에의 해양대외정책	71
	1. 유럽연합(EU)	71
	2. 벨기에의 해양대외정책	80
	3. 해양대외정책의 이행체계	85
	제2절 미국 및 중국의 해양대외정책	86
	1. 미국	86
	2. 중국	94
	제3절 종합	100

04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 기반 구축방안 _ 103	
	제1절 우리나라 주요 해양대외정책의 현황	103
	1. 국제개발협력	103
	2. 주요 다자·소다자 및 양자협력	111
	제2절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의 진단	133
	1. 해양 대외전략의 SWOT 분석	133
	2. 해양대외전략의 성과와 한계	138
	3. 해양대외전략의 추진방향	141
	제3절 해양대외전략의 기반 구축 방안	145
	1. 해양대외정책 설계·이행기반 강화	145
	2. 국제협력 플랫폼 간 연계 거버넌스 구축	149
	3. 신 국제 해양질서 주도를 위한 K-해양 이니셔티브 추진	152
	4.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	156

05	결론 _ 161	
	제1절 요약 및 결론	161
	제2절 정책 제언	164
	제3절 후속 연구	169

참고문헌 _ 171

부록 _ 197

표 목차

〈표 1-1〉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 사례	15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표 2-1〉 4대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적 전환 효과	30
〈표 2-2〉 글로벌·지역 거버넌스별 EEZ 비중과 영향범위	34
〈표 2-3〉 유엔 BBNJ 협정의 구성	38
〈표 2-4〉 유엔 플라스틱협약 초안의 주요 내용	41
〈표 2-5〉 지속가능어업 관련 국제협정	54
〈표 2-6〉 UNESCO-IOC 바르셀로나 선언의 주요 내용	60
〈표 2-7〉 UNESCO 오픈사이언스 원칙	61
〈표 3-1〉 벨기에 해양폐기물 대응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83
〈표 3-2〉 중국 블루 파트너십의 기본원칙	96
〈표 4-1〉 우리나라 역대 국제개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05
〈표 4-2〉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추진방향('24~'25년)	107
〈표 4-3〉 6대 영역별 블루행동과 투자 규모	109
〈표 4-4〉 Korea Blue Action Plan의 핵심 공약	110
〈표 4-5〉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8대 중점 추진과제	113
〈표 4-6〉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해양협력 주요 내용	114
〈표 4-7〉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120
〈표 4-8〉 한-아프리카포럼 개최 현황	122
〈표 4-9〉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포럼의 개최 현황	123
〈표 4-10〉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의 SWOT 분석	134
〈표 4-11〉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138
〈표 4-12〉 전문가 설문조사의 응답자 분류	138
〈표 4-13〉 해양대외정책 설계·이행기반 강화 방향	146
〈표 4-14〉 이행 거버넌스의 여건 및 추진 방향	148
〈표 4-15〉 국제협력 플랫폼 연계 방향	150
〈표 4-16〉 국제협력 플랫폼별 해양 협력 어젠다 및 협력방향	151
〈표 4-17〉 신 국제 해양질서의 대응 방향	153
〈표 4-18〉 K-해양 이니셔티브의 추진방향	155
〈표 4-19〉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 진출 가능 주요 국제기구	158
〈표 4-20〉 해양수산 부문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추진방향	159

그림 목차

〈그림 1-1〉 다자간·지역기구의 협력과 조정	9
〈그림 1-2〉 연구 수행체계	13
〈그림 2-1〉 글로벌 GDP·무역과 FDI 간의 디커플링 추세 (2010-2024)	24
〈그림 2-2〉 역내 및 역외 해상 물동량(2000-2024)	25
〈그림 2-3〉 전 지구 해양의 평균 표층 수온 변화 (1993-2023)	26
〈그림 2-4〉 30×30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 현황	28
〈그림 2-5〉 Ocean Decade Action의 해역별 분포	31
〈그림 2-6〉 The 20 ocean regions 분포	36
〈그림 2-7〉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상의 주요 경과	43
〈그림 2-8〉 IMO 온실가스 연료집약도(GFI) 준수 일정	45
〈그림 2-9〉 1974~2019년 세계 어족자원 현황	50
〈그림 2-10〉 WTO 어업보조금협정 비준 현황	52
〈그림 2-11〉 심해저환경관리계획 수립 현황	56
〈그림 2-12〉 2023 해양 상품·서비스 무역 규모	63
〈그림 2-13〉 해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	64
〈그림 3-1〉 제2장과 제3장의 연계성	69
〈그림 4-1〉 연도별 ODA 지원 실적	104
〈그림 4-2〉 연도별 해양수산 ODA 지원 실적	106
〈그림 4-3〉 한-아세안 무역량 추이	112
〈그림 4-4〉 남극 대륙연구 추진 로드맵	116
〈그림 4-5〉 북극 Arctic-8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118
〈그림 4-6〉 해양대외전략 수립 및 강화 필요성	139
〈그림 4-7〉 해양대외전략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139
〈그림 4-8〉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에 대한 평가	140
〈그림 4-9〉 해양대외전략 개선의 필요성	141
〈그림 4-10〉 해양대외전략의 목표	142
〈그림 4-11〉 해양대외전략 수립 시 우선적 고려사항	143
〈그림 4-12〉 해양대외전략의 수립 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	144
〈그림 4-13〉 해양대외전략의 수립 시, 우선적으로 강화할 분야	144
〈그림 4-14〉 해양대외전 기반구축 방향	167

약어 목록

- ABMTs(구역기반관리수단): Area Based Management Tools
- AUKUS(오커스,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약체): 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OIP(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 ARAB LEAGUE(아랍연맹): League of Arab States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TCM(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BRICS(브릭스):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 CBAM(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CBD(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CEP(EU 공동수산정책): Common Fisheries Policy
- COBSEA(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CSP(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SEAN
- EEAS(유럽대외행동 서비스국):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 EMSA(유럽해양안전국):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ESPR(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 ETS(배출권 거래제): EU Emissions trading system
- EUMSS(EU 해양안보전략): EU Maritime Security Strategy

-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or the United Nations
 - FAO Compliance Agreement(FAO 공해 어선의 국제적 보존 및 관리 조치 이행 촉진을 위한 협정):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 GBF(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체계):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G20(주요 20개국 협의회): Group of Twenty
 - GEF(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GFI(연료집약도): Green House Gas Fuel Intensity
 - GOOS(전지구 해양관측시스템) :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 GSTP(글로벌 무역특혜제도):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HNS(중금속, 위험·유해물질):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 ICES(국제해양탐사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 IMO(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NC(정부간 협상위원회):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 IOC(정부간해양위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 IPOA-IUU(IUU 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ISA(국제해저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KASI(한-아세안 연대구상):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
- LDCs(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 LTC(국제해저기구 법률기술위원회):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 MAP(미국 해양행동계획): MAP: Maritime Action Plan
 -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time Pollution from Ships
 - MCS(모니터링·통제·감시: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 MDA(해양영역인식): Maritime Situation Awareness
 - MERCOSUR(남미공동시장): Southern Common Market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PFC(북태평양수산위원회):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NEASPEC(동북아환경협력계획):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 NPFC(북태평양수산위원회):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NSS(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 Ocean Decade(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30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OC(아워 오션 컨퍼런스): Our Ocean Conference
 - PEMSEA(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Partnership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SMA(FAO 항만국조치협정):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QUAD(쿼드, 미국·일본·호주·인도간 4자 안보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FMO(지역수산물관리기구):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PICES(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SIDS(소도서개발도상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SLOC(해상교통로): Sea Lines of Communication
 - SPRFMO(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 U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Trade and Development
 - UNCLOS(유엔해양법협약):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EA(유엔환경총회):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 UNEP(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lan
 - UNESCO(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SA(유엔공해어업협정) :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United Nations,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 UNOC(유엔해양총회): 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
- UNSDG(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SMMA(미국상선해양학교): United States Merchant Marine Academy
 - USV(무인 수상체계): Unmanned Surface Vehicle
 - UUV(무인수중체계): Unmanned Underwater Vehicle
 - VG-FSP(FAO 자발적 기국이행 지침): Voluntary Guidelines for Flag State Performance
 -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1. 국제 해양질서의 개념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금융위기, 기후 위기, 해양오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요인과 특징에 대해 국내외 문헌을 기초로 분석
2. 미국, EU, 중국, 벨기에 등의 해양대외정책과 우리나라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향을 도출
3. 해양법 및 국제법, 해양과학기술, 해양안보, 외교정책 분야 전문가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해양대외 전략의 추진방향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검증

■ 정책제안

1. 기후위기,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경쟁 심화, 해양환경 규범 강화, 해양공간·자원의 전략적 가치 증대 등 다층적·복합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2. 2023년 BBNJ 협정 채택으로 공해자유원칙이 약화되었으며, 플라스틱 오염의 글로벌 의제화와 IMO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승인, 해양안보

및 블루이코노미의 중요성 증대 등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기가 도래하면서 해양대외정책의 재검토와 방향 설정이 필요하게 됨

3.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에 대응하여 해양대외전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양대외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해양공간의 특성, 어젠다별 전문성, 국가 해양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이행 연계 구조를 구축해야 함
4. 둘째, 국제해양협력은 국제협력 플랫폼 간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글로벌 플랫폼에서 규범과 원칙을 제시하고, 지역해 플랫폼은 이를 지역 특성과 어젠다에 맞게 조정·구체화하며, 국가별 협력은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환류하는 구조로 정비해야 함
5. 셋째, 글로벌 해양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BBNJ 협정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협상, IMO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해양 이니셔티브를 발굴·출범하는 것이 필요함
6. 넷째, 국제 해양질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과 관련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국제 해양질서 형성 과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율운항선박, AI 기술과 접목한 해양 과학기술, 블루이코노미, 해양 데이터 분석, 글로벌 해양법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해야 함

요 약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박수진 · 최지연 · 이해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해양은 지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으며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를 차지하고, 부피 기준으로는 지구상 생물 서식공간의 99%를 차지함
-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는 연안·해양도시의 발전과 회복력 증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해양경제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총가치는 연간 3조~6조 달러로 추정
-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무역통상-기술-안보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넥서스(Nexus)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국제 해양질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해양대외전략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고 책임 있는 해양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

2.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과 해양이용

1) 국제 해양질서의 개념

- ‘국제 해양질서(International Maritime Order)’란 국제사회가 바다를 어떻게 이용·보존·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형성한 규범·제도·관행·권력구조의 총체를 의미
- 국제 해양질서는 단순히 유엔해양법협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자원·해양환경·해양과학·해양경제를 규율하고 있는 다자적·지역적 규범, 해양 거버넌스, 해양력(sea power) 등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

2)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요인 및 특징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규범 강화,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적 전환, 다극체제 대두로 인해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이 이루어짐
- 전환기 국제 해양질서의 특징은 크게 공해자유원칙의 약화, 플라스틱 오염의 글로벌 의제화, IMO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시장기반 이행조치 강화, 해양안보 및 블루이코노미의 중요성 증대로 요약할 수 있음

3. 주요국의 해양대외정책 분석

1) 유럽연합(EU) 및 벨기에

- EU의 해양대외정책은 회원국들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EU 공동의 법·제도를 구축하여 공동의 로드맵을 제시

- EU는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IUU 어업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였으며, ‘EU 해양안보전략’을 통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국제적 규칙과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추진
- 벨기에는 북해 중심의 해양국가라는 지리적 특성과 EU 및 NATO 회원국이라는 특성이 정책에 반영
- 벨기에는 블루 이코노미,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해양안보 위협을 군사 단독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환경안보, 사이버안보 위협과 결합된 복합안보 차원에서 접근

2) 미국 및 중국

-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조선·해운 산업 재건과 국가 해양주권·안보를 강조
- 2025년 4월에 범정부 해양산업·해양안보 재건 실행계획 형태의 ‘해양행동계획(MAP: Maritime Action Plan)’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조선·해운·인력·동맹 협력을 포괄하는 구조 개편 로드맵의 성격임
- ‘규제완화’와 ‘기술혁신’을 목표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혁신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략과 규제 완화, 해상풍력 규제 완화, 해양석유·가스 및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 확대 정책을 강화함
-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한 해양협력과 해상교통로의 안전·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 해양에너지, 광물, 수산·양식 등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과 역량강화를 주요 협력방향으로 제시

-
- 2017년에 해양협력 플랫폼인 블루파트너십 채택을 제안하였으며, 2022년 6월 UN 해양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블루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
 - 중국의 해양대외정책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등 해양안보의 중요도가 높으며, 2025년 5월에 「국가안보 백서(China’s National Security in the New Era)」를 발표하는 등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4.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 현황 및 진단

1)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 현황

-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은 국제개발협력과 다자·소다자, 양자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팬데믹 등 글로벌 이슈 대응, 혁신적 접근을 통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
-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의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특화 개발, 해운·해사 역량 강화, 해양 플라스틱 관리 및 해양환경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
- 한-아세안 연대구상, 극지연구 및 거버넌스 협력, 한-아프리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다자·소다자 해양협력사업을 추진

2)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 진단

- SWOT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조선·해운·항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및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해양대외전략의 구조가 분절적이고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

- 강화되고 있는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2026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인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새로운 글로벌 해양규범 형성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와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기회
- 기후위기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과 해양자원, 해양수산업의 부정적인 영향, 국제 해양질서를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는 해양대외전략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가능
- 향후 해양대외전략 수립 시 ‘글로벌 어젠다 발굴 및 규칙 설계자로서 역할 강화’, ‘해양 데이터 및 해양과학기술 협력 강화’, ‘해양 거버넌스 개편 및 해양협력의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5. 정책제언

1) 해양대외정책 설계·이행 기반 및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 전략 기획 및 실행정책 설계 기능 강화
-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통합 거버넌스 기능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정책성과 제고
- 글로벌, 지역해, 국가별 국제협력 플랫폼을 차별화하고, 플랫폼 간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

2) 신 국제 해양질서 주도를 위한 K-해양 이니셔티브

- 규칙·규범 설계자로서의 역할 및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확대
-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 형성 과정에서 ‘규범·규칙 설계자’로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손실-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전 지구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강화

- IMO, FAO, APEC,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등 다자·소다자 기구, 지역기구에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 글로벌 청색재정 플랫폼(Global Blue Finance Platform) 구축·운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 14번 목표는 전체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가장 적은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원조달 방식의 다각화와 재원규모 확대가 시급히 필요
-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IUU 어업,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 순환 해양경제 구축 등 해양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제시

3) 국제 표준 및 해양과학기술 선도

- 국내 해양수산 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
- 친환경 선박 기술 및 저탄소 항만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및 인프라 수출을 통해 국제 해운·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도
- 해양 디지털 트윈, 무탄소 선박, 자율운항선박, 선체부착생물 관리, IMO 배출권거래제 등 최근 국제표준화 또는 국제협약화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국내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해양대외정책 강화
- 해양과학기술 선도
- 해양과학 기술력은 해양강국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술협력을 통해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 해양관측, 수중 드론 및 수중 로봇 등 수중 기술, 디지털 트윈, 스마트 항만 및 블루 푸드테크 분야의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해양과학기술 국제공동개발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확산

4) 국제 해양질서에 대한 전략적·통합적 대응

- (가칭)국가해양대외전략의 수립·이행
 - 전환기 해양질서는 해양환경, 해양 바이오 및 수산업, 플라스틱 생산·재활용 및 대체플라스틱 개발, 해양자원 탐사·개발,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개별 협약은 파편적·분절적 대응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범부처가 함께 수립하는 ‘(가칭)국가해양대외전략’ 차원에서 대응 필요
- 국가해양안보협의회 구성·운영
 - 마약, 밀수, 해적행위 등 전통적 해양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해양오염, 해저케이블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위원회(NSC) 산하에 ‘국가해양안보협의회’를 구성·운영

5)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

-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BBNJ 협정, IMO 넷제로 규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글로벌 해양규범 강화는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임
 - 국제 해양질서 형성 과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율운항선박, AI 기술과 접목한 해양과학기술, 블루이코노미, 해양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법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주요 해양수산 기구의 진출 확대
 -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링

-
- 미래세대의 다자기구,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 인턴십 및 체재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6) 해양대외전략의 단계별 로드맵 수립·이행

- **【1단계】 해양대외전략 기반 재정립(2026~2027년)**
 - 해양대외전략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제4차 유엔해양총회 로드맵과 연동한 조직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가칭)국가해양대외전략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 AI 기술, 디지털 트윈, 수중 드론, 로봇 기술 등 수중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ODA 사업과 연계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해양대외전략의 기반을 재정립
- **【2단계】 해양대외전략 이행력 확대(2028~2030년)**
 -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 준비와 병행하여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BBNJ 협정 가이드라인 개발, 심해저 광물 개발규칙 제정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
 - ‘Global Blue Finance Platform’ 구축을 위한 어젠다 발굴,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
- **【3단계】 글로벌 3대 해양강국 실현(2031~2035년)**
 - 글로벌 3대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BBNJ 협정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엔 플라스틱협약 당사국총회 등 주요 다자협약의 당사국총회 유치 등을 추진
 - 수중 기술의 고도화, 육상 기술의 해양 적용, 해양-기후 기술 연계 등을 통한 신 해양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Building a Foundation for Maritime Foreign Strategy in Response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Su Jin Park · Jiyeon Choi · Hyeyeong Lee

1. Background and Purpose

- The ocean covers three-quarters of the Earth's surface, accounts for 97% of the planet's water, and comprises 99% of the habitable space for living organisms by volume.
- A sustainable ocean econom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enhanced resilience of coastal and ocean cities, as well as the achievement of carbon neutrality goals.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the total value that can be generated through the ocean economy is estimated at 3-6 trillion dollars annually.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ces increasing global supply chain and geopolitical risks. Concurrently, a 'nexus

phenomenon' is intensifying, where climate, environmental, trade, technological, and security issues increasingly influence one another.

- In response to the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this study aims to redefine the direction of maritime foreign strategy and derive specific implementation tasks. Through these efforts, the study seek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an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ponsible maritime power.

2.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and Ocean Use

1) Concept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refers to the totality of norms, institutions, practices, and power structur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stablished regarding how the ocean is used, conserved, and managed.
-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is not limited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Rather, it is a broad concept encompassing multilateral and regional norms governing marine resources, the marine environment, marine science, and the ocean economy, as well as maritime governance and sea power.

2)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Drivers and Key Characteristics

-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is driven by multiple factors: the restructuring of global supply chains and increasing geopolitical risks, the climate crisis and strengthening marine environmental norms, innovative shifts i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a multipolar system.
-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is driven by the convergence of several structural forces, including the restructuring of global supply chains and rising geopolitical risks, the climate crisis and strengthening marine environmental norms, innovative shifts in marine technology, and the crisis in maritime governance coupled with regionalization.
-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in this transitional perio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weakening of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principle, the emergence of plastic pollution as a global agenda, strengthened market-based measures for implementing IMO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and the growing importance of maritime security and the blue economy.

3. Maritime Foreign Policy Analysis: Key Nations

1) The European Union and Belgium

- To ensure 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among member states, the European Union's maritime foreign policy establishes common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provides a unified roadmap.
- The EU emphasizes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arine ecosystems, the strengthening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ollective responses to combat and preven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Through the EU Maritime Security Strategy, the EU seeks to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respect international rules and principles while advancing ocean sustainability and biodiversity protection.
- Belgium's maritime policy reflects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s a North Sea-centered maritime nation and its membership in the EU and NATO.
- The country actively pursues policies on the blue economy,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rine waste management.
- Rather than addressing maritime security threats solely as a military domain, Belgium adopts a comprehensive security approach that integrates economic security,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and cybersecurity considerations.

2)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strengthened America First policies while emphasizing both the rebuilding of the U.S.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and national maritime sovereignty and security.
- In April 2025, the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Maritime Action Plan (MAP), a comprehensive government-wide blueprint for reconstructing maritime capabilities and security infrastructure. The MAP serves as a restructuring roadmap encompassing shipbuilding, shipping, workforce development, and alliance cooperation.
- With de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s primary objectives, the administration emphasizes private sector innov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cience and technology. It has strengthened policies centered on fossil fuel energy strategies and deregulation, regulatory easing for offshore wind, and expansion of offshore oil and gas development as well as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 China has designated maritime cooperation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the safety and stability of sea lanes of communication as top priorities.
- Key areas of cooperation include technological collaboration and capacity building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resources such as ocean energy, minerals, and fisheries and aquaculture.

-
- In 2017, China proposed the adoption of the Blue Partnership, a maritime cooperation platform. In June 2022, the Sustainable Blue Partnership Network was officially launched at the UN Ocean Conference.
 - Maritime security, particularly sovereignty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holds a prominent position in China's maritime foreign policy. China has responded rapidly to changes in th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the white paper China's National Security in the New Era in May 2025.

4. Korea's Maritime Foreign Policy: Status and Assessment

1) Current Status of Korea's Maritime Foreign Policy

- Korea's maritime foreign policy is primarily implemented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min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s.
- The Third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1-2025), adopted in 2021, emphasizes responding to global issues such as pandemics, strengthening recipient countries' capacities through innovative approaches, and building partnerships with global civil society.
- The strategic direction for maritime and fisheri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cuses on climate change response, sustainable fisheries development and fishing

village-specific development, enhancement of shipping and maritime capabilities, and marine plastic and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 Korea is advancing multilateral and min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projects centered on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polar research and governance cooperation, Korea-Africa cooperation,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2) Assessment of Korea's Maritime Foreign Policy

- SWOT analysis demonstrates that Korea possesses world-clas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shipbuilding, shipping, and ports. However, the country faces challenges including a fragmented structure in maritime foreign strategy and an insufficient global professional workforce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 The emerging global maritime norms, including strengthene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th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greement scheduled to enter into force in January 2026, and the UN Plastics Treaty, present an opportunity for Korea to lead global issues and norm-setting processes.
- Conversely,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risis and marine pollution on oceans, marine resources, and maritime industries, as well as geopolitical risks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may pose threats to maritime foreign strategy.

- In developing future maritime foreign strategies,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strengthening Korea's role in identifying global agendas and shaping rules, enhancing cooperation in marine data and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forming maritime governance and establishing a strategic response framework for maritime cooperation.

5. Policy Recommendations

1) Building a Foundation for Maritime Foreign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s

- Strengthen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rategic planning and policy design func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The Ministry should strategically link its integrated governance functions in maritime and fisheries affairs to enhance policy coherence, continuity, and performance.
 - Korea should differenti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s at the global, regional seas, and national levels, and establish governance linkages between these platforms.

2) K-Ocean Initiative to Lead the New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 Strengthening Korea's role as a rule-maker and expanding its voi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undergoes transformation, Korea should strengthen its leadership role as a 'rule-setter and norm-shaper,' driving solutions to interconnected global challenges: climate crisis, biodiversity loss, and plastic pollution.
 - Korea should continue to enhance its voice by identifying agendas and proposing alternatives in multilateral and minilater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bod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Global Blue Finance Platform
 - Among the 17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4 receives the least funding, creating critical financing gaps that demand urgent action to diversify funding mechanisms and scale up resources.
 - Korea should develop financing strategies to address critical ocean challe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ocean acidification, marine biodiversity loss, IUU fishing, plastic and microplastic pollution,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and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ocean economy.

3) Lead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domestic ocean and fisheries technology standards
 - Korea should develop standards for eco-friendly vessel technology and low-carbon port technology, and lead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oals in the international shipping and port sectors through the export of related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
 - Korea should strengthen maritime foreign policy to elevate its domestic standards to international norms. Priority areas include ocean digital twins, zero-carbon vessels, autonomous ships, biofouling management, and the IMO emissions trading system, all of which are currently undergo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 convention development.
- Leading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 Given that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re fundamental indicators of sea power, strategic responses through technological cooperation are essential to expand international influence and secure future markets.
 - Korea should advance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marine observation, underwater technologies including drones and robots, digital twins, smart ports, and blue food technology, and disseminate these innovations through international joint R&D projects.

4) Strategic and Integrated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a National Maritime Foreign Strategy (tentative name)
 - The transitional maritime order has implications for diverse sectors, including the marine environment, marine biotechnology and fisheries, plastic production, recycling and alternative plastic development, marine resourc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Rather than fragmented and disconnected responses at the individual convention level, Korea needs a coordinated approach through a ‘National Maritime Foreign Strategy’ (tentative name) jointly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through a whole-of-government process.
-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National Maritime Security Council
 - To jointly address both 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threats such as narcotics trafficking, smuggling, and piracy,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climate change, marine pollution, and submarine cable security, Korea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a ‘National Maritime Security Council’ unde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5) Cultivating Global Maritime and Fisheries Professionals and Expanding Presenc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Cultivating global maritime and fisheries professionals**
 - The strengthening of global maritime norms, including the BBNJ Agreement, IMO net-zero regulations, and the UN Plastics Treaty, presents opportunities to advance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maritime industries.
 - To reflect Korea's positions in the 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and secure leadership in global standards, Korea must systematically cultivate professionals in autonomous vessel technology, AI-integrated marine technologies, blue economy, marine data analysis, and global maritime law.
- **Expanding Korea's presence in major maritime and fisheries organizations**
 - Korea should develop global professional training and mentoring programs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related maritime and fisheries institutions.
 - To facilitate young professional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maritime and fisheries organizations, including multilateral bodies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Korea should establish information-sharing platforms and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including internship opportunities, living allowances,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6)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a Phased Roadmap for Maritime Foreign Strategy

- [Phase 1] Re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Maritime Foreign Strategy (2026-2027)
 - This initial phase requires three key actions: defining policy objectives and strategic frameworks, expanding institutional capacity and securing budget allocations in alignment with the Fourth UN Ocean Conference roadmap, and establishing legal foundations for the National Maritime Foreign Strategy (tentative name) through amendments to relevant laws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jurisdiction.
 - Korea should reestablish the foundation for maritime foreign strategy by strengthening ODA projects and related linkage policies. These initiatives should focus on developing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to advance underwater technologies (AI, digital twins, underwater drones, and robotics) and promoting thei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 [Phase 2] Expanding Implementation Capacity for Maritime Foreign Strategy (2028-2030)
 - In parallel with preparations for hosting the Fourth UN Ocean Conference, Korea should actively develop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o address marine plastic pollution, develop BBNJ Agreement implementation guidelines, and establish regulations for deep seabed mineral development.
 - Korea should identify agendas for establishing the Global Blue

Finance Platform and strengthe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 [Phase 3] Realizing Korea's Position as a Top-Three Global Maritime Power (2031-2035)
 -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Korea as one of the world's top three sea powers, Korea should pursue hosting major multilateral convention Conferences of the Parties (COPs), including the BBNJ Agreement,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UN Plastics Treaty.
 - Korea should foster new maritime industries and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advancing underwater technologies, applying land-based technologies to the maritime sector, and integrating ocean-climate technologies.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해양은 지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으며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를 차지하고, 부피 기준으로 지구상 생물 서식공간의 99%를 차지한다. 해양은 인류에게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 등 자연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안지역의 재해 예방과 오염정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는 다양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해양은 인간활동으로 발생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흡수하는 지구의 최대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기후조절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관광의 80%가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해양관광 산업은 연간 약 13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어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5,7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최빈국 인구의 50% 이상에게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기능하고 있다.²⁾

2) UN SDG 홈페이지,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검색일: 2025.5.15.)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는 연안·해양도시의 발전과 회복력 증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해양경제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총가치는 연간 3조~6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해양생태계 보호 조치와 해양기반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통해 더욱 높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Konar & Ding(2020)에 따르면, 30년간 맹그로브 보존 및 복원,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생산 지원,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해상풍력 발전 확대 등 해양기반 인프라에 재원을 투자한다면 투자비용보다 최소 5배 이상의 혜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약 2조~3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2050년까지 8조 2천억~22조 8천 억 달러의 순 혜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⁴⁾

이와 같이 해양은 인간의 삶과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해수온 상승 및 해양산성화, 연안침식 등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중금속, 위험·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등 다양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생물다양성 손실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해양의 평균 pH는 8.1로 해양산성화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30% 악화되었으며, 매년 약 500만~1,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등의 제거 비용과 어업 등 해양산업의 재정손실 등으로 연간 130억 달러의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⁵⁾ 이에 국제사회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오염 예방 및 저감,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구축, 해양과학기술 및

3) UNCTAD, Community News(검색일: 2025.5.30.), 한편, 2023년에 전 세계 해양경제는 2.2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서비스로 1.3조 달러, 상품교역으로 9천억 달러를 차지하였음. 이는 세계 무역의 약 7%에 해당하는 것임. UNCTAD(검색일: 2025.7.18.)

4) Konar & Ding(2020), p. 2; Johansen & Vestvik(2020), p. 5.

5) UN SDG 홈페이지,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검색일: 2025.5.15.)

해양기반 인프라 강화 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14번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가 다양한 요인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지정학적·경제적 리스크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파리협정 및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와 같이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에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으며, NATO 등 전통적 동맹에 대한 방위비 부담금 인상 요구, 전방위적 고율관세 부과를 통한 협상력 극대화, 협상을 통한 조건부 관세 인하와 같이 ‘거래적(block-for-block)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⁶⁾ 이에 강대국과 중견국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응하여 상호견제·협력하면서도 세력균형을 이루는 다극체제와 가치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와 큰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국제 해양질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은 자유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였으나, 2018년 이후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이익 우선’의 대외전략이 더욱 강화되었고, 각국은 경쟁적으로 핵심 기술·산업 육성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견제강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증폭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적·환경적·안보적 측면에서 동시다발적 복합위기에 직면하게

6)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제약 등 전략산업에 25~50% 추가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억제 및 미국 내 생산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 간 양자협상 및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등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조건부 관세인하 또는 면제조치를 병행하고 있음. Wikipedia, Tariffs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검색일: 2025.9.30.); Passportglobal, U.S. Tariff Rates by country(검색일: 2025.8.1.)

되었다. 국제질서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국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위축 등 기존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재편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즉 미국의 정책은 동맹의 공동방위 투자 의무 강화 등 거래중심적 동맹관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외교-해양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남중국해,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 주요 해양국 간 해양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에 대응한 해양대외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UNCTAD(2021)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량의 약 80%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상무역의 약 60%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양갈등과 분쟁이 국제사회 전체와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⁹⁾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3%, 28.6%에 달할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높고,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협력,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외전략도 경제·안보·과학기술·환경 분야까지 확장된 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2023년 BBNJ 협정의 채택¹⁰⁾, 2025년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

7) 1992년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는 15배 이상이었으나, 2022년에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미국과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었음. 즉 1992년에는 미국의 GDP가 6조 5,200억 달러, 일본이 3조 9,800억 달러, 중국이 4,285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가 15배 이상이었으나, 2024년에는 미국의 GDP가 29조 1,800억 달러, 중국이 18조 7,400억 달러, 일본이 4조 300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급속하게 축소되었음. World Bank(검색일: 2025.7.2.)

8) UNCTAD(2021),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1(검색일: 2025.4.20.), p. 3, p. 111.

9) UNCTAD는 2대 운하(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5개 해협(바벨만데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터키 해협, 지브롤터 해협, 말라카 해협),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8대 초크 포인트로 구분하였음. UNCTAD(2024),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4, pp. 4-5.

10) BBNJ 협정의 정식명칭은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이며, 2023년 6월에 채택되었고 2025년 9월에 60개국 비준이라는 발효요건을

상을 위한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2025년의 IMO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 글로벌 해양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미국, EU 등의 국가들은 해양안보, 해양경제,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국가해양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요국은 기후위기·환경·노동·정보의 글로벌 논의와 국제규범 강화에 대응하여 ‘해양영역 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강화, 해저케이블¹¹⁾ 관리·통제권 강화, 해운·조선업 등 해양경제 활성화, 디지털 해양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2024년에 상원의원 당시 작성한 ‘미국 국가해양전략 수립 의회지침(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Reversing the Decline of America’s Maritime Power)’을 통해 미국 해양정책의 큰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즉, ① 해양변영 달성, ② 해양안보 보장, ③ 동맹과 협력 모색, ④ 미국의 가치 회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보편관세 및 대중제재 강화, 친환경 정책 폐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및 빅테크산업 활성화 등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해양정책 측면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항만 현대화, 해상물류 디지털화, 첨단 조선기술 개발 및 중소 조선소 현대화, 해양바이오 등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의 공통 점은 산업과 기술을 먼저 확보하거나 기존에 확보한 기술과 신기술을 융합하여 초격차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농업사회에서 부의 확산 속도는 매우 느렸으나,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과 기술집약적 신제품의 소비는 경

충족하였음. 2026년 1월 17일에 발효될 예정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공해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3244&bbsSeq=10&menuSeq=971>(검색일: 2025.9.22.)

11) 전세계 해저케이블은 597개의 케이블 시스템과 1,712개 상륙지점(landing)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TeleGeography, Submarine Cable Map 2025(검색일: 2025.8.2.) 참조

제발전 속도를 증가시켰고, 선발 산업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먼저 시작해서 오늘날 선진국으로 발전했다.¹²⁾

전통적으로 국가력은 전통적인 군사력, 경제력 등 경성권력(hard power)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연성권력(soft power)까지 두루 강한 상태를 선진 강국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¹³⁾¹⁴⁾ 국토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생산요소나 소재·부품·장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쟁력 높은 상품을 더 잘 만들어 더 비싼 가격에 수출함으로써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것이다. 이를 ‘초격차 전략’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국가전략으로서 초격차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네덜란드가 14~16세기 북해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이자 수출 품목이었던 ‘청어잡이’를 하기 위해 가공·장기 항행 기술력을 기초로 조선·해운 산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전략과 2019년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을 시작하며 미래 칩 설계를 위한 투자를 하고 방대한 특허를 보유한 대만의 TSMC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¹⁵⁾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무역통상-기술-안보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넥서스(Nexus)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경제에서 무역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¹⁶⁾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진 축

12) 김태유 외(2024), 앞의 책, pp. 75-85.

13) 김태유 외(2024), 앞의 책, pp. 99.

14)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는 1990년 저서 『Bound to Lead』에서 미국 국력의 쇠퇴에 대한 당시의 통념에 도전하는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만들었음. 즉 소프트 파워는 물리적 강요나 경제적 유도가 아닌 매력과 설득을 통해 다른 국가나 사회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의미함. 여기서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연성권력이라고 불리며, 문화, 교육, 예술, 정치적 가치 등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정책을 설득과 화유로 관철하는 힘을 의미함. Nye(2017), Soft power: the origins and political progress of a concept(검색일: 2025.7.2.); 김태유 외(2024), 앞의 책, p. 99.

15) 김태유 외(2024), 앞의 책, pp. 124-127.

적된 노하우와 경험, 기술력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해양대외전략 역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높은 해양대외전략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필요성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해적과 무장강도 사건은 감소하였으나, 항행 안전의 확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어업, 해양오염에 대한 위협은 여전하고,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비롯하여 마약·밀수·해적행위 등 해양범죄,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우리는 다층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해양질서와 해양거버넌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해양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대외전략(Maritime Foreign Strategy)’을 해양외교, 해양규범, 해양기술 협력을 활용하여 국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포괄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정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외교정책(Foreign Policy)이란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에 대해 행하는 모든 공식적인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¹⁶⁾ 외교전략은 국방, 안보,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양대외전략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16)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총액이 GDP 대비 약 87.9%에 해당함. Trading Economics, South Korea-Trade,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trade-percent-of-gdp-wb-data.html>(검색일: 2025.4.15.)

17) 이수진·이신화(2019), p. 42.

다.¹⁸⁾ 외교전략과 해양대외전략은 ‘국익(national interests)’를 최우선 가치에 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해양대외전략은 ‘해양’이라는 공간과 ‘해양수산’이라는 범주로 특화된 정책으로서 해양자원·해양안보·해양경제·해양환경에 관한 대외전략으로 목적성과 적용성이 차별화된다. 또한 국제법과 다자주의를 통한 질서유지를 지향한다는 점은 외교전략과 해양대외전략이 공통되나, 해양대외전략은 유엔해양법협약, BBNJ 협정, IMO협약 등 글로벌 해양규범의 준수와 이행에 초점을 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 해양수산 행정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의 전략 공간화와 독자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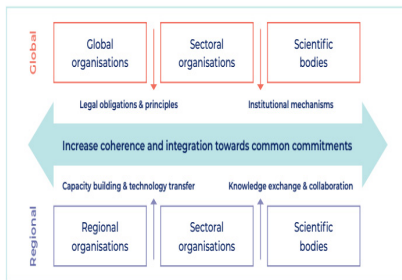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체제 하에서는 기존 국가와 정부 간 국제기구 중심의 거버넌스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등의 이슈가 복합적·다층적으로 연계되면서 전통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비정부기구(NGOs), 민간기업, 시민단체, 토착민 및 공동체(IPLC: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등 비국가주체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해진 계기가 되었다. 즉 기존 국가중심주의 거버넌스에서 탈피하여 비정부기구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IPLC, 일반시민 등 비국가 주체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핵심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대외전략도 이러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변화에 맞춰 행위 주체별 역할 재정립과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세계화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제도와 국제규범을 수용했으나 OECD 가입에 따른 부작용이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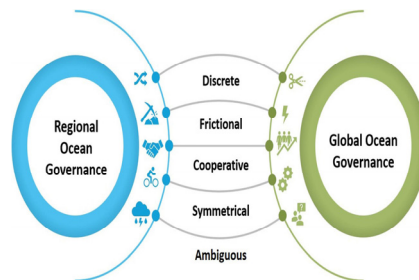
18) 위키백과, 외교정책(검색일: 2025.6.1.)

응책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자본시장,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는 등 후발 개도국으로서 경제 보호장치를 스스로 철폐한 것으로 IMF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¹⁹⁾ 그러한 점에서 경제·안보·환경 이슈를 넘어 미·중 전략경쟁 격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 및 환경위기와 함께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협약과 같은 글로벌 해양규제의 강화 등 다층적 복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대외전략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1〉 다자간·지역기구의 협력과 조정



자료: Gjerdeet et al.(2018)



자료: Adewumi(2021)

3. 연구 목적

기후위기 및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IUU, 해양안보 등 다양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주요국은 국내적으로는 해양과학기술 개발과 해양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해양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해양 이슈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EU 등의 해양 관련 대외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해양 대외전략의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

19) 김태유 외(2024), 앞의 책, pp. 108-109.

해양질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해양대외전략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세부 추진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실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14번 목표인 ‘대양,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²⁰⁾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방법론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국제 해양질서의 개념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양은 수산자원, 석유·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와 광물자원 등 전략적 자원의 주요 공급처로서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원의 존재는 각국의 경제적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촉진하여 해양을 둘러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벨기에 등의 블루 이코노미,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해양안보와 관련된 해양대외정책과 관련 법제도,

20) 지속가능발전포털(검색일: 2023.5.10.)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블루 이코노미, 해양과 학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북극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BBNJ 협정 및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상 등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해양대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SWOT 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대외정책을 진단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국제 해양질서 대응 협력사업, 정책과제, 기술개발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아프리카 협력, 극지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 해양협력, 한·EU 해양협력, 한·중 해양협력, 한·일 해양협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에 대한 SWOT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해양대외 전략을 진단하였다. 제3절에서는 해양대외전략의 기반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대외전략의 실현가능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사항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고, 정책제언과 후속연구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자료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통해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와 해양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국의 해양 관련 대외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해양대외정책 평가 및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SWOT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및 비교정책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 등의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법률과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통계 및 국내외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 EU, 중국, 벨기에 등 주요국의 해양 관련 대외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2) SWOT 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

기후위기,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등 국제사회 공동이 해결해야 할 해양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규칙 기반 다자질서와 미국우선주의,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와 함께 공급망, 기술, 금융이 가치동맹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다층적·다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 해양질서 변화에 대응한 대외전략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해양수산정책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양법 및 국제법, 해양과학기술, 해양안보, 외교정책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통해 국제 해양질서 전환에 따른 주요 해양 이슈, 우리나라 정책의 한계요인, 해양대외전략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전문가 워크숍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에 대응한 해양대외전략의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 관련 부처 담당자와 협의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그림 1-2>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수행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2〉 연구 수행체계



자료 :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아세안 지역, 인도·태평양, 아세안 등 지역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대외환경과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에 관한 연구와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협약 등의 새로운 국제해양 규범에 대응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지역협력 및 대외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아세안 대외협력 전략, 글로벌 통상환경,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뤄졌다. 최인아(2025)는 아세안 대외협력 전략

의 기조와 대화 상대국의 관리전략, 향후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강구상·이천기·김혁중(2025)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와 통상, 에너지 및 환경 등 분야별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정란(2023)은 2023년 글로벌 복합 통상 위기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오일석 외(2022)와 최인아 외(2023), 곽성일 외(2022), 반길주(2021)는 신흥안보 위협,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미국의 대중국경제 등 국제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한-아세안 협력 또는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European Parliament(2019)는 EU의 글로벌 해양정책을 분석하고, 해양안보, 해양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청색경제를 위한 해양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Zhang, Mao, & Zhang(2023)은 비전통적 해양 문제가 증가하는 국제적 상황 변화에 대응한 중국의 해양전략을 분석하였다. The White House in USA(2024)는 미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분석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편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상, 신통상규범 확대 등 국제 규범 강화 움직임을 분석하고, 향후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해양전략, 각국의 대응, 민관 파트너십 강화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박혜진 외(2024)는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 분야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Rachel Tiller & Elizabeth Mendenhall(2023)과 Wang(2023), Denta(2022)는 BBNJ 협정과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상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민-관 파트너십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가장 관련이 높은 연구인 최원석 외(2023)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의 부상, 주요국의 공급망 및 과학기술 외교정책 등 경제안보 정책이 초래할 위험과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

였다. 또한 Birahayu et al.(2023)은 디지털 시대 해양 디지털 외교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정현욱 외(2023)는 국제질서 변화와 아태 지역의 해양 현안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해양전략을 비교한 후 국가해양전략의 기본구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1-1〉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 사례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 • 연구자(년도): 최인아 외(2025) • 연구목적: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실증분석 및 새로운 제도 도입방안 마련	• 계량분석에 의한 실증분석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 적용	• 아세안의 대외협력 기초 •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 • 한-아세안 협력 방향
2	• 과제명: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연구자(년도): 강구상·이천기·김혁중(2025) • 연구목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야별 행정조치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문헌연구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야별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쟁점(통상, 에너지 및 환경, 기타) •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3	• 과제명: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이슈 • 연구자(년도): 조정란(2023) • 연구목적: 글로벌 복합 통상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제시	• 문헌연구	• 2023년 7대 글로벌 통상 이슈 • 미·중 갈등의 심화 •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이슈 •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4	• 과제명: 신냉전기 구조(structure)-행위(action) 연계 역학 고찰 :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 추이와 대중국경제 전개양상 • 연구자(년도): 반길주(2021) • 연구목적: 신냉전기 미국의 해양전략 양상 및 특징을 분석하고, 해양안보적 함의를 고찰	• 문헌연구 • 구조-행위 반응 모델 분석	• 국제체제의 속성과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 추이 • 신냉전 시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 전개 양상과 특징 • 학문적·정책적 함의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5	• 과제명: Ocean Governance and Blue Growth • 연구자(년도): European Parliament(2019) • 연구목적: EU의 해양안보, 해양오염,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어업 등 해양거버넌스 및 정책 분석	• 문헌연구	• 해양의 혜택 • 해양에 대한 개발압력 • EU와 글로벌 정책 • EU의 해양환경보호 • 지속가능한 청색경제
6	• 과제명: China's maritime strategy in the new vision • 연구자(년도): Zhang, Mao, & Zhang(2023) • 연구목적: 비전통적 해양 문제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양전략 구현 기회와 과제 분석	• 문헌연구	• 글로벌 해상법 • 해양경제 개발 및 생태계 보호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및 중국의 해양전략
7	• 과제명: Maritime Digital Diplomacy: Legal Revitalization and Reform of Modern and Solutive Diplomacy • 연구자(년도): Birahayu et al. (2023) • 연구목적: 디지털 시대 해양 디지털 외교의 특징과 인도네시아 해양 디지털 외교의 전략 제시	• 문헌연구	• 디지털 해양외교와 인도네시아의 도전 • 주요국과 비교·분석 • 디지털 해양외교의 활성화 및 법적 개혁 방향
8	• 과제명: National Strategy for a Sustainable Ocean Economy • 연구자(년도): The White House in USA(2024) • 연구목적: 미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한 비전과 부문별 전략목표 제시	• 문헌연구	• 미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비전 • 전략적 목표 및 교차적 관행 •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보호, 복원, 유지 • 인간과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지원 •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발전
9	• 과제명: And so it begins- The adoption of th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reaty • 연구자(년도): Rachel Tiller, Elizabeth Mendenhall(2023) • 연구목적: BBNJ 협정 채택 당시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사항 분석	• 문헌연구	• BBNJ 협정 채택 당시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사항 분석 • BBNJ 협정 채택 당시 각국 대표단의 발언 분석 • 러시아의 BBNJ 협정 미참여에 따른 영향 분석

자료: 선행연구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구조화되고,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협약,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등 글로벌 규범을 둘러싼 미국, 중국, 유럽, 중견국(middle powers)의 리더십 경쟁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기후안보, 해양안보, 식량안보, 사이버 안보 등 안보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무인체계, 디지털 트윈, AI 기반 해양데이터 통합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해양과학기술, 해양경제, 해양안보, 다자간·지역간·양자간 협력 등 해양대외전략의 목표와 이행체계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BBNJ 협정 및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협상 등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회복과 규범중심 해양질서가 강조되고 있다.

선행 연구는 주로 지역협력의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나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협약 등 개별 규범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였다. 반면, 본 연구는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지정학적 복합 리스크 증가와 해양거버넌스 체계 변화, 국제규범 강화 움직임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해양 관련 대외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의 추진방향과 이행체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국내외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 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연구 목표	• (목표) 경제안보, 통상전략 변화 등을 분석하고 특정 지역의 협력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개별 국제규범에 대응한 개선방안을 제시	• 최인아 외(2025) • 강구상·이천기·김혁중(2025) • 조정란(2023) • 최원석 외(2023) • 오일석 외(2022)	•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규범 변화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이슈를 도출 •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와 해양 이슈, 주요국의 해양 관련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양대외전략의 개선방안을 제시
연구 대상 및 범위	• (대상) 안보 및 통상환경 변화, 개별 국제규범 동향 및 전략을 분석하고 협력방향을 제시 • (범위) 환경, 경제, 안보, 지역협력 등에 대해 분석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전형진 외(2023) • 최인아 외(2023) • 광성일 외(2022) • Australian Government (2022) • Davenport(2018) • Denta(2022)	• 국제규범의 재정적 수단 및 과학기술과 연계 강화라는 국제 해양질서의 특징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 • 해양자원 및 해양경제, 기후 변화 및 해양환경, 글로벌 협력 및 이행체계 강화 등의 해양 이슈를 분석 • 미국, EU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벨기에 등 해양기술 강소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비교 분석, CGE 분석, 전문가 자문	• 박혜진 외(2024) • 최인아 외(2023) • 정현욱 외(2023) • Australian Government (2022) • 반길주(2021)	• 기존 연구와 같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법제도 및 정책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하되, 정부 부처와의 정책협의회, 심층 인터뷰 등을 토대로 연구 수행

자료: 선행연구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02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과 해양이용

제1절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1. 국제 해양질서의 개요

1) 국제 해양질서의 개념

‘국제 해양질서(International Maritime Order)’란 국제사회가 바다를 어떻게 이용·보존·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형성한 규범·제도·관행·권력구조의 총체를 의미한다.²¹⁾ 한편, ‘국제규범(international norm)’이란 고대 로마에서 형성된 민족간 공통규범의 개념으로 라틴어인 ‘만민법(jus gentium)’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근대 국제법질서의 사상적 기원이 되고 있다.²²⁾ 국제법의 아버지인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국제법을 자연법과 의사법의 결합체로 이해하였으며,²³⁾ 「자유해론」(Mare Liberum)과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를

21)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란 규칙, 제도, 법 및 규범에서 파생되고 유지되는 관계 및 행동의 패턴으로 정의할 수 있음. Wikipedia, International order(검색일: 2025.4.23.)

22) 장준호(2006), p. 38.

23) 오병선(2005), p. 24.

통해 자연법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로티우스는 해양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공동사용을 허용하였을 뿐이라고 하여 국제 해양질서의 주요 법원칙인 ‘공해자유의 원칙’에 의 확립에 초석을 제공하였다.²⁴⁾ 이러한 공해자유의 원칙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다수 반영되었는데, 우선 제89조는 공해에 대한 주권 주장을 무효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공해에서의 항행의 권리는 협약 제90조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그로티우스의 법이론은 국제 해양질서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²⁵⁾

국제 해양질서는 단순히 유엔해양법협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자원·해양환경·해양과학·해양경제를 규율하고 있는 다자적·지역적 규범, 해양거버넌스, 해양력(sea power) 등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국제 해양질서의 근간은 ‘바다의 헌법(a constitution for the oceans)’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이며,²⁶⁾ IMO에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 관련 다양한 협약과 FAO, 유엔환경계획(UNEP) 하의 다자협약과 소다자·지역 협정도 국제 해양질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이후 신냉전 시대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시도,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해상교통로 공격, 회색지대 활동(grey zone activities), 해저케이블 손상 또는 교란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국제 해양질서의 해양안보성이 강화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의 해양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국제 해양질서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있으며, 국제 해

24) 김석현(2025), p. 8, pp. 14-15.

25) 오시진(2025), p. 93.

26) 유엔해양법협약은 1973년에 문안협상을 시작하여 1982년에 마무리된 14년 이상 진행된 제3차 해양법 회의의 결실이며, 전 세계 해양에 대한 포괄적인 법과 질서를 정립하여 해양 및 해양자원의 모든 이용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임. 정인섭(2022), 신국제법 강의-이론과 사례, 박영사, p. 652; UN, Oceans & Law of the Sea United Nations(검색일: 2025.4.3.)

양질서는 해양관할권, 해상경계 획정, 연안국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 해양 환경 보호, 해상안전 및 사고 예방, 분쟁해결제도 등 해양의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2) 국제 해양질서의 적용범위

국제 해양질서의 공간적·내용적 범위는 1차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토대로 내수 및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영역에 대해 적용된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은 전체 320개 조항과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공간의 모든 측면, 즉 해양경계 획정, 해양환경 관리, 해양과학조사, 경제 및 상업 활동, 해양과학기술의 이전, 해양문제와 관련된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해양질서의 적용범위이다.²⁷⁾ 이 때 ‘해양영역’은 바다, 대양 또는 기타 향해 가능한 수로 위, 아래, 관련, 인접 또는 경계에 있는 모든 지역과 사물을 포함하며, 모든 해양 관련 활동, 기반시설, 사람, 화물, 선박 및 기타 운송 수단을 포함한다.²⁸⁾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는 국제 해양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해양에서의 위협을 예방·억제·대응함으로써 국제 해양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조건이지만, 국제 해양질서 그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국제 해양질서는 BBNJ 협정과 같이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는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가속화, 해적행위, 마약·밀수와 같은 전통적인 초국가적 범죄의 증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AI 및 디지털 기술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도전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²⁹⁾ 한편, IMO는 국제해운의 안전, 보안, 환경과 관

27) UN, Oceans & Law of the Sea United Nations(검색일: 2025.4.3.)

28) CSCI(검색일: 2025.5.3.)

29) CIMSEC(2019.7.1.)(검색일: 2025.7.10.)

련한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해운산업 규제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IMO의 다양한 협약과 조치는 선박의 설계·건조, 장비 개발, 해양교육·훈련, 해양보안, 해상교통관리, 해양인프라 개발 등을 규율한다.³⁰⁾ 그 밖에 FAO의 수산 관련 규제, WTO의 수산보조금 협정, BBNJ 협정, 유엔 환경계획(UNEP) 체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도 국제 해양질서의 내용적 적용범위를 구성한다.

2.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요인과 특징

1)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요인 및 환경

오늘날 해양은 국가 간 협력과 갈등, 경제적 경쟁과 환경 안보가 중층적으로 교차하는 지정학적 공간으로서 그 위상(位相)이 빠르게 격상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해양을 국제질서의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있다. 이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까지 확대된 구조적 변화와, 최근 공급망 불안정성의 심화, 기후위기 및 미·중 패권 경쟁 등 각종 글로벌 복합위기가 해양영역에서 현실화되는 지정학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이다. 특히 그린스판 UNCTAD 사무총장은 현재의 해양과 해상운송 체제를 ‘미지의 수역(uncharted waters)’으로 규정하며, “기술적·환경적·지경학적 전환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이들이 상호 융합되는 과정에서 해양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³¹⁾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2023년 「새로운 평화 의제」(A New

30) IMO(검색일: 2025.4.16.)

31) UNCTAD(2025a), p. xii.

Agenda for Peace)를 통해 심화되는 지정학적 경쟁(geostrategic competition)과 지경학적 분절(geoeconomic fragmentation)을 경고하며, 파편화된 국제사회의 재결속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³²⁾ 그는 냉전 이후의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권력 역학의 파편화와 새로운 경쟁 구도의 형성이 핵심 도전 과제로 부상했다고 진단한다.³³⁾ 또한 기후위기, 불평등, 기술 악용 등 상호 연결된 초국경적 위협들은 단일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임을 강조한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역시 단일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 어렵고, 복수의 구조적 전환 동인이 결합되며 전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규범 강화, 해양기술의 혁신적 전환, 그리고 해양 거버넌스 위기와 지역화를 중심으로 국제 해양질서 전환의 핵심 동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는 세계화의 확산 속도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 변화와 함께 탈세계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각국은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분업 구조보다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전면적인 교역 붕괴나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산업과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는 불균형적 탈세계화의 양상을 띤다.³⁵⁾

이러한 거시적 전환은 무역과 투자 지표의 움직임이 점차 분리되는 현상

32) UN(2023), p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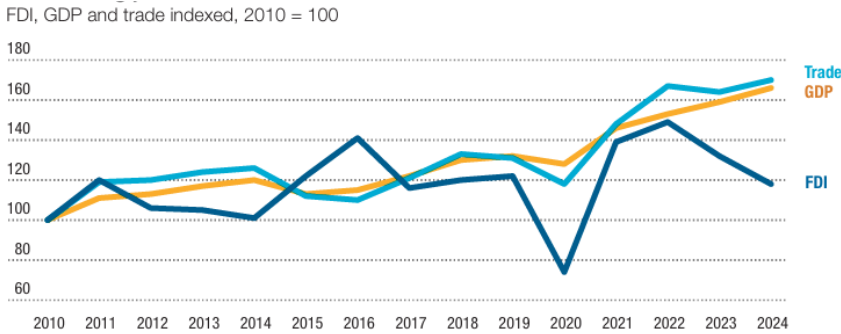
33) *Ibid.*

34) *Ibid.*, pp. 4-7.

35) WEF(2023, 1.17)에 따르면, 탈세계화는 전 세계에서 균일하게 일어나지는 않음. 일자리 온쇼어링은 주로 아시아에서 활발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고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화 추세가 남아있기도 함 (검색일: 2025.10.15).

에서 확인된다. <그림 2-1>과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견인해 온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2010년대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2020년대 들어 그 흐름은 더욱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반면 글로벌 GDP와 무역 지표는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실물 교역의 확대와 자본 이동 간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신규 해외 투자는 억제하는 한편, 기존 공급망을 활용한 교역은 유지·조정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1> 글로벌 GDP·무역과 FDI 간의 디커플링 추세 (2010~2024)



자료: UNCTAD(2025b),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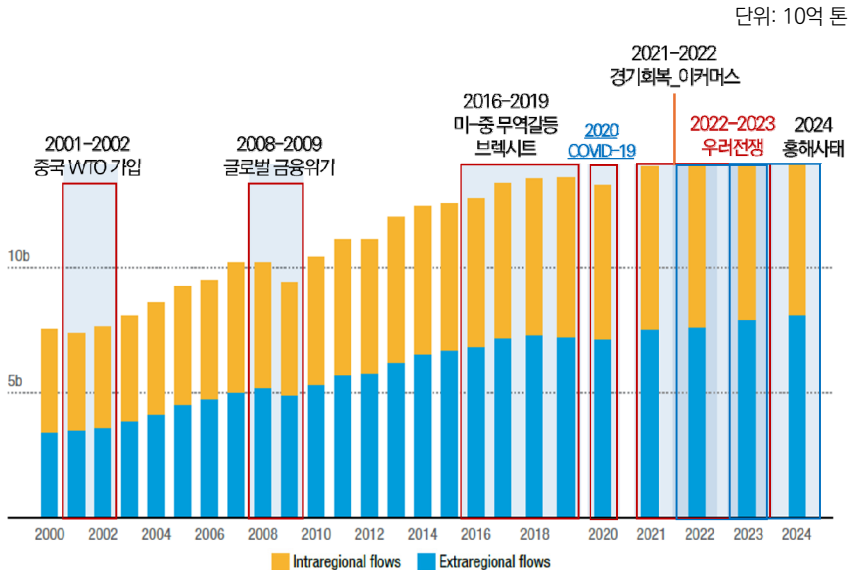
해상물류는 글로벌 무역 물동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국제 공급망의 핵심 기반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운영된다.³⁶⁾ 이로 인해 특정 항만이나 항로에서 발생한 병목은 단일 지역을 넘어 글로벌 물류망 전반으로 파급되며, 공급망 안정성은 물류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 변화가 중첩되면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

36) UNCTAD(2024)(검색일: 2025.10.15.)

하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취약해역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해역에서의 교란은 항로 우회와 운송 거리 증가,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운송 효율성 저하를 넘어 식량·에너지 수급 등 거시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으며, 해상운송로의 안전 확보는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³⁷⁾

〈그림 2-2〉 역내 및 역외 해상 물동량(2000-2024)



자료: UNCTAD(2025a), p. 6.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화는 실제 글로벌 해상무역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2〉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무역은 장기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사건을 계기로 반복적인 교란을 경험해 왔다. 최근 교역량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항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해상교통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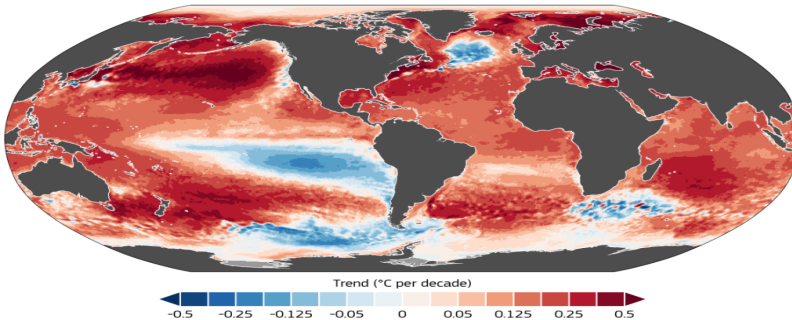
37) Ibid.

대한 충격은 구조적 리스크로 누적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해산물류 체계가 상시적인 외생 충격에 노출된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규범 강화

최근 글로벌 해양환경은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가속화되며 기존 국제 해양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 2025)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 지구 해수면 상승률은 연평균 4.7mm로, 1990년대 초반의 연평균 2.1mm 수준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³⁸⁾

〈그림 2-3〉 전 지구 해양의 평균 표층 수온 변화 (1993-2023)



자료: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2025)(검색일: 2025. 11.5)

또한 극지방을 제외한 전 지구 해양의 평균 표층 수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약 0.9°C 상승하였으며, 최근 40년 동안에만 약 0.6°C가 상승하는 등 해양 온난화의 가속화가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다.³⁹⁾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해양을 기후 리스크가 응집된 ‘위기의 공간’인 동시에, 위기 대응의 해법을 제공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재정의하며, 새로운

38) WMO(2025), p. 7.

39)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2025)(검색일: 2025. 11.5)

질서 형성의 이중적 기제가 된다. 해양 관측·모니터링 역량의 고도화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과학적 신뢰성을 제공한다. 이는 감축과 적응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 되어, 국제 협력의 범위를 단순 기술 공유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해상교통로와 항만 인프라, 연안·섬 지역의 기후 탄력성 문제는, 해양환경 이슈를 국가의 경제 안보와 직결된 ‘기후-경제 안보 넥서스(Climate-Economy Security Nexus)’의 핵심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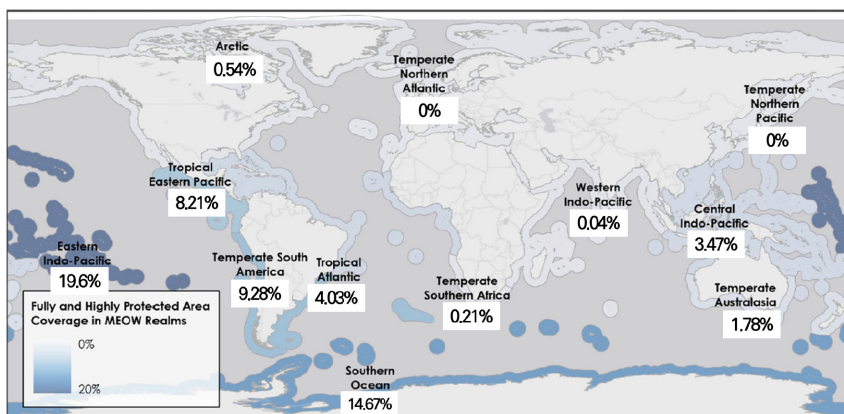
제3차 유엔해양총회(UNOC3: The third 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에서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을 상호 연계된 ‘지구적 삼중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라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거버넌스의 혁신과 전환을 요구하였다.⁴¹⁾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은 해양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한 국제 규범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양보호구역(MPA)의 확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해양오염 저감과 탈탄소화에 대한 요구는 해양이용의 관리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기존의 개발·이용 중심의 질서를 지속가능한 해양질서로 재편하는 핵심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30×30 목표와 2023년 채택된 BBNJ 협정을 계기로 공해를 포함한 해양환경 규범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Pike et al.(2024, p. 9)에 따르면, 지구 해양의 61%를 차지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BNJ: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보

40) Rothe et al.(2025)은 기후-안보 넥서스를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생태적 힘이 얽힌 복합적인 구성(Composition)으로 이해함. 이 관점에 따르면, 해양 경제와 공급망은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기후위기의 충격이 경제 안보로 전이되는 핵심 경로이자, 국제 협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물질적 토대로 해석될 수 있음. Rothe et al.(2025), p. 5.

41) 최지연 외(2025), p. 30.

호 비율은 1%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보호의 공백’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해양 거버넌스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공해상에 실효적인 국제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2-4〉 30×30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 현황



자료: Pike et al.(2024), p. 9.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규제하기 위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협상을 가속화하여 해양오염 대응을 새로운 규범 영역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3년간 진행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정부간협상위원회 논의는 플라스틱의 생산, 디자인 개선, 폐기물 관리, 해양 유입 차단 및 기존 오염의 처리, 재활용 및 폐기 등을 포괄함으로써 해양환경규범을 육상-해양의 통합오염 관리체계로 확장시키고 있다.

더불어 국제사회는 WTO 수산보조금 협정,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탈탄소화 규범 등 해양환경 보호 관점에서 다자규범을 상호 연계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해양 플라스틱의 감축, 심해 채굴

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해양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규범이 무역·산업·에너지 정책과 긴밀히 연동되는 양상을 강화하고 있다.

(3) 해양과학기술 혁신적 전환

해양과학기술의 전환은 국제 해양질서를 과학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이끄는 핵심 동인이다. AI기술, 메타버스·XR(Extended Reality)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IoT: Internet of Things), 블록체인 등 해양과학기술은 해양안전·환경·물류·행정 전반에서 규범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해양 규범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대한다.

AI기술과 자동화기술의 확산은 해양분야의 의사결정을 경험적 판단에서 데이터 분석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전환시키며, 해양활동 전반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정밀도를 높인다. 메타버스와 XR기술은 해양인력 양성과 안전 훈련, 원격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해양활동이 지니는 공간적·물리적 제약을 완화한다. IoT와 연결성의 향상은 해양자산과 활동의 상시적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항만·물류·해상교통·해양환경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 방식의 실시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급망 관리와 행정 절차에서 데이터의 추적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해양 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신뢰의 기반을 제공한다.⁴²⁾ 이러한 기술들은 공통적으로 해양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 활용 역량을 확대하며 하나의 전환 흐름으로 수렴된다. 그 결과 해양 데이터는 해양 활동의 상태와 변화를 가시화하고, 해양 규범과 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기능한다.

42) The Economist Group(2023), pp. 24-26.

〈표 2-1〉 4대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적 전환 효과

구분	해양 적용 분야	혁신적 전환 효과
AI	• 선박 운항 최적화, 항로·연료 효율 개선, 안전 관리, 자율·원격 선박, 생성형 AI 기반 행정·운영 자동화	• 해양 활동의 의사결정 자동화·고도화를 통해 경험 기반 운용에서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
메타버스 XR	• 선원 교육·훈련, 위험상황 시뮬레이션, 원격 유지보수, 가상 작업 환경 구현	• 물리적 현장 의존 교육·운영에서 비대면·사전 예측형 역량 구축 체계로 전환
IoT & 연결성	• 선박·항만·화물 센서, 실시간 모니터링, LEO 위성·5G 기반 해상 연결성 강화	• 해양 자산을 고립된 물리 객체에서 연결된 실시간 감시·통제 시스템으로 전환
블록체인	• 물류·통관 디지털 문서, 공급망 추적, 수산물 원산지·이력 관리	• 투명·분산형 데이터 신뢰 인프라로 전환

자료: The Economist Group(2023), pp. 24-26.

OECD는 디지털 기술의 통합이 해양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운영과 정책 설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한다고 평가한다.⁴³⁾ 해운·수산·해양에너지 분야에서는 운영 효율성과 안전 관리의 정밀성이 개선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불법 조업 대응, 연안 재해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는 해양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이 해양 거버넌스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⁴⁾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과학·기술·혁신(STI) 체계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과 결합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⁴⁵⁾ 인공지능, 로봇공학, 빅데이터와 같은 범용기술의 확산은 해양생태계와 그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는 동시에, 해양산업의 운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43) OECD(2021), p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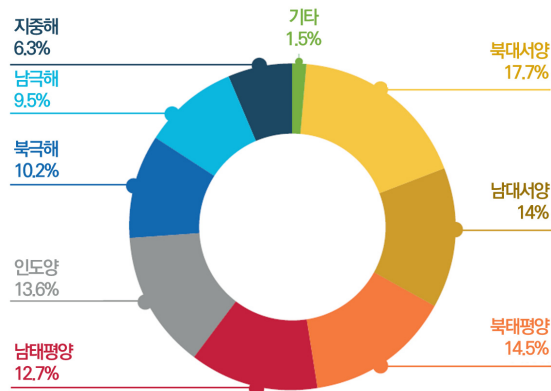
44) OECD(2021, p. 11.)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대상은 관리할 수 없으며, 측정할 수 없는 현상은 개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해양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며, 현재 인류가 해양의 대부분, 특히 심해 영역과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해 여전히 제한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함. 그러나 해양 정책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데이터의 결핍”을 제시하며, 이는 과학적 지식 축적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과 관리 체계의 구축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평가함.

45) OECD(2019), pp.15-16.

기반을 제공한다. OECD(2019)는 해양경제의 혁신이 경제적 성장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러한 진전이 단일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기술·제도·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된 혁신 체계의 작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평가한다.⁴⁶⁾

이러한 해양과학기술 전환과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년」(Ocean Decad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30)을 통해 국제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그림 2-5〉 Ocean Decade Action의 해역별 분포



자료: UNESCO-IOC(2025), p. 12.

Ocean Decade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UNESCO-IOC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해 필요한 과학(The science we need for the ocean we want)”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과학을 학문적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과 관리, 사회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환적 해양과학 솔루션의 창출을 핵심 목표로 설정

46) OECD(2019), pp.17-18.

하고 있다.⁴⁷⁾

2025년 기준 Ocean Decade는 1,900건 이상의 실행 활동과 다수의 국가·지역 조정기구를 바탕으로 전 세계 해역에서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그 결과, 총 62개 프로그램, 561개 지역·국가 단위 프로젝트, 116개 기여 활동이 공식 승인되었으며, 이들 실행 활동은 75개국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⁴⁸⁾ 해역별 분포를 보면 북대서양(17.7%)과 북태평양(14.5%)에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남대서양(14.0%), 인도양(13.6%), 남태평양(12.7%)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⁴⁹⁾ 이는 Ocean Decade의 실행이 특정 해역에 집중된 구조에서 점차 완화되며, 과거에 상대적으로 과소 대표되었던 해역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적 전환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경제 성장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해양질서의 안정성과 갈등 완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전략적 동인이다. 해양과학기술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중립적 지식 생산과 데이터 공유를 매개로 협력의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를 축적하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⁵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 거버넌스는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공유하는 다층적·네트워크형 협력 체계로 전개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은 규범 기반 국제 해양질서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47) UNESCO-IOC(2020), pp. 4-8.

48) UNESCO-IOC(2025), p. 11.

49) *Ibid.*, p. 12.

50) Blasiak et al.(2023, pp. 3-5)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술은 정치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도 협력의 제도적 공간을 형성해 온 사례를 보여줌. 북태평양해양과학기술기구(PICES)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국가들이 30년 이상 공동 연구와 데이터 공유를 지속해 온 대표적 사례임. 서인도양해양과학협회(WIOMSA)는 취약 지역에서 국가 간 연구 협력과 공동 연구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역내 신뢰 형성을 지원해 왔음. 또한 발트해해양환경보호위원회(HELCOM)와 카스피해 환경 보존 협력은 환경·과학 의제가 냉전기나 자원 경쟁 상황에서도 공식적 협력의 통로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줌.

(4) 해양 거버넌스의 위기와 지역화

최근 국제질서는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규범과 제도에 기반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조정·관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는 해양영역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국가 해양관할권의 확대와 해양공간·자원의 전략적 가치 증대는 해양을 협력의 공간이 아닌, 국가 및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정학적·경제적 경쟁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즉, 해양을 둘러싼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경제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경제갈등’의 성격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다자주의적 규범과 제도에 기반한 조정 메커니즘의 작동은 점차 제약을 받고 있다.⁵¹⁾ 이는 국제 해양질서가 ‘규범은 존재하되, 이행은 국가·지역의 선택에 좌우되는 상태’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해양 영토성의 확장 속에서 주요 국가와 지역 거버넌스 체계는 해양공간을 전략적으로 재편하며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불균등한 영향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G20 국가는 전 세계 EEZ의 69%를 차지하며 글로벌 해양경제와 공급망 관련 전략 결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NATO 회원국은 전체 해양의 15%를 EEZ로 관리하면서 주요 해상교통로와 해양안보 영역에서 군사적·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OECD, APEC, EU 등 국제기구는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통해 글로벌 해양경제 구조 재편을 주도하는 주요 거버넌스로 기능하고 있다.

51) Suárez-de Vivero & Rodríguez Mateos(2017, p. 20)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발효 이후 국가의 해양 관할권이 EEZ 200해리로 대폭 확장되면서, 해양공간이 단순한 지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전략적 공간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함. 이들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 거버넌스 체계가 국가 간 역학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지정학적·환경적 도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표 2-2〉 글로벌·지역 거버넌스별 EEZ 비중과 영향범위

구분	전 세계 EEZ 중 비율(%)	해양 거버넌스의 영향 범위
G20	69%	• 글로벌 해양경제, 해상공급망, 자원 이용 규범 형성 등 해양 거버넌스 전반에 구조적 영향
OECD	51%	• 해양정책·해양경제 관련 정책 기준 설정과 회원국 간 정책 확산
NATO	31%	•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안보·군사 전략 조정이 미치는 공간적·기능적 범위
APEC	28%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경제 성장과 해양자원 관리 협력 강화
EU	15%	• 해양법(Ocean Act, 27년 예정)과 Ocean Pact를 통해 해양경제·안보·환경 영역 전반에서 해양 거버넌스 영향범위 확대
BRICS	11%	• 신흥경제국 중심의 협력체로서, 해양자원 접근과 해양경제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버넌스 주체
ASEAN	7%	• 지정학적 긴장이 높은 해역 포함, 블루 이코노미, 해양안보·자원 관리·환경 협력의 조정 필요성이 높은 영역
MERCOSUR	5%	• 남미 지역 중심의 협력체로서, 역내 해양경제 발전과 해양자원 관리에 대한 공동 접근을 모색하는 지역 거버넌스
ARAB LEAGUE	3%	• 에너지 자원과 전략적 해상교통로 인접성을 바탕으로 해양안보·에너지 거버넌스와 연계된 중요성 보유

자료: Suárez-de Vivero & Rodríguez Mateos(2017, p. 24) 저자 재정리

반면, ASEAN, BRICS, MERCOSUR 등과 연계된 해양공간은 G20 등에 비해 물리적 관할 범위(EEZ 비율)는 상대적으로 작을지라도, 국가 간 정치·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집중되는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표 2-2〉와 같이, 해당 지역들이 해양공간을 글로벌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국가·지역 단위의 전략적 선택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영향범위의 비대칭과 거버넌스 조정 기능의 약화는 해양관리 책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 불균등하게 전가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신흥경제국 블록과 연계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의 경우,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약화로 인한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광범위한 해양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술·재정 역량의 한계로 불법어업(IUU fishing), 해양오염, 해적 행위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⁵²⁾ 그럼에도 국제 규범의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이들의 발언권과 접근성은 제한적이며, 이는 해양 거버넌스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다자주의의 조정기능 약화와 함께 ‘지역화(regionalization)’가 병행되는 구조적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을 대체하기보다는,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실행 단위의 재조정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⁵³⁾ 지역·하위 지역(subregional)·소다자(minilateral) 수준의 협력 메커니즘 증가는, 해양 거버넌스가 단일한 글로벌 체계로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다층적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 즉 국가별 대응역량의 격차와 국제적 관리체계의 분절화 문제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⁵⁴⁾ 지역 단위의 협력은 공동 해역과 유사한 환경·경제·안보 조건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와 이행이 가능하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정학적 경쟁과 복잡한 이해관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환경에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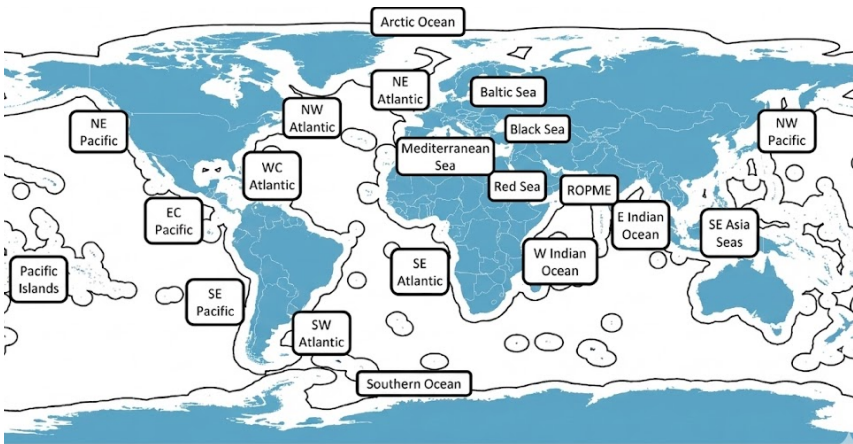
52) Suárez-de Vivero & Rodríguez Mateos(2024), pp.148-156.

53) 제3차 유엔해양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해양오염, 남획, 심해채굴과 같은 초국경적 해양 위기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하에 긴밀한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인 ‘블루 외교(Blue Diplomacy)’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함.(최지연 외(2025), p. 33.)

54) 해양 거버넌스가 커짐에 따라 UN 등 국제기구 내에서도 개별 협정과 기구가 지나치게 분절화(fragmentation)되어 글로벌 해양관리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Mahon & Fanning(2019) p. 2.)

해양거버넌스 체계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연결고리(missing link)를 효과적으로 보완한다. 결과적으로 지역 해양거버넌스는 단순히 기존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공유재(global commons)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 기반이 된다.

〈그림 2-6〉 The 20 ocean regions 분포



자료: Mahon & Fanning(2019), p. 3.

2) 전환기 국제 해양질서의 특징

(1) 공해자유의 원칙 약화

17~18세기 유럽의 30년 전쟁과 1648년 웨스트 팔리아 평화조약 채택, 1899년 헤이그 제1차 만국평화회의, 제2차 세계대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해양지배권 확장 경쟁 등의 역사적 사건과 국제질서의 변화는 국제법 이론과 원칙에 영향을 주었다.⁵⁵⁾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전

55)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국가 영토주권, 상호 평등, 내정불간섭이라는 이른바 “웨스트팔리아 주권” 원리의 출발점으로 간주되며, 제2차 대전 이후 유엔 중심으로 집단안전보장, 무력행사 규제 등 현대 국제질서가

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에서 국제규범(international norm)의 만민법(ius gentium)을 많은 민족이 공유하는 가치로 파악하였고, 그 가치를 일반적 자연법으로 파악하였다. 그로티우스의 자유해론은 네덜란드 무역정책과 국가적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적 시각과는 별개로 바다의 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공해자유의 원칙’,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심해저와 자원에 대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적용’ 등 중요한 국제법 원칙과 법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6월에 채택된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30년 이상 공고히 유지되던 ‘공해자유의 원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국제규범이었다. 즉 2004년 유엔총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엔 BBNJ 임시작업반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제1차 유엔 BBNJ 임시 작업반회의를 시작으로 2015년 제9차 작업반회의까지 10년간 진행된 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후 2016년부터 2년 동안 네 차례의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를 거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다섯 차례의 정부간회의(IGC: Intergovernmental Conference)를 통해 2023년 3월 문안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유엔총회에서 정식 채택되었다.⁵⁶⁾

BBNJ 협정은 12개장, 76개 조문, 2개 부속서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목적, 적용 범위,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기구와의 관계, 국제협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서

강화되었음. Wikipedia, History of International Law(검색일: 2025.9.20.) ;
56) UN 홈페이지, BBNJ 정부간회의(검색일: 2025.5.10.)

는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ABMTs: Area Based Management Tools),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등 4대 핵심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제6장은 당사국총회, 과학기술기구, 사무국, 정보공유체계(CHM: Clearing-House Mechanism) 등의 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자원, 제8장은 이행 및 준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1은 구역기반 관리수단의 지역 식별을 위한 기준이며, 부속서 2는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2-3〉 유엔 BBNJ 협정의 구성

구분	세부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일반목적,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예외, 제5조 본 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법적 기구, 프레임워크 및 글로벌, 지역, 소지역 및 분야별 기구와의 관계, 제6조 특례 규정(Without prejudice), 제7조 일반원칙 및 접근법, 제8조 국제협력
제2장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등 해양유전자원	제9조 목적, 제10조 적용, 제11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 제12조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 통고 및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염기서열정보, 제13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관련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제1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제15조 이용 및 이익공유 위원회, 제16조 모니터링 및 투명성
제3장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 등의 조치	제17조 목적, 제18조 적용지역, 제19조 제안서, 제20조 제안서 공개 및 사전 검토, 제21조 제안서 협의 및 평가, 제22조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관리 수단의 수립, 제23조 의사결정, 제24조 긴급 조치, 제25조 이행, 제26조 모니터링 및 검토
제4장 환경영향평가	제27조 목적, 제28조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 제29조 본 협정과 기타 관련 규정 및 프레임워크, 국제, 지역, 소지역 및 분야별 기구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의 관계, 제30조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한계 및 요건, 제31조 환경영향평가 절차, 제32조 공시 및 협의, 제33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34조 의사결정, 제35조 승인된 활동의 영향 모니터링, 제36조 승인된 활동 영향 보고, 제37조 승인된 활동 및 영향 검토, 제38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기구에서 개발할 기준 및(또는) 지침, 제39조 전략환경평가
제5장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제40조 목적, 제41조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협력, 제42조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방법, 제43조 해양기술 이전을 위한 추가 방법, 제44조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유형, 제45조 모니터링 및 검토, 제46조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위원회

구분	세부 조항
제6장 기구	제47조 당사국총회, 제48조 투명성, 제49조 과학기술기구, 제50조 사무국, 제51조 정보공유체계
제7장 자원	제52조 기금
제8장 이행 및 준수	제53조 이행, 제54조 이행 모니터링, 제55조 이행준수위원회
제9장 분쟁해결	제56조 분쟁예방, 제57조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의무, 제58조 당사국이 선택한 모든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제59조 기술적 성격의 분쟁, 제60조 분쟁해결 절차, 제61조 잠정 합의
제10장 비당사국 규정	제62조 본 협정의 비당사국
제11장 선의와 권리남용	제63조 선의와 권리남용
제12장 최종조항	제64조 투표권, 제65조 서명, 제66조 비준, 승인, 수락 및 가입, 제67조 본 협정이 규율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그 회원국의 권한 구분, 제68조 발효, 제69조 잠정 적용, 제70조 유보 및 예외, 제71조 선언 및 선언문, 제72조 개정, 제73조 폐기, 제74조 부속서, 제75조 기탁처, 제76조 정본
부속서	제1부속서 지역 식별을 위한 기준, 제2부속서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유형

자료 : 유엔 BBNJ 협정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작성

2025년 10월 현재 BBNJ 협정은 145개국이 서명하고 75개국이 비준하여, 60개국 비준이라는 발효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⁵⁷⁾ 비준국 수를 충족한 이후 120일이 경과한 2026년 1월 17일에 BBNJ 협정은 발효될 예정이다.⁵⁸⁾ BBNJ 협정이 발효되면 공해와 심해저에서의 해양활동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해양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환경영향평가, 해양보호구역에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ABMTs: Area Based Management Tools)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ABMTs)과 같이 다수 국가의 국내법을 통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공해와 심해저에서 해양활동을 규제하게 된다. 또한 BBNJ 협정

57) 모로코가 2025년 9월 19일 60번째로 비준하면서 BBNJ 협정의 발효를 위한 비준국 요건을 충족하였음. World Resources Institute(2025.9.20.)(검색일: 2025.9.27.)

58) UN 홈페이지, BBNJ Agreement(검색일: 2025.10.27.)

의 채택을 계기로 유엔해양법협약상 공해자유원칙의 절대성은 약화되고 공해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협력과 국가의무는 더욱 정교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공해와 심해저에서 해양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사전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의무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관할권 이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양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구역기반 관리수단의 후보지 제안 및 의견수렴, 지정 및 관리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2025년 4월과 8월에 개최되었던 BBNJ 협정 발효를 위한 두 차례의 준비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⁵⁹⁾ 요컨대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의사결정 방식, 자원 및 재정 메커니즘, 당사국총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 정보공유체계의 운영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플라스틱 오염의 글로벌 의제화

최근 국제 해양질서의 특징 중 하나는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변화와 유사하게 글로벌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이 특정 국가의 노력이나 특정 국제기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UN Environment Assembly)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단계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full life-cycle)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⁶⁰⁾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 우루과이 폰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를 시작으로 2025년

59) 박수진·이혜영(2025), pp. 1-12.

60) UNEA(2022), RES.5/14.

8월까지 총 여섯 차례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당초에는 2024년 11월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된 제5.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문안협상을 타결하고, 2025년 외교전권 회의를 통해 최종 협약안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협약문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이 지속되었으며, 2025년 8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2차 INC에서도 문안협상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제5.2차 INC 폐회 직전인 2025년 8월 13일에 의장이 제안한 문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5.1차 INC와 달리 플라스틱 생산, 우려되는 화학물질 등 국가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즉, <표 2-4>와 같이 플라스틱 협약 초안은 협약의 목적, 원칙 및 저근법, 용어정의,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방출 및 누출, 폐기물관리, 기존 또는 누적된 플라스틱 오염, 공정한 전환, 자원 및 재정 메커니즘, 역량강화, 이행 및 준수, 국가계획, 보고, 효과성 평가, 정보교환, 인식·교육·연구, 건강, 당사국 총회, 사무국, 분쟁해결, 협약 개정 등 총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유엔 플라스틱협약 초안의 주요 내용

조 항	주요 내용
서 문	•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 및 UNEA 결의 5/14 반영
제1조 목 적	• 오염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
제2조 원칙 및 접근법	• 협약의 원칙 및 접근법
제3조 정 의	• 당사국, 지역경제통합기구 등 용어 정의
제4조 플라스틱 제품	• 국가상황과 능력을 고려한 적절하게 플라스틱 관리 • 플라스틱 생산감축 등에 대한 국가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삭제 • 당사국 총회에서 세부적인 플라스틱 생산 관련 지침 개발 가능
제5조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 자원 효율성 및 순환경제 관점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의 개선
제6조 방출 및 누출	• 플라스틱 방출 및 누출을 평가, 방지, 감축하기 위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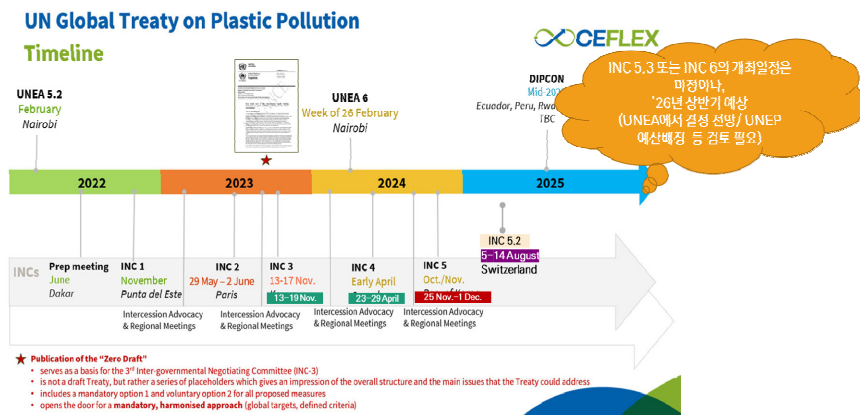
조 항	주요 내용
제7조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 환경적인 폐기물 관리 도입 조치 의무
제8조 현존·누적된 플라스틱 오염	• 현존하거나 누적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의무
제9조 공정한 전환	• 폐기물 수거자 등 영향받는 노동자 등 지원
제10조 자원 및 재정 메커니즘 설립	• 국별 역량 및 상황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해 자원동원 의무, 자원 메커니즘 결정 및 당사국들의 기여 의무
제11조 역량 강화, 기술 지원·이전, 국제 협력	• 협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에 협력 의무
제12조 이행 및 준수	• 이행 및 준수 위원회 설립
제13조 국가 계획	• 협약 이행을 위한 국별 이행계획 수립
제14조 보고	• 당사국은 당사국 총회에 이행 사항을 보고
제15조 효과성 평가	• 협약 발효 이후 6년 이내 1차 효과성 평가 실시 의무화, 효과성 평가는 최선의 과학에 기초하여, 환경, 기술, 재정 및 사회과학 정보에 대해 실시
제16조 정보 교환	• 당사국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
제17조 인식, 교육, 연구	• 당사국은 플라스틱 오염 및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촉진
제18조 당사국총회	• 당사국 총회의 소집 방식, 의사규칙, 부속기구 설립
제19조 보조기구	• 과학기술정보, 평가 및 권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보조기구 설립
제20조 사무국	• 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
제21조 분쟁해결	• 협약 해석 및 적용 관련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의무
제22조 협약 개정	• 협약 개정 절차
제23조 부속서 채택 및 개정	•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일부를 구성
제24조 투표권	• 협약의 각 당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 것이 원칙
제25조 서명	• 협약에 서명할 수 있는 장소, 대상, 기간 규정
제26조 비준·수락·승인·가입	•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절차
제27조 발효	• 발효 요건(비준서 기탁 국가 개수 및 기간)
제28조 유보	• 유보 불가
제29조 탈퇴	• 탈퇴 절차
제30조 기탁	• 협약 수탁자는 유엔 사무총장
제31조 정본	•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동등 정본

자료 :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의장문안(2025.8.13. 기준)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작성

그러나, 제5.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도 협약 문안협상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즉, 유엔 플라스틱협약의 적용범위,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 또는 공급, 자원 및 재정 메커니즘, 폐기물 관리, 정의로운 전환, 건강 등 다수의 조항에 대해 국가 간 입장이 대립하였다.⁶¹⁾

다만, 제5.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쟁점사항도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문안 협상 타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추가적인 문안협상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상의 주요 경과



자료: CEFLEX, A global opportunity? The UN treaty to end plastic pollution and flexible packaging(검색일: 2025.8.10.)을 기초로 수정

(3) IMO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시장기반 이행조치 강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국제해운 분야는 IMO에서 구체적인 온실가

61)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세부 논의내용과 주요 결과는 UNEP (2025), UNEP/PP/INC.5/L.5 ; IISD(검색일: 2025.8.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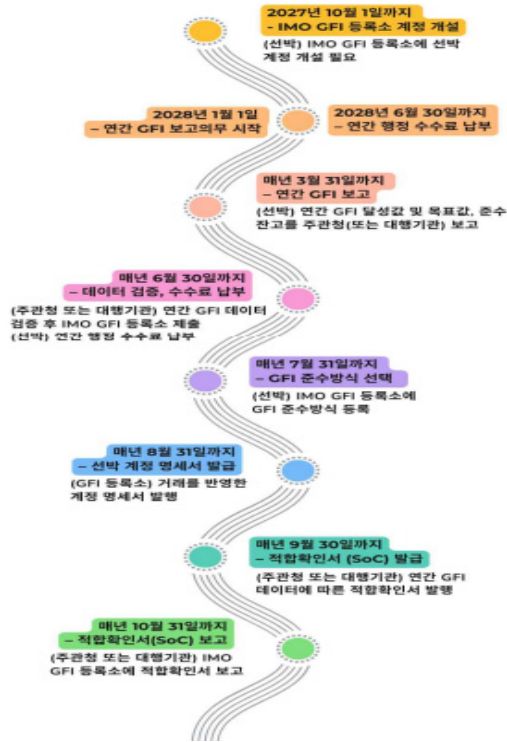
스감축전략과 대응을 위한 규제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국제해운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규모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차지하며, IMO는 2023년에 '선박 온실가스 중장기 전략'을 개정하면서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채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IMO는 '시장기반조치(MBMs: Market Based Measures)'를 강화하였는데, 국제해운 분야의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4월에 개최된 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Mid-Term Measure)가 승인되었다.

이번 조치는 2027년부터 5,000t 이상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연간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GFI: Green House Gas Fuel Intensity)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t당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 t당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5,000t 이상 선박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한다.

〈그림 2-8〉 IMO 온실가스 연료집약도(GFI) 준수 일정



자료: 김보람(2025), p.5.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t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했다. 중국과 브라질 등 수출국들은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주장하였다.⁶²⁾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해 t당 탄소세를 부과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세는 선박의 연간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GFI, 수송 화물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주요 선종별로 연료 집약

62) 이번 합의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 채택됐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한 63개국이 찬성하고, 16개국이 반대하였으며, 24개국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 Business(2025.4.12.) (검색일: 2025.8.1.)

도 기준을 부여한다. 청정 연료를 사용할 경우 탄소세를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잉여 집약도를 다른 선박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컨대, 선박을 대상으로 한 탄소세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5,000톤 이상 선박이 설정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톤당 380달러(약 52만 원)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선을 충족하는 경우 톤당 100달러(약 13만 7,000원)로 탄소세는 줄어든다. 반대로 청정연료 등을 사용해 목표를 초과해 탄소를 줄인 경우 남은 감축분을 ‘초과 단위(SU: Surplus Unit)’로 인정받아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탄소 감축분을 다른 선박으로 이전도 가능하다.⁶³⁾

다만, 2025년 10월 14일~17일까지에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에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MARPOL협약 제6부속서 개정안의 최종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별회의는 12개월 이후 재개될 예정이며, 그 사이 회원국들은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⁶⁴⁾

(4) 해양안보 및 블루 이코노미 중요성 증대

최근 국제 해양질서에서 해양안보와 블루 이코노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상대적 쇠퇴, 중국의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우선주의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공격 등 ‘규칙 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논의가 부상했고,⁶⁵⁾ 그 논의의 중심에는 해양이 있다. 더불어 세계 지정학의 위기와 함께 ‘인도-태평

63) 데일리안(2024.4.15.)(검색일: 2025.8.1.)

64) 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검색일: 2025.10.20.)

65) 강선주(2020), p. 303.

양'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⁶⁶⁾은 기존 '아시아태평양'의 지역 개념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정학을 구성하고 있다.⁶⁷⁾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간 4자 안보대화인 쿼드(QUAD)⁶⁸⁾와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인 오키우스(AUKUS)⁶⁹⁾ 등 소다자 안보협력체를 통해 핵심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⁷⁰⁾을 통해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⁷¹⁾에 가입 의사를 밝힘으로써 지역 다자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⁷²⁾

우리에게도 '인도·태평양'은 국가의 전략적 중요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인도·태평양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78%, 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우리의 해외직접투자의 66%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상물류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 해협-남중국해를 거쳐 이동하고, 남중국해는 우리나라 원유수송의 64%와 천연가스 수송의 46%를 차지한다.⁷³⁾ 국제해협에서는 후티반군 등 국제 해양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커질수록 국

66) 인도-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세계 인구의 50% 이상, 세계 GDP의 60%가 생산되고, 세계 경제성장의 2/3 정도를 기여하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임(김재천, 2022, p. 4)

67) 김재천(2022),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전략의 성격과 성패의 관건, p. 21.

68)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는 2007년부터 시작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 정상회담임

69) 오키우스(AUKUS)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의 3국 안보협력체로 2021년 9월 15일 창설됨

70)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71)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72) 한편, 러시아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참여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통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EAEU, About the Eurasian Economic Union(검색일: 2025.7.3.) 참조.

73) 대한민국 정부(2022), p. 5.

제해협의 해양안보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해양은 수산자원,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광물자원 등 전략적 자원의 주요 공급처로서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원의 존재는 각국의 경제적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촉진하여 해양을 둘러싼 지정학적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블루 이코노미의 부상으로 국가들은 해양자원 활용을 국가의 새로운 경제적 전략으로 삼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3. 소결

국제 해양질서는 현재 탈영역화와 재영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국가관할권 확대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 해양환경 악화, 해상안보 위협 등으로 인해 해양공간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공급망의 85% 이상을 담당하는 해양물류와 글로벌 연결성을 유지하는 해저케이블의 안정성 역시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 해양질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 소도서 개도국(SIDS)의 해양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의 UNCLOS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BBNJ 협정의 체계적인 이행과 비준국 확대를 통해 다자적 협력을 촉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남중국해 등 해양관할권과 자원 등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중재와 외교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공동 관리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

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해양거버넌스를 확립함으로써 공동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한편 최근 새롭게 채택된 BBNJ 협정과 문안협상이 진행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환경과 기술, 경제통상에 대한 융합적 규제 성격을 갖는다. 즉 공해와 심해저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이익공유 의무 부과, 환경영향평가 의무 부과 등의 규제조치는 해운, 원양산업 등 산업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엔 플라스틱협약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플라스틱 오염의 전 주기 관리가 강조되면서 플라스틱 생산 원료,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설계, 폐기물 관리, 재사용 및 재활용, 대체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 정의로운 전환, 기술이전, 자원 및 재정 메커니즘 등 플라스틱 관련 기술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국제규범으로 성안되고 있다. 단순히 환경규범이 아니라 산업·무역규범, 기술규범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국제 해양질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2절 전환기 국제 해양질서와 해양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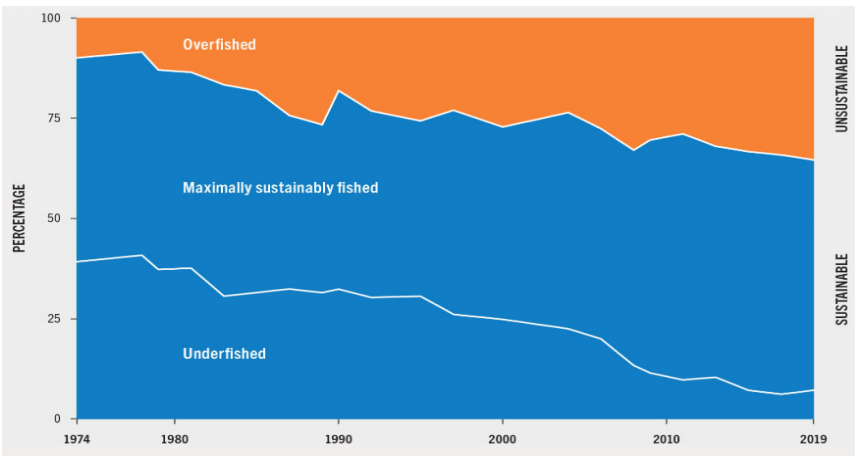
1.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해양자원의 이용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1) 남획 방지를 위한 어업 관리체계 강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 남획 어종의 비율은 197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1974년 10%에서 2019년 35.4%로 증가했으며,⁷⁴⁾ 2021년 37.7%에 이르렀다.⁷⁵⁾

〈그림 2-9〉 1974~2019년 세계 어족자원 현황



자료: FAO(검색일: 2025.7.10.)

남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구조와

74)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2(검색일: 2025.7.10.)

75) UNOC(2025), Ocean Action Panel 5: Fostering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including supporting small-scale fishers, A/CONF.230/2025/8, para. 7.

기능을 훼손하여 장기적으로 수산업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어획량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어획 노력량(fishing effort)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어족자원의 생물다양성과 건강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⁷⁶⁾

어족자원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부재는 남획과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이다. 어족자원 평가 없이는 적정 수준의 어획가능 자원량을 산정하여 어획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어획량의 약 50% 정도만 과학적으로 평가된 자원으로부터 어획되고 있으며, FAO 회원국의 50% 상당은 자국의 어족자원 상태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⁷⁷⁾

어족자원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⁷⁸⁾ 또한 어족자원 평가 및 어획 관리계획에 생태계접근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생산·분석 강화가 어족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⁷⁹⁾

한편 어획 모니터링, 통제 등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남획과 자원고갈의 주요 원인이다. IUU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통제·감시(MCS: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시스템은 어획 데이터 및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어업활동 통제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효과적인 MCS를 위해 글로벌 등록제도(Global Record)와 같은 선박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⁸⁰⁾, MCS 시스템의 법제도화 및 기술

76) 최지연 외(2025), p. 7.

77) UNOC(2025), 앞의 문서, para. 7.

78) UNOC(2025), 앞의 문서, para. 18.

79) UNOC(2025), 앞의 문서, para.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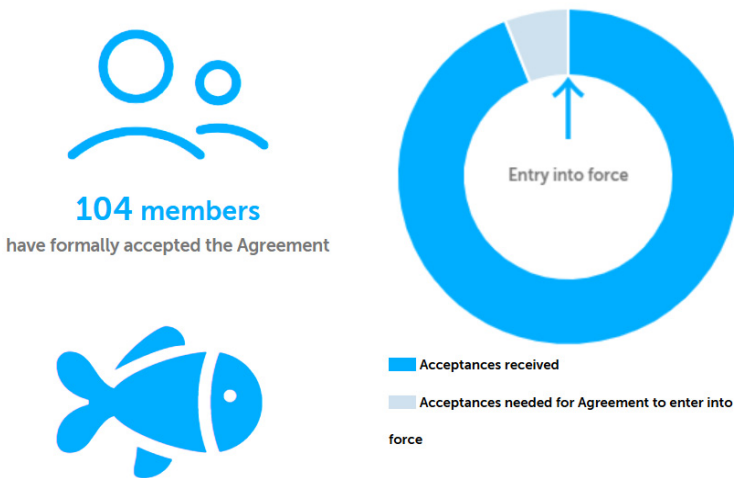
80) FAO,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https://www.fao.org/iuu-fishing/en/>(검색일: 2025.6.2.)

혁신을 국제사회의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⁸¹⁾

(2) 유해 수산보조금의 친환경적 재정 전환

유해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을 과도한 확대하여 남획과 해양생태계 훼손을 초래하는 정부 지원금을 말한다. 연간 약 220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어획능력 확대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⁸²⁾

〈그림 2-10〉 WTO 어업보조금협정 비준 현황



자료: WTO(검색일: 2025.6.3.)

유해 수산보조금에 따른 IUU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WTO는 2022년 6월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수산보조금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을 채택했다. 이 협정은 IUU 어업 및 남획 수산물에 대한 보조금, 공해상에서 규제되지 않은 어업 활동에 대

81) UNOC(2025), Ocean Action Panel 5: Fostering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including supporting small-scale fishers, A/CONF.230/2025/8, paras. 4, 27.

82) UNOC(2025), Ocean Action Panel 5: Fostering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including supporting small-scale fishers, A/CONF.230/2025/8, para. 12.

한 보조금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⁸³⁾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전체 164개 WTO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며, 현재 104개국이 협정을 비준한 상태이다.⁸⁴⁾

WTO 수산보조금협정의 발효는 수산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어획 능력 과잉 국가, 주요 IUU 국가의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유해 수산보조금의 철폐가 지속가능한 어업 거버넌스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해 수산보조금을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유해 수산보조금을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어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 어업기술 개발과 수산보조금 지급 내역 및 절차에 대한 투명한 보고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⁸⁵⁾

(3) 지속가능어업을 위한 국제규범의 이행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지표 14.6.1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 퇴치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별 진전 상황을 말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규범의 국내 제도화가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IUU 대응 이행지표가 되는 국제협약은 ① 유엔해양법협약, ② 유엔공해 어업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 ③ IUU 어업을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이 해당된다.

83) WTO(2022),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p. 1.

84) WTO, Members submitting acceptance of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검색일: 2025.6.3.)

85) 최지연 외(2025), p. 24.

〈표 2-5〉 지속가능어업 관련 국제협정

구분	주요 내용	채택일
유엔해양법협약	• 바다 및 해양자원의 종합적 관리 기본 원칙 수립 •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해 등 해양관할권 구분 및 자원관리 의무 규정 •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및 보존 의무 제시	• 1982
유엔공해어업협정	• 고도 화유성 어족자원과 경계왕래성 어족자원의 보존·관리 규정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설립 촉진 및 국제협력 체계 마련 • 과학적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의무화	• 1995
IUU 어업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 계획(IPOA-IUU)	•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자발적 국가 행동계획 권장 • 국가별로 포괄적인 MCS 체계 및 법적 틀 구축 촉진 • 국제적 협력과 정보교류 활성화 권고	• 2001
FAO 항만국조치협정	• 항구 진입 단계에서 IUU 어획물의 반입 금지 조치 강화 • 항구에서의 어선 검사 및 국제정보 공유 의무화 • 불법 어업 선박 입항 거부 및 어획물 압류 등 강력한 조치 이행	• 2009
FAO 자발적 기국이행 지침	• 어선 등록국(기국, Flag State)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 • 어선 감시와 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역량 강화 권고 • 국제규정 위반 어선의 등록 취소 및 재등록 방지 권장	• 2014
FAO 공해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 조치 이행 촉진 협정	• 공해상 어업에 대한 국제적 보존·관리 조치의 이행 촉진 • 공해 어선의 등록 및 국제적 투명성 제고 • 공해상에서의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촉진	• 1993

자료: 저자 작성

그 밖에도 ①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② FAO 자발적 기국이행 지침(VG-FSP: Voluntary Guidelines for Flag State Performance), ③ FAO 공해 어선의 국제적 보존 및 관리 조치 이행 촉진을 위한 협정(FAO Compliance Agreement: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이 지속가능어업과 관련성이 높다.⁸⁶⁾

86) FAO, SDG Indicators Data Portal, (검색일: 2025.6.30.)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 구체적 관리조치 등을 규정하는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규범은 권고적 성격을 가진 내용도 포함되나 IUU 대응을 위한 국가 의무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 심해저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표준화

심해를 포함한 해양 및 연안 생태계는 지구 기후 조절, 생물다양성 유지, 식량 안보 및 인간의 복지에 필수적이며, 심해 생태계는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 서비스 제공과 지구 환경 안정화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⁸⁷⁾

심해저에는 망간, 니켈, 코발트와 같은 금속과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광물자원 개발 압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심해 채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인 해저가 파괴되는 경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대량으로 방출되어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⁸⁸⁾

저온, 고기압 등 물리적 조건에 따라 심해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탐사가 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는 심해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보전과 광물 탐사, 개발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역별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87) UNOC(2025), Ocean Action panel 2: Increasing ocean-related scientific cooperation, knowledge, capacity-building, marine technology and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cience-policy interface for ocean health, A/CONF.230/2025/5, para. 1.

88) IUCN(2024), The impact of deep-sea mining on biodiversity, climate and human cultures (검색일: 2025.7.14.)

〈그림 2-11〉 심해저환경관리계획 수립 현황



자료: ISA(검색일: 2025.6.1.)

2012년 클라리온-클래퍼튼 해역에 대해 최초의 환경관리계획이 수립 (2021년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해 광물자원 개발 등이 금지되는 특별관심 해역 13개소가 지정되었다.⁸⁹⁾ 현재 ISA는 클라리온-클래퍼튼 해역 이외에 북서태평양(Northwest Pacific Ocean), 북대서양 중앙해령(Northern Mid-Atlantic Ridge), 인도양 삼중 접합부(Indian Ocean triple junction) 해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추진 중이다.

ISA는 원시 심해저 생태계 환경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된 접근법을 도입하고 투명한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자 환경관리계획 표준화 절차 규정을 추진 중이다. ISA 법률기술위원회(LTC: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는 2024년 7월 환경관리계획 표준화 절차 규정 초안을 회원국에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⁹⁰⁾ 이후 환경관리계획 표준화

89) ISA,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s(검색일: 2025.6.1.)

90) ISA, Standardized approach to the development, approval and review of REMPs(검색일: 2025.7.2.)

절차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향후 모든 신규 REMP 수립과 기존 REMP의 재평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3월부터 ISA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심해저 광물의 채굴 및 상업적 생산 등 상업적 개발을 허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심해저 광물 개발 규칙(Mining Code: Draft Regulations on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in the Are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가간 이견으로 개발규칙은 최종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⁹¹⁾

(2)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 공유를 위한 기금 조성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저와 광물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규정하고, 심해저의 이용과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⁹²⁾ 1994년 ISA 국제해저 기구가 설립되면서 심해저 탐사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할 잠재적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23년 ISA 재정위원회(Financial Committee)에서 심해저 개발 이익 공유를 위한 기금 설립을 위한 제안 초안이 검토되었다. 발생한 이익의 직접적 금전 분배 대신 기금을 통해 개도국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관리이사회, 과학자문위원회, 성과감사위원회와 사무국 등의 기구가 기금을 운영하는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⁹³⁾ ISA 재정위원회는 2025년 7월 연례회의에서 로열티 수취를 위한 적절한 재정 메커니즘과 이익 공유

91) IISDf(검색일: 2025.9.1.)

92) 유엔해양법협약 제140조.

93) ISA FC(2023), Development of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n the equitable sharing of financial and other economic benefits derived from activities in the Area pursuant to section 9, paragraph 7 (f), of the annex to the 1994 Agreement, ISBA/28/FC/4, para. 29

방식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⁹⁴⁾

(3) 심해 지식 이니셔티브 추진

ISA는 심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수집·평가·공유를 증진하기 위해 2022년 지속가능한 심해저 지식 이니셔티브(SSKI: Sustainability Seabed Knowledge Initiative)를 출범했다.⁹⁵⁾ 이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1,000종 이상의 신규 해양생물종을 식별하고,⁹⁶⁾ 표준화된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⁹⁷⁾하는 등 심해에 대한 지식 증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국제적 사업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확대되고 신흥 경제활동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심해의 환경과 생태계의 기능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⁹⁸⁾ 2025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유엔 해양총회에서는 ISA의 신규 지식증진 이니셔티브 Deep-Sea Biobank Initiative(DBI)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 이니셔티브는 심해저에서 채취한 생물 시료 및 유전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⁹⁹⁾

ISA는 심해저 정책 수립과 심해저 자원개발 관리체계 구축 및 규제를 위

94) DLA PIPER, Deep Sea Mining Uncovered: Part Two(검색일: 2025.6.1.)

95) ISA, New Sustainable Seabed Knowledge Initiative launched to advance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Area(검색일: 2025.7.14.)

96) UNOC(2025), Ocean Action panel 2: Increasing ocean-related scientific cooperation, knowledge, capacity-building, marine technology and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cience-policy interface for ocean health, A/CONF.230/2025/5, para. 51.

97) UN, Progress report for Contributing EUR 500 000 to support the Sustainable Seabed Knowledge Initiative (SsKi)(검색일: 2025.6.8.)

98) UNOC(2025), Ocean Action panel 2: Increasing ocean-related scientific cooperation, knowledge, capacity-building, marine technology and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cience-policy interface for ocean health, A/CONF.230/2025/5, para. 23.

99) ON&T(2025.6.27.), ISA Launches Deep-Sea Biobank Initiative, https://oceannews.com/news/science-technology/isa-launches-deep-sea-biobank-initiative/?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1.)

해 심해저 과학·정보를 확대·공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심해저 지도화 사업부터 생물종 및 유전정보의 수집·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심해저 생물다양성 보전과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 해양과학기술 협력 강화 및 격차 해소

1) 유엔 해양과학 10년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2021년 1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Ocean Decad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30)’이 출범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해양과학의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계·협력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¹⁰⁰⁾ 2025년 기준으로 해양과학 10년 프레임워크를 통해 59개의 글로벌 프로그램과 535개의 국가·지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¹⁰¹⁾

해양과학 10년의 전문가들은 2024년 바르셀로나 선언을 통해 앞으로 해양과학 10년의 추진방향을 제안하여 해양과학 지식의 발전과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했다. 이 선언에 따르면 해양과학 10년의 향후 과제는 크게 ① 해양오염, ② 생태계접근법, ③ 수산과 식량안보, ④ 해저지형 및 데이터, ⑤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⑥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 관리, ⑦ 사회과학과 해양 리터러시로 구분할 수 있다.

100) UNESCO, UN Ocean Decade Actions(검색일: 2025.7.14.)

101) UNOC(2025), Ocean Action panel 2: Increasing ocean-related scientific cooperation, knowledge, capacity-building, marine technology and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cience-policy interface for ocean health, A/CONF.230/2025/5, para. 9.

〈표 2-6〉 UNESCO-IOC 바르셀로나 선언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해양오염	• 해양 오염물질 분포 및 신규 오염물질 평가
생태계접근법	• 심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연구 • 연안 및 해양 생태계 기반 관리(EBM) 접근 강화
수산과 식량안보	• 지속가능 소규모 어업 및 양식업 촉진 • 해양 식량자원 생산 증대 및 혁신 촉진 • 기후변화 통합 어업 관리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해저지형 및 데이터	• 해저 지형(Seabed) 완전 매핑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 국가 해양 회계 기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계획 • 해양기반 기후 완화 기술(탄소제거, 재생에너지) • 해양과학 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적 근거 마련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 관리	• 연안 지역의 기후 취약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사회과학과 해양 리터러시	• 인간-해양 관계 및 행동변화 연구 강화 • 해양 건강과 인간 건강 간 연계 연구 확대

자료: UNESCO-IOC(2024), Barcelona Statement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제사회가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과학정보 축적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과학연구·데이터 확대를 향후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관측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넘어 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다학제적 과학정보의 생산·활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해양과학 정보·데이터 격차 해소

국제사회는 과학정보와 데이터의 생산과 공유를 위한 국제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 및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해양 데이터 및 정보 접근성의 격차는 여전히 도전과제로 남아있다.¹⁰²⁾

〈표 2-7〉 UNESCO 오픈사이언스 원칙

구분	주요 내용
오픈 사이언스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이해 증진	• 오픈 사이언스의 개념과 목표에 대해 명확하고 공통된 인식을 확산 • 오픈 사이언스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제시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오픈 사이언스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정책적·제도적 환경을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구축
오픈 사이언스 인프라 및 활동에 투자	• 데이터 저장소, 플랫폼 등 오픈 사이언스를 지원하는 기술적·물리적 인프라와 그 운영에 필요한 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
오픈 사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교육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훈련,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개발 강화
오픈 사이언스 문화 조성 과 인센티브 정비	• 오픈 사이언스를 지지하는 학문적 문화를 촉진하며, 이를 위한 보상체계와 인센티브를 정비·지원
연구 전 과정에서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혁신적 접근 촉진	• 과학 연구과정 전반에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새로운 접근방식을 촉진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국제적·다자간 협력 활성화	• 기술과 지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이해관계자 간 국제적인 다자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

자료: UNESCO(2022), p. 7.

UNESCO는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오픈 사이언스 원칙을 제안하여 글로벌 데이터 공개·공유를 추구하고 있다. UNESCO의 오픈 사이언스 구현의 핵심은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

102) UNOC(2025), Ocean Action panel 2: Increasing ocean-related scientific cooperation, knowledge, capacity-building, marine technology and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cience-policy interface for ocean health, A/CONF.230/2025/5, para. 19.

라 및 활동에 대한 투자와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과학연구 전 과정에서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혁신적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다.¹⁰³⁾

정보의 투명성 확대는 개도국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와 인권 증진, 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되는 앞으로의 중요 과제이다. 해양과학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에는 ‘전지구 해양관측시스템(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의 확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기술이전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이 있다.¹⁰⁴⁾

3) 과학정책 연계를 위한 기술혁신

국가가 글로벌,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해양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수요 기반(demand-driven)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과학적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한 과학정책 연계방안은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과학 의제이다.¹⁰⁵⁾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 해양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정책결정자에게 필요한 해양과학 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정책결정자는 기후변화, 연안해양 개발 증대와 같은 복합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므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정책결정에서 중요하게 기능한다. 정확한 해양 예측을 위한 방안으로 해양 모델링의 확대·강화가 국제사회의 향후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의 해양과학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103) UNESCO(2022), An introduction to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p. 7.

104) UNOC(2025), Ocean Action panel 2: Increasing ocean-related scientific cooperation, knowledge, capacity-building, marine technology and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cience-policy interface for ocean health, A/CONF.230/2025/5, para. 24.

105) UNOC(2025), 앞의 문서, A/CONF.230/2025/5, para. 48.

결정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¹⁰⁶⁾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이 해양과학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양관측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접근성 확보에 폭넓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¹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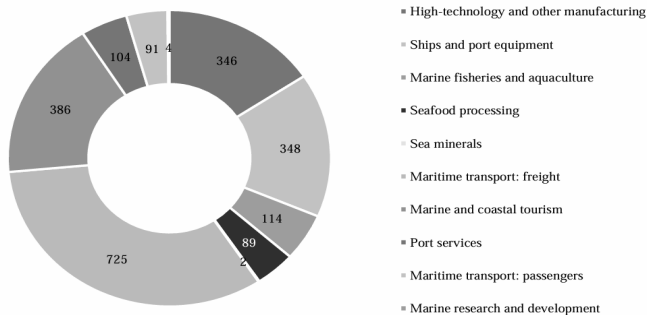
3. 블루 이코노미 및 재정 메커니즘 확대

1) 기술 혁신을 통한 해양산업의 친환경적 전환

해양경제는 재생 가능한 해양자원 또는 재생 불가능한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림 2-12〉 2023 해양 상품·서비스 무역 규모

Trade in ocean goods and services in 2023
(Billions of United States dollars)



Source: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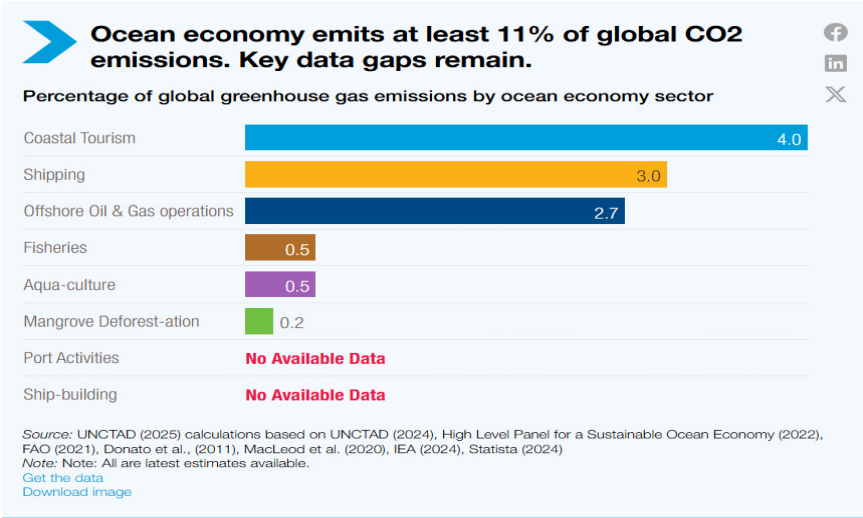
자료: UNOC(2025), p. 4.

106) *Ibid.*

107) UNOC(2025), Ocean Action panel 2: Increasing ocean-related scientific cooperation, knowledge, capacity-building, marine technology and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cience-policy interface for ocean health, A/CONF.230/2025/5, para. 17.

해양경제의 전통적 부문에는 수산업 및 양식, 해양광물, 조선 및 해양장비, 관광, 운송 및 항만 서비스가 포함되며, 신규 부문으로는 환경 서비스, 해양 재생에너지, 해양 생명공학, 생물자원식별(bioprospection) 등이 있다. 해상 운송, 관광, 해상풍력, 해양 생명공학 분야 등 해양경제는 최소 6억 명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산업으로 구성된다.¹⁰⁸⁾

〈그림 2-13〉 해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



자료: UNCTAD(2025.2.24.)(검색일: 2025.7.8.)

전 세계 해양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해양 및 연안 관광(7,250억 달러)이며, 다음으로 해상 화물 운송(3,860억 달러) 순이다.¹⁰⁹⁾ 해양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11%를 차지하며, 해상운송, 해양관광, 해양 에너지 부문이 주요 배출원으로 평가된다.¹¹⁰⁾ 해양

108) ·UNOC(2025), Ocean Action panel 6: Advancing sustainable ocean-based economies, 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and coastal community resilience, leaving no one behind, A/CONF.230/2025/9, para. 4.

109) UNOC(2025), 앞의 문서, para. 4.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플라스틱 오염, 해양산성화, 산호 백화현상 등 환경 문제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이다.¹¹¹⁾

따라서 해양산업의 친환경적 전환은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해상운송 부문에서는 선박 효율성 향상, 저탄소·무탄소 연료 개발 등을 위한 기술혁신이 향후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¹¹²⁾ 해양에너지 부문에서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을 포함하여, 파력 및 조력, 해수 온도차 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프로젝트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¹¹³⁾

2) 생태 중심의 순환경제를 위한 블루 파이낸스 확대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순환 시스템 구축이다. 이와 같은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수단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혁신적 재정수단으로 블루본드(blue bonds) 및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s),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¹¹⁴⁾ 이와 같은 조치는 공적 자본과 민간 자본을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블루 이코노미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로 해양환경 보호, 생물다

110) UNCTAD(2023),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3(검색일: 2025.6.14.)

111) UNOC(2025), Ocean Action panel 6: Advancing sustainable ocean-based economies, 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and coastal community resilience, leaving no one behind, A/CONF.230/2025/9, para. 6.

112) UNOC(2025), 앞의 문서, para. 31.

113) UNOC(2025), 앞의 문서, para. 14.

114) UNOC(2025), 앞의 문서, paras. 41-43.

양성 증진 등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국제적 투자 기준과 인증체계 마련, 국제기구 간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 등이 제시되고 있다.¹¹⁵⁾

3) 협력 다변화를 통한 공동의 경제성장

블루 이코노미의 활성화는 식량안보, 고용 창출,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 등 최빈국과 소도서국이 직면한 다원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태평양 도서국 등의 국가는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과정에서 얻어지는 혜택과 부정적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블루 이코노미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 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이 제시되고 있다. 2025년 제5차 유엔 해양포럼(Ocean Forum)에서는 남남(south-south) 협력 무역 증진을 위한 글로벌 무역특혜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¹¹⁶⁾ 개선을 위한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 추진이 제안되었다.¹¹⁷⁾ 참여국 상호 간 지속가능한 해양 제품에 대한 무역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협상이 제안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발도상국 간 무역규제 완화는 친환경적으로 생산·조달된 수산물 등 해양제품의 시장 접근성 증대, 비관세 장벽 완화, 기술 이전, 금융 협정 구축 등의 촉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블루 이코노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5) UNOC(2025), 앞의 문서, para. 29.

116) GSTP는 개발도상국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988년 4월 13일 UNCTAD 주도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을 말함

117) UNCTAD(2025c), 5th United Nations Ocean Forum on Trade-related aspects of SDG 14, p. 5.

제3절 종합

국제 해양질서는 현재 탈영역화와 BBNJ 협정 등 새로운 레짐 형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다층적·복합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 해양 환경 악화, 해양안보 위협 등으로 인해 해양공간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공급망의 85% 이상을 담당하는 해양 물류와 글로벌 연결성을 유지하는 해저 케이블의 안정성 역시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 해양질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도서 개도국(SIDS)을 비롯한 개도국의 해양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유엔해양법협약의 실효성 강화 및 BBNJ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다자적 협력을 촉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남중국해 등 해양 갈등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중재와 외교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공동 관리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해양거버넌스를 확립함으로써 공동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해양자원은 해양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해양자원의 이용이 해양환경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인류의 생존과 생계, 안전과 보건의 필수요건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생태계접근법에 기초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생태계접근법 확대·강화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고, 나아가 인위적 활동과 해양생태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과학정보와 지식 확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요한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족자원과 어획활동, 기후변화, 심해저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축적을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해양과학기술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은 유엔 해양과학 10년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해양과학 커뮤니티와 관련 프로젝트들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해양과학 10년 이니셔티브는 양질의 다학제적 과학정보 축적, 해양과학 정보와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데이터의 생산과 분석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정보의 정책 활용도 강화를 위한 연계방안이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의제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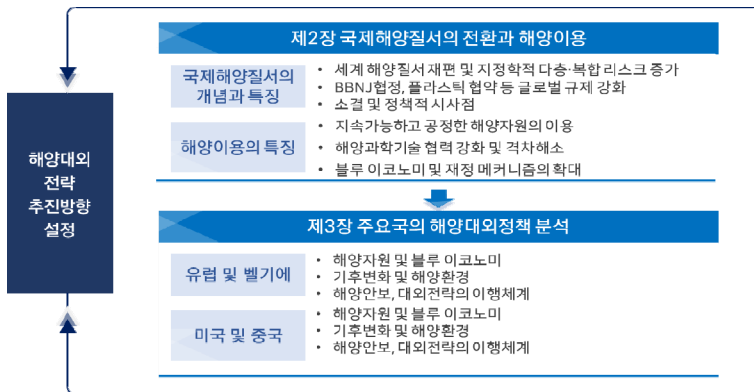
블루 이코노미는 국제사회의 해양의제 이행을 위한 통합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경제의 친환경적 전환과 생태 중심의 경제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전환적 의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이 시점에 블루 이코노미가 재정적 기반 확대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와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이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은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원 평가에 기반한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03

주요국의 해양대외정책 분석

앞선 제2장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지정학적 복합위기 및 다자주의의 도전, 다극체제 강화 등 국제 해양질서의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전통적 공해질서의 전환이 예상되는 BBNJ 협정의 채택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협상, IMO의 새로운 선박 온실가스 중장기 전략의 채택, 선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넷제로 펀드 등 국제규범의 변화와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해양자원의 이용, 해양과학기술 협력강화 및 격차 해소, 블루 이코노미 및 재정 메커니즘 확대라는 전환기 국제 해양질서와 해양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림 3-1〉 제2장과 제3장의 연계성



자료: 저자 작성

제3장에서는 EU, 벨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해양대외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 주요국의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제4장 제1절의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 분석 결과와 결합하여, 제4장 제2절에서 해양대외전략의 방향 및 목표, 이행체계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3장의 분석대상 국가 선정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블루 이코노미의 규모이다. 블루 이코노미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미국(1위), 중국(2위), 유럽연합(3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블루테크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북극, 태평양, 대서양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미국을 제외한 해양에서는 북해지역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¹¹⁸⁾

둘째, 해양자원의 실제적·잠재적 이용 가능성 및 해양관할권 행사의 중요한 기준인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을 고려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에 따라,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원, 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즉 생물 및 무생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탐사·보존 관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인공섬 및 구조물의 설치,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조치, 에너지 생산, 해양산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2025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면적이 넓은 국가는 프랑스(1위), 미국(2위), 호주(3위) 순이다.

셋째, 다자협약, 소다자협약, 양자협약 사무국 소재지가 위치한 국가를 고려하였다. 미국은 뉴욕 유엔 본부를 비롯한 광범위한 유엔 기구와 다자·소다자·양자기구의 사무국이 소재해 있다. 벨기에는 국제사회에서 중견 강국(middle power)으로서 EU 집행위원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및 아프리카 양자·다자, 지역협약 사무국이 소재해 있다. 즉, 벨기에는 유럽 통합 및 유럽-대서양 안보구조의 핵심 메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18) Dealroom(검색일: 2025.9.26.)

글로벌 NGO, 금융, 인권·개발 국제기구 본부도 벨기에에 위치해 있어 국제규범 및 정책 플랫폼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¹¹⁹⁾

제1절 유럽연합(EU) 및 벨기에의 해양대외정책

1. 유럽연합(EU)

1) 주요 해양대외정책

(1) 해양자원 및 블루 이코노미

가. 심해저 보전

EU는 해양자원 이용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환경적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자원 이용이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적 접근법에 따라 개발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심해저 자원 채굴에 대해 EU는 심해저 채굴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아직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공백이 해소되기 전까지 모든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금지해야 한다는 예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¹²⁰⁾ EU는 ISA 체계에서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기준 설정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ISA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논의에서 투명성, 거버넌스, 이해관계자의 참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¹²¹⁾

EU는 2016년 심해저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어업 규제 규정(Regulation

119) 유엔 협약 정보시스템(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국제기구 사무국 소재 국가순위(검색일: 2025.10.20.) 분석결과 참조

120) EC(2022), p. 5.

121) *Ibid.*

(EU) 2016/2336 - Deep-sea Access Regulation)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2017년에 발효되었으며, 수심 800m 이하 해역에서 심해 저인망 어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심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¹²²⁾ 이어 2022년 9월 「집행위 시행령(Implementing Act)」을 통해 북동대서양 EU 수역 87개소(총 16,559km²)를 수심 400m 이하 저인망 어업 전면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심해 해양생태계와 생물종 보호를 위한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¹²³⁾ 400m 이하 저인망 어업 전면 금지 구역은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의 권고에 따라 지정된다.

나. 어족자원 관리

EU는 1970년 최초로 유럽 공동체의 어업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후 1983년 ‘공동수산정책(CFP: Common Fisheries Policy)’을 수립했다. 이후에도 CFP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EU의 어업 및 양식 부문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인다.¹²⁴⁾ 2023년 발표된 CFP는 과학기반·지속가능·혁신·포용을 핵심 키워드로 하며, 어업·양식업의 사회·환경적 목표 정합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2023년 CFP는 총어획량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 어획자원 양륙 의무(Landing Obligation), 최대지속가능생산량(MSY: Maximum Sustainable Yield)의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어족자원 보전·회복 부문에서 성과를 이루었으나, 과잉어획과 해상 어획물 폐기와 같은 현안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¹²⁵⁾ 기존의 어족자원 관리정책에서 나아가 해양생태계 전체

122) EC(검색일: 2025.6.16.)

123) 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1614, Article 2.

124) EC(검색일: 2025.6.15.)

125) EU(검색일: 2025.6.10.)

의 균형을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U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강화, 해양보호구역(MPAs) 확장, 서식지 보호 정책의 강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어업 활동의 투명성 및 추적성을 높이고 어업 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기술 활용 등 혁신적 관리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어업 모니터링 및 통제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¹²⁶⁾

EU는 2008년에 'IUU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EU 및 국제수역에서 어획물 유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포함한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며, 당해 수산물 어획 선박의 기국은 해당 어획물이 모든 관련 국내외 법률, 규정 및 국제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여 어획되었음을 인증하고 어획증명서를 발급한다.¹²⁷⁾

IUU 어업으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의 경우, EU 역내 수입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IUU 대응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IUU 관련 제도나 법률, 감시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EU는 해당 국가를 '비협조 국가(non-cooperating)'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¹²⁸⁾

다. 블루 이코노미 촉진

EU에서 해양경제 관련 일자리는 500만 개에 이르며, EU의 대외수출 74%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는 등 해양경제가 EU 경제에 기여하는 총부

126) *Ibid.*

127)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Article 12.

128) 앞의 규정, Article 32, 33.

가가치는 2,500억 유로 상당으로 평가된다.¹²⁹⁾ EU 해양경제 주요 분야는 해양관광, 해상운송, 해상풍력이며,¹³⁰⁾ 신흥 산업 분야로는 블루 바이오테크, 해양에너지 등을 들 수 있다.¹³¹⁾

해상운송 부문의 블루 이코노미 증진을 위해 EU는 선박 및 어선의 연료 효율 개선 및 해상운송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¹³²⁾ 해양에너지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U는 ‘2020년 재생에너지 전략(Offshore Renewable Energy Strategy)’을 통해 2030년까지 60GW 해상풍력, 1GW 해양에너지(조력·파력)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¹³³⁾ EU 해양경제의 주요 부문 중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블루 이코노미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EU의 블루 이코노미 정책은 해양공간계획지침(MSPD, 2014/89/EU)과 해양전략기본지침(MSFD, 2008/56/EC)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MSPD는 해양자원의 계획적 이용을 의무화하여 블루 이코노미에 기여하며, MSFD는 해양환경 목표(GES) 설정 및 이행을 통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2025년 6월 11일 EU 집행위는 유럽 블루 이코노미 촉진을 위한 「유럽 오션팩트」(European Ocean Pact)를 채택했다. 유럽오션팩트는 ① 해양의 건강성 회복, ②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촉진, ③ 연안 및 도서의 지역사회 복지 향상, ④ 해양에 대한 연구 및 혁신 촉진, ⑤ 해양안보 강화, ⑥ 국제 해양거버넌스 주도를 핵심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 프레임워크이다.¹³⁴⁾ 이는 다양한 부문별 정책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통합 프

129) EC(검색일: 2025.7.3.)

130) EC(검색일: 2025.7.4.)

131) EC(2025), p. 10.

132) EC(검색일: 2025.6.23.)

133) EC(검색일: 2025.7.1.)

134) EC(검색일: 2025.7.2.)

레이م워크로서 부문간 정책목표의 조정 및 보고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정책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0월에 채택된 EU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 2009/125/EC)은 냉장고, TV 등 에너지 사용 제품과 창문, 단열재 등 에너지 관련 제품까지 에너지 소모와 관련된 모든 제품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및 환경영향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 지침이다. 이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Lifecycle) 동안 에너지 소비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자원·수자원 사용 및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¹³⁵⁾

이 지침은 2024년 7월에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의 채택으로 대체되었으며, 2024년 규정은 실질적으로 모든 물리적 상품에 적용되고, 제품의 내구성, 수리성, 재활용성 등 광범위한 환경성능 기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¹³⁶⁾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구체화하는 일은 ESPR 위임조항에 근거하여 EC에서 추진할 계획이다.¹³⁷⁾

(2)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가. 온실가스 감축

EU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¹³⁸⁾ EU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발전 부문에 대한 배출 허용량 상한제와 거래제를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 거래제(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의 도입·강화가 핵심이다. EU는 ETS 대상 산업 부문을 점진적으로 확대하

135) EU DIRECTIVE 2009/125/EC Preamble

136) EU REGULATION 2024/1781 Preamble

137) EU REGULATION 2024/1781 Article 4

138) EC(검색일: 2025.6.18.)

고 있으며, 해운 부문은 2024~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탄소거래 시장에 포함할 예정이다. 2024년 1월부터 EU 역내 5,000GT 이상 선박의 CO₂ 배출은 ETS 대상에 포함되었다.¹³⁹⁾ 배출권 수의 일부는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으로 유입되어 탈탄소 기술에 재투자된다. 한편 EU는 세계 최초로 탄소 국경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등의 고탄소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¹⁴⁰⁾ 이는 EU 기업이 EU보다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거나, EU 제품이 고탄소 수입품으로 대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CBAM은 2026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의 제품에 부과되고, 이후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¹⁴¹⁾

나.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2012년 기준 EU 해양 면적 대비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5.9%였으나, 2022년에는 12.3%로 대폭 확대되었다.¹⁴²⁾ 2022년 기준으로 독일·벨기에·프랑스는 해역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네덜란드·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 등은 20% 이상의 보호 면적을 확보한 반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몰타는 5% 수준이다.¹⁴³⁾ 그러나 EU 전체를 살펴볼 때, 현재 수준으로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지정 및 10% 엄격 보호를 목표로 하는 EU의 2030 생물다양성 전략목표 달성에는 이르기 힘든 진행 속도이다. 이에 EU는 Natura 2000 네트워크, 지역해 협정 등의 이행 강화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며, 해양보호구역

139) EC(검색일: 2025.6.5.)

140) EU(검색일: 2025.6.8.)

141) *Ibid.*

142) European Environment Agency(검색일: 2025.6.8.)

143) *Ibid.*

의 엄격한 보호를 위한 법률·거버넌스 전략을 개발 중이다.¹⁴⁴⁾ EU의 해양 생태계 보전 목표는 2030년까지 해양의 20%를 2050년까지 모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제정하는 등 법제화 노력을 추진 중이다. 복원 대상 해양생태계는 해초 군락지, 저서 생물 서식지, 돌고래, 상어 등 상징적 해양생물종의 서식지를 대상으로 한다.¹⁴⁵⁾ 「자연복원법」에 따라 EU 회원국은 2026년까지 ‘복원 대상 지역·방법·일정·자금·성과지표’를 포함한 국가 복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U는 자연복원의 세부적인 이행을 위해 2024년 6월에 「자연복원규정」(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EU 2024/1991)을 채택했다. EU 전역의 생태계 복원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생물다양성 회복, 기후 완화·적응 강화, 그리고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한 법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EU는 2030년까지 토지 및 해양의 최소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모든 복원 대상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¹⁴⁶⁾ 복원 대상은 크게 지형, 해양생태계, 도시 생태계, 농지·산림, 습지·토탄지로 구성되며, 해양생태계의 경우 해초지, 저서생물 서식지, 산호지대, 연안·해양 등을 대상으로 한다.¹⁴⁷⁾ EU 회원국은 2026년까지 국가별 복원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계획의 내용에는 지역별 대상, 조치 프로그램, 자금, 성과 지표 등이 포함된다.¹⁴⁸⁾

(3) 해양안보

EU는 2014년 ‘EU 해양안보전략(EUMSS: EU Maritime Security Strategy)’을 채택하였으며, 해양위험의 다양성과 복합성이 증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23년 10월에 개정된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2023

144) *Ibid.*

145) EC(검색일: 2025.6.10.)

146) EU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Article 1.

147) EU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ANNEX II.

148) EU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Article 16, 17.

년 EU 해양안보전략¹⁴⁹⁾은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국제적 규칙과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바다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⁴⁹⁾ 주요 위협으로는 해상 테러, 사이버 공격, 해양 인프라 파괴, 해상무기 확산, 자원경쟁 및 항행의 자유에 대한 도전 등이 포함된다. EU 해양안보전략은 유럽 내부해역 및 연안을 보호하는 내부 해양안보와 유럽 이외 연계해역, 국제 해양질서를 대상으로 한 외부 해양안보 모 두를 다루도록 설계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U 해양안보전략은 ① 해군 및 연안경비대 연례 훈련, 해군작전 강화 등 해상활동 증대, ② 해양영역인식(MDA) 등 정보교환과 감시체계 강화, ③ 해저케이블, 에너지 설비 등 해양 핵심 인프라 보호, ④ 자유항행, 해양법 준수 등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 ⑤ 지중해·흑해, 서아프리카 기니만 등 위협지역에 대한 맞춤형 해역별 대응, ⑥ NATO, UN, 연안국 등과 협업하여 민관협력 및 다자협력 확대 등 6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150여 개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EU 해양안보정책은 과거 해적퇴치, 밀수 대응 중심에서 자원경쟁, 사이버 및 인프라에 대한 복합위협을 포함한 해양전략경쟁 대비로 전환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¹⁵⁰⁾

2) 해양대외정책의 이행체계

EU는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역내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협력을 통해 국제적·지역적 기준을 국내 제도로 반영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어족 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제도 추진을 위한 조직을 분야별로 운영 중이다. EU 집행위원회 해양·수산총국(EU DG MARE:

149) EC(검색일: 2025.9.1.)

150) IISS(검색일: 2025.10.1.)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은 수산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IUU 대응 및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는 DG MARE 산하의 IUU 어업정책과와 유럽어업통제 기구(EFCA: European Fisheries Control Agency)를 들 수 있다. 한편 심해저 보전을 위한 어업 금지구역 지정 시 EU는 지역해 어족자원, 해양생태계 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의 권고에 따르는 등 지역해 협력을 통한 국내 제도 운영을 추진 중이다.

EU의 해양환경정책의 주요 기관으로 유럽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을 들 수 있다. EEA는 환경정보 전문기관으로 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정책 수립자와 대중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EU의 핵심 정책 목표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과학적 지원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전략기본지침(MSFD: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 생물다양성 전략 등과 관련된 정책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과학적 평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¹⁵¹⁾ 기후변화 정책을 위한 조직으로는 유럽 과학자문 위원회(European Scientific Advisory Board on Climate Change)를 들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과학 기반 자문 체계에 대한 IPCC의 권고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정책 일관성, 과학 근거, 기후예산 등을 검토하고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¹⁵²⁾ 한편 EU의 해양안보정책은 외교안보정책을 관장하는 유럽대외행동 서비스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과 유럽해양안전국(EMSA: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해군, 연안경비대 등이 정보 공유 등 다분야 협력을 추진 중이다.¹⁵³⁾

151) European Environment Agency(검색일: 2025.7.14.)

152) European Climate Law, Preamble and Article 3.

153) Industrial Cyber(검색일: 2025.9.20.)

2. 벨기에의 해양대외정책

1) 해양자원 및 블루 이코노미

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

벨기에의 해양경제는 약 4만 1,000명의 고용과 52억 유로 상당의 총생산액(GVA)을 창출하고 있다. 벨기에 해양경제는 해양생물자원, 해운·항만, 해양에너지 및 관광이 주요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해양생물자원 이용이 벨기에 해양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 상당으로 가장 크다. 앤트워프(Antwerpen)와 지브뤼헤(Zeebrugge) 항구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항만 중 하나로 해운산업은 벨기에 경제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¹⁵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해양에너지 분야는 벨기에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과 홍수 및 연안 침식 같은 기후 위협에 대비한 연안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역시 벨기에 블루 이코노미 전략의 핵심 과제이다.¹⁵⁵⁾

항만 부문에서는 벨기에의 주요 항만 터미널을 블루·그린 수소 무역 허브로 활용하고자 목표하고 있으며, 해조류와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푸드 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¹⁵⁶⁾ 한편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 발전의 부유식 전환기술 개발 등 해양산업 부문 기술혁신을 추진 중이다.¹⁵⁷⁾

나. 2050 기후중립을 위한 녹색 에너지 전환 및 산업 탈탄소화

2022년 벨기에의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106.5 MtCO₂-eq로,

154) EC(검색일: 2025.6.29.)

155) *Ibid.*

156) Kingdom of Belgium(검색일: 2025.6.29.)

157) *Ibid.*

전년 대비 4.0% 감소했으며, 팬데믹 이전 대비(2019년) 8.6%, 1990년 대비 25.7% 감소했다.¹⁵⁸⁾ 그러나 벨기에의 온실가스 규모는 EU 평균 30%에는 이르지 못하는 수치이다. 2024년 EC는 기후중립을 위한 국가별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벨기에 기후변화 권고안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화석연료 세금 증대를 통한 에너지 녹색전환을 제안했다.¹⁵⁹⁾ 2021년 기준 벨기에의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는 120억 유로 상당이다.¹⁶⁰⁾

벨기에 정부는 산업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와 청정수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벨기에를 유럽의 청정수소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¹⁶¹⁾ 벨기에 플란데런에서는 '문샷 프로그램(Moonshot program)'을 통해 산업 혁신 및 기술 돌파구를 지원 중이다.¹⁶²⁾

2)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가. 해양공간계획을 통한 생태계접근법 적용

벨기에는 관할해역 총 3,492.5km² 중 36.11% 상당의 면적(1,261km²)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의 유형은 조류보호(Special Protection Zones), 해양서식지보호(Habitats Directive Area), 람사르습지, 자연보호구역(Baai van Heist) 등으로 구성된다.¹⁶³⁾ 벨기에의 해양보호구역 중 엄격한 수준의 보호(Highly Protected Reserves)

158) European Parliament(2024a)(검색일: 2025.7.14.)

159) European Union(2024)(검색일: 2025.7.13.)

160) *Ibid.*

161) European Parliament(2024b), p. 3.

162) 문샷 프로그램이란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대담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데 자원과 조직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말함. 김민호(검색일: 2025.8.1.); European Parliament(2024b), p. 5.

163) Belgium, Atlas of Marine Protection(검색일: 2025.7.15.)

는 전무하나,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해양활동을 조정하는 방식의 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¹⁶⁴⁾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관리하는 해양활동은 해상풍력, 해상운송, 항만, 모래 및 자갈 채굴, 자연보호구역 관리, 어업, 군사활동, 과학연구, 관광, 해저 문화유산 보호 등이다.¹⁶⁵⁾

벨기에는 2014년 3월 최초의 해양공간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이어 2019년 2차 해양공간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¹⁶⁶⁾ 이 계획들은 해상풍력, 항만, 어업, 생태계 보호 등 벨기에 북해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조정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적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2차 해양보호구역이 2026년으로 완료됨에 따라, 벨기에는 제3차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오는 2026년에 제3차 계획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⁶⁷⁾

나.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한 수거 확대 및 거버넌스 강화

벨기에는 해양폐기물의 해양환경 영향 증대와 북해 해양폐기물 현안 확대에 따라 2017년에 ‘국가 해양폐기물 대응 행동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을 수립했다. 이 행동계획은 크게 7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해양폐기물 수거 및 정화 활동 확대, 조정과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164) *Ibid.*

165) EC(2022), p. 3. (검색일: 2025.6.1.).

166) European MSP Platform(검색일: 2025.7.15.)

167) *Ibid.*

〈표 3-1〉 벨기에 해양폐기물 대응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조정(Coordination)	• 국가 해양폐기물 워킹그룹 설립 및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2. 폐기물 발생원 차단(Tackling the source)	• 매크로플라스틱 규제 및 관리 강화, 1차 미세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제거, 어업·선박 등 해상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예방 및 관리
3. 정화 활동(Cleaning)	• 해상·해저·해안가 폐기물 수거 활동 확대 및 어업 활동 중 폐기물 수거 지원(Fishing for Litter 프로그램 활성화)
4. 소통과 인식 제고 (Communication & raising awareness)	• 시민과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실시
5. 모니터링(Monitoring: measuring and knowing)	• 해양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과학적 연구 확대
6. 감독과 통제(Supervision and control)	• 해상·항만 내 법규 준수 감독 및 통제 강화,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강화
7. 협력(Collaboration)	• 공공기관 간 협력 증대, 산업계와 '블루딜(Blue Deal)' 체결, 국제기구(OSPAR, EU, UNEP) 협력 강화

자료: DG Environment Marine Environment Service(2017), p. 11.

한편 벨기에에서는 어업인이 어업활동 중에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도록 하는 'Fishing for Litter' 사업을 추진하고, 해상이나 항만에서 해양폐기물 발생을 통제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¹⁶⁸⁾ 벨기에 정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계획과 더불어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관계기관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국가해양폐기물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역내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¹⁶⁹⁾ 해양폐기물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해양안보

벨기에는 북해 중심의 해양국가라는 지리적 특성과 EU 및 NATO 회원국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국가안보전략 상 해양안보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168) DG Environment Marine Environment Service(2017), p. 16.

169) 앞의 자료, p. 12.

높다. 그리고, 벨기에는 해양안보 위협을 군사 단독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환경안보, 사이버안보 위협과 결합된 복합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벨기에 해양안보 정책의 경우, 2021년에 처음으로 수립된 ‘벨기에 국가 안보전략(Belgium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벨기에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약화를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한 환경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¹⁷⁰⁾ 벨기에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국가안보는 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② 물리적 안전 및 영토보전, ③ 국제질서, ④ 환경, ⑤ 경제적 번영, ⑥ EU 운영 중 하나 이상의 중대한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위협해진다.¹⁷¹⁾ 또한 벨기에는 해양교통로 확보와 해양공간 관리를 통해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에너지 및 수소생산 분야에서 벨기에 기업들이 글로벌 주요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벨기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¹⁷²⁾

한편, 벨기에는 2024년 9월에 채택된 ‘북해안보협정(NorthSea Security Pact)’에 참여함으로써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협정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등 북해 연안 6개국이 북해 인프라 보호와 안보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3년 4월에 북해 고위급 회담(North Sea Summit)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벨기에는 북해 해양안보 협력 플랫폼인 ‘NorthSeal’의 설립을 주도하였는데, 플랫폼은 북해 에너지, 통신, 항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북해 연안 6개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다자적 해양안보 플랫폼 성격을 갖는다.¹⁷³⁾

170) Belgian government(2022), p. 5.

171) 앞의 자료, p. 9.

172) 앞의 자료, pp. 31-32.

173) 북해 해양안보 플랫폼인 NorthSeal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운영되고 있음, Wikipedia(검색일: 2025.8.23.)

3. 해양대외정책의 이행체계

1) 관련 법제도

벨기에는 2021년 「국가 회복·레질리언스 계획」(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EC에 제출하고, 2023년 변경안을 새로이 제출했다. 이 계획을 통해 벨기에는 EU의 회복 및 복원기금(RP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 NRRP는 EU Regulation 2021/241에 근거하며, 이 규정은 EU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이다.¹⁷⁴⁾ 벨기에의 해양 보전 및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은 「해양환경 보호 및 벨기에 관할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법률」(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for the organisation of maritime spatial planning in the maritime regions under the Belgian jurisdiction)에 따라 규율된다. 이 법률은 1999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생태계 기반의 통합적 공간 관리 및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북해 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¹⁷⁵⁾

2) 조직 및 협력체계

벨기에의 해양대외정책은 EU와 북해(North Sea) 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다자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벨기에 북해 거버넌스는 Interreg North Sea 프로젝트(2021~2027)에 따라 설립된 공동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공동기구에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북해 연안 7개국의 협력사업을 운영한다.¹⁷⁶⁾ Interreg North Sea

174) EU Regulation 2021/241, Para. (7)

175) Belgium, MSP roadmap(검색일: 2025.7.15.)

는 총 1억 5,800만 유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며, 추진 사업의 주요 분야는 ① 경제 부흥, ② 녹색 전환, ③ 기후·생물다양성, ④ 거버넌스 개선 등이다.¹⁷⁷⁾ 벨기에의 주요 해양산업인 해양에너지 부문 정책 추진도 역시 북해 거버넌스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벨기에는 북해에너지협력체(NSEC: North Seas Energy Cooperation)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NSEC는 2025년부터 NSEC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벨기에의 리더십하에 NSEC는 EU 및 연안국이 협력하여 북해 해상 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구축을 촉진하고, 북해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¹⁷⁸⁾

제2절 미국 및 중국의 해양대외정책

1. 미국

1) 주요 해양대외정책

(1) 해양자원 및 블루 이코노미

가. 조선·해양수산 경쟁력 회복

미국은 2025년 4월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을 통해 미국 국가선대 확충, 조선소 및 항만 투자 확대, 해양인력 확충 등을 행정부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조선·해운 산업 재건과 국가 해양 주권·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종합 전략이다.

176) Interreg North Sea(검색일: 2025.7.15.)

177) *Ibid.*

178) EC(검색일: 2025.7.15.)

이 행정명령의 채택은 미국의 상선(merchant marine)·상업조선(상선 건조) 역량과 해기사 등 전문인력이 장기간 약화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이 훼손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미국의 상업선 건조 비중이 1% 미만, 중국(PRC)은 약 절반 생산이라는 비교를 제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 연방재원을 확대하고, ① 미국 국적·미국 건조 선박의 상업적 경쟁력 강화, ② 해양산업의 제조기반 재건, ③ 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명시하고 있다.¹⁷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산 선박·장비에 항만수수료 및 고율 관세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시행, 북극항로 등 전략적 해역에 대한 해양 리더십 재확립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해양산업 역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맹국과의 조선소 협력 및 국제 해군 함정 건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적 이행장치는 ‘해양행동계획(MAP: Maritime Action Plan)’ 수립이며, 조문(섹션 4~21)의 개별 과제를 MAP에 묶어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¹⁸⁰⁾

한편, 미국은 2025년 4월에 ‘해양행동계획(MAP: Maritime Action Plan)’을 수립하였는데, 범정부 해양산업·해양안보 재건 실행계획으로, 조선·해운·인력·동맹 협력을 포괄하는 구조개편 로드맵 성격을 갖는다.¹⁸¹⁾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MAP은 국가안보보좌관 주도로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미국무역대표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TF를 구성하여 수립하였으며, 국가안보·경제번영·공급망 주권을 위해 미국의 조선·해운·항만·해양 등 해양산업을 “전략적 산업기반”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¹⁸²⁾

179) The White House(2025.1.20.)(검색일: 2025.8.15.)

180) *Ibid.*

181) 인천연구원(2025.4.30.)(검색일: 2025.8.10.)

또한 ‘미국 수산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공정 수입과 위생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개선하고, 미국 내 수산업 및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시하였다. 미 의회에서는 국가선대, 조선소, 항만, 해양인력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미국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법」(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S.1541), Building Ships in America Act of 2025)를 발의하였다.

나. 해양에너지 개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에너지 생산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미국 에너지 잠재력 발휘 행정명령(Unleashing American Energy)’이 2025년 1월에 발동되었다. 이는 해양 석유가스 인 허가 절차의 간소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자국 내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및 기후조치를 재검토하고, 부담스러운 규제가 에너지 개발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규제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방해역의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에 비해 유보적인 정책을 채택한바, 2025년 1월에 연방해역 해상풍력 임대에 대한 신규 및 갱신 임대를 중단하고 관련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다.¹⁸³⁾ 즉 연안지역의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에너지 탐사 및 개발을 장려하는 대신에 2025년 7월에는 풍력에너지 지역(WEAs: Wind Energy Areas)의 전면 철회 등 미국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현대화규정(Renewable Energy Modernization Rule),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재정보증 요건 및 해체비용 추정치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에너지관리국(BOEM)과 안전환경집행국(BSEE)의 주도하에 신뢰할 수 없고 외국기업이 장악한 에너지원

1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5.4.18.)(검색일: 2025.8.10.)

183) The White House(2025.1.20.)(검색일: 2025.8.15.)

에 대한 특혜를 종료하고, 연방 에너지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25년 7월 30일에 외해 대륙붕의 모든 풍력에너지 지역을 해제하였다.¹⁸⁴⁾

다. 해양과학기술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규제완화’와 ‘기술혁신’을 목표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혁신을 지지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해양 데이터·정보의 신속한 공개와 민간기업의 데이터 활용·상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한편, 2025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예산 60억 달러 중 15억 달러의 삭감을 요청했고, 기후 및 기상패터 연구부서의 폐지, 기상·해양 연구소 예산 전액 삭감, 어업규제 권한을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으로 이관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다.¹⁸⁵⁾ 다만, 의회 논의과정에서 예산은 2025년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미국의 해양과학기술 정책은 경제성에 무게를 두고, 해양자원 개발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⁸⁶⁾¹⁸⁷⁾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저광물 자원의 경우에는, 자원 개발에 필요한 해양과학·탐사·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행정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심해 과학기술 및 해저 광물자원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저 다금속 결정체, 기타 해저 지질 구조물, 그리고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 티타

184)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Prioritize American Energy Security(검색일: 2025.8.30.)

185) EveryCRSReport.com(2025.9.5.)(검색일: 2025.9.20.)

186) Wikipedia, Science policy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검색일: 2025.7.30.)

187) The White House, National Ocean Month, 2025(검색일: 2025.7.30.); Civileats.com(2026.1.13.)(검색일: 2026.1.13.)

늄, 희토류 원소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인 전략적 해저광물 자원의 채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의 해저 광물 보유량을 정량화하며, 관련 채굴 및 가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성화하며, 국방,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의 안전한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저광물자원의 탐사허가 및 상업적 채취허가 심사 및 발급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¹⁸⁸⁾

또한 상무부 산하 NOAA와 내무부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해양 및 기상관측, 해양생태계 평가,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 정책은 산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전략과 규제완화, 해상풍력 규제 완화, 해양석유·가스 개발 확대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즉,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구축된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제와 연방차원의 친환경 정책들이 대거 폐기되거나 중단되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파리협정을 탈퇴하였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기구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 역시 전면 중단하였다.¹⁸⁹⁾

또한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연방대기법·수질법」(CCA: Clean Air Act), 「연방수질법」(CWA: Clean Water Act), 「멸종위기종법」(ESA: Endangered Species Act),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등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전보다는 이용 측면의 정책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188) The White House(2025.4.24.), 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unleashing-americas-offshore-critical-minerals-and-resources/?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30.)

189) 최순영(2025), pp. 1-2.

실제로 미 내무부는 2025년 3월에 북극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과 멕시코만, 대서양 연안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제한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¹⁹⁰⁾ 같은 해 10월에는 ANWR의 해안 평야 156만 에이커(약 6,313 km²)를 석유·가스 개발권을 위한 토지임대 대상으로 개방하여 해안 평야 전 지역에 대한 석유·가스개발을 허용했다.¹⁹¹⁾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156호’를 통해 유례없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National Energy Emergency)’²⁾를 선포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방기관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탐사, 생산, 운송, 발전을 적극 촉진하고, 기존에 수 년이 걸리던 개발 프로젝트 승인 절차가 28일 이내로 단축되었다.¹⁹²⁾

(3) 해양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추진하지는 않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안보, 공급망, 산업경쟁력을 중심축으로 국기선대, 조선소, 항만, 선원인력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였고, 지역관계를 안보 우선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경제, 기술, 인적 교류 등 모든 것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¹⁹³⁾

미국은 대외협력을 선택적이며 조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미국 이익 중심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¹⁹⁴⁾ 또한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하

190) Alaska Beacon(2025.3.20.)(검색일: 2025.8.22.)

191) 연합뉴스(2025.10.21.)(검색일: 2025.10.22.)

192) 최순영(2025), p. 2.

193) 조원득(2025), p. 10.

194) 반길주(2025), pp. 23-26.

여 일반주의적 관세정책과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미국 제조업의 부활 및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¹⁹⁵⁾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또는 외교적 위협”을 판단하면, 외국 정부·기업·개인에 대해 자산 동결, 수출입 제한, 금융거래 차단, 기술이전 금지, 심지어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까지 명령할 수 있다.¹⁹⁶⁾

2025년에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즉 해양활동은 미국의 경쟁력, 회복력,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NSS는 해양영역을 영향력 행사, 취약점 노출, 국가역량 시험의 주요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¹⁹⁷⁾

한편, 미국은 해양지배력 회복을 위해, 해양행동계획(MAP)을 기초로 다양한 측면에서 해양안보에 관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방물자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 제3조¹⁹⁸⁾를 활용하여 민간 조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미국 상선유지 및 전략적 해상수송 역량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해양안보신탁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을 설립한다. 셋째, 조선소 현대화와 민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선 금융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항만·조선·물류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번영지대(Maritime Prosperity Zones)’로 지정하여 규제 완화, 투자 촉진, 고용 창출을 연계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한다. 넷째, 미 상선해양학교(USMMA: United States Merchant Marine Academy)¹⁹⁹⁾를 중심으로 한 해양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다섯째, 항만준설 및 유

195) 임해용(2025), p. 35.

196) SDG뉴스(2025.12.2.)(검색일: 2025.12.5.)

197) Windward(검색일: 2025.12.12.)

198) 1950년 9월 8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안보상 필수적이나 민간 시장만으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물자의 생산능력과 공급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 [50 USC 4501-4568] 미국 방위생산물법 1950(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제3조.

199) 미 상선해양학교(USMMA)는 미국 상선사관 및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연방 정부 소속 해양 사관학

지·보수를 위해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 징수체계를 강화하여 항만인프라의 안정적 유지와 해상교통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여섯째, 전략물자 및 중요화물에 대한 외국선박·외국 선박의 우회 운송을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및 해상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끝으로, 북극 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북극해역에서의 항행, 인프라, 쇄빙선, 물류 및 규범 주도권을 회복·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²⁰⁰⁾

2) 해양대외정책의 이행체계

미국의 해양대외전략은 ‘단일 부처’가 아니라 국무부·국방부·국토안보부·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해양대외전략 조정의 주무 부서는 국무부(State Department), 군사·안보 실행의 중심은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이다.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해양과 극지 정책,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 및 북극 등의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유엔해양법협약, BBNJ 협정, IUU 어업, IMO 협약 등 해양거버넌스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²⁰¹⁾ 한편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연안경비대(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는 연안과 원양에서의 해양법 집행, 항만 보안, 마약 및 IUU 어업, 대테러 등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물류, 해사인력 양성 등은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해사청(MARAD: Maritime Administration)이 대외전략을 이행하고

교로, 1943년에 개교하였으며, 전시에는 해군·해안경비대 지원, 평시에는 상선·물류 인력 공급 역할을 담당함. USMA(검색일: 2025.9.3.)

200) King&Spalding(2025.4.29.)(검색일: 2025.7.12.) ; SHIPS for America Act(검색일: 2025.7.12.) ; Greenworldwide(2025.4.9.)(검색일: 2025.7.20.) ; Reuters(2023.3.6.)(검색일: 2025.7.12.)

201) Crisis Group(2021.11.29.), Competing Visions of International Order in the South China Sea(검색일: 2025.10.12.)

있다.²⁰²⁾ 요컨대, 미국의 해양대외전략은 소관사항 별로 관련 부처가 정책을 이행하는 체계이다.

2. 중국

1) 주요 해양대외정책

(1) 해양자원 및 블루 이코노미

가. 연안국 공동의 경제발전

중국은 2013년 공동 개발·공동 번영·호혜적 이익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일대일로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구상안’을 최초로 발표했다. 이는 중국 서부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대한 구상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해양협력을 기초로 하는 국가전략으로 해운, 항만, 해양자원, 해양환경, 과학기술 등 부문의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해상교통로는 일대일로 해양협력의 핵심 인프라로서 항로의 안전·안정성 확보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물류·산업·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서 항만 인프라 연결성이 강조되었다.²⁰³⁾ 해양 에너지, 광물, 수산·양식 등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과 역량 강화가 주요 협력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²⁰⁴⁾ 2023년 6월 말까지 150여 개

202) The White House(2025.4.9.)(검색일: 2025.10.12.)

203)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검색일: 2025.12.9.)

204) *Ibid.*

국가와 30여 개 국제기구가 일대일로에 참여했으며, 200여 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²⁰⁵⁾

나. 해양경제 고도화

중국은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해양 분야를 핵심 전략 분야로 포함하고 있다.²⁰⁶⁾ 해양경제의 고도화, 해양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등 해양자원과 과학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하여 국가 발전을 추진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해양경제 고도화를 위한 중국의 5개년 계획의 핵심은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이다. 원천 과학기술 성과를 확보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해양경제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²⁰⁷⁾ 해양경제 분야의 차기 과제로는 해양에너지 및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의 개발·장려를 제시하고 있다.²⁰⁸⁾

(2)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중국 대표단은 2017년 제1차 유엔해양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양자·다자 해양협력 플랫폼인 ‘블루 파트너십(Blue Partnership)’의 채택을 제안했다.

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 p. 3.

20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검색일: 2025.12.9.)

207)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검색일: 2025.12.9.)

208) *Ibid.*

〈표 3-2〉 중국 블루 파트너십의 기본원칙

구분	주요 내용
해양생태계 보전	• 해양생태계 보호와 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의 건강성과 복원력을 강화
기후변화 대응	•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해양 열파 등 기후 리스크에 대한 공동 연구·관측·적응·완화 협력 강화
해양오염 저감	•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 육상·선박 기인 오염을 예방 중심으로 감축하고 순환경제적 접근을 확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수산·생물·유전자원과 해양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과잉 이용을 방지
블루 이코노미 반영	• 녹색·저탄소·혁신 중심의 해양 산업을 육성하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성장을 도모
기술혁신 강화	• 해양 과학기술 연구, 지식 공유, UN 해양과학 10년 등 국제 과학 협력을 촉진
통합적 관리 구현	• 생태 기반의 통합 해양 관리와 해양공간계획(MSP)을 실행하여 인간 활동의 누적 영향을 관리
해결책 기여	• 자연기반해법과 실천 중심 협력으로 SDG14·SDG17 달성에 기여
역량 강화	• 교육·훈련·기술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국의 해양 관리 역량을 제고
개방·포용	• 국가 간 발전 단계와 제도 차이를 존중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유지
다자 참여	• 정부·국제기구·NGO·학계·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
자발적 약속	• 각 참여 주체가 능력 범위 내에서 자발적 공약을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장려
공동 행동 촉진	•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집단적 행동을 강화
법제 거버넌스 촉진	• UNCLOS 등 국제법과 규범을 존중하는 법제 기반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
발전 성과 공유	• 개발 성과와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통해 신뢰와 협력의 선순환을 구축
세대 간 형평성 보장	• 미래 세대의 권익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해양 관리와 자원 이용을 보장

자료: China Oceanic Development Foundation(검색일: 2025.12.9.)

이 파트너십은 정보 교류·대화·협력사업 개발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뒤이어 2022년 6월 29일 유엔해양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블루 파트너십 협력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협력 네트워크는 중국의 협력 구상을 국제사회와 공유·확대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²⁰⁹⁾

중국 블루 파트너십의 기본원칙은 총 16개이며 해양 생태계 보전, 해양 과학 기술 협력, 포괄적 해양거버넌스를 큰 축으로 한다.²¹⁰⁾ 블루 파트너십 제안 이후 중국은 유럽연합, 포르투갈, 세이셸 등의 국가와 양자 블루 파트너십을 채택하여 협력 이니셔티브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3) 해양안보

가. 남중국해 안보협력

중국은 2012년 아세안 10개국과 남중국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선언문인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채택하였다.²¹¹⁾ 이 선언문은 1990년대 후반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 충돌과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와 협력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²¹²⁾

선언문은 협력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 존중과 무력 위협 자제, 실질적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분쟁의 해결은 국제법과 유엔해양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분쟁 해역에서 무력 사용이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합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209) Friends of Ocean Action(검색일: 2025.12.9.)

210) 디지털 비즈온(검색일: 2025.12.9.)

211)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검색일: 2025.12.9.)

212) *Ibid.*

분쟁 지역에서 거주·시설 설치 등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행위를 자제하며, 해양환경 보호, 해양과학 연구, 항행 안전, 수색·구조(SAR) 등 비분쟁 분야 협력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포함된다.²¹³⁾

나. 글로벌 안보 전략

중국은 2025년 5월에 「국가안보 백서(China's National Security in the New Era)」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국가 안보·국방·지정학적 경쟁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문서로서²¹⁴⁾ 글로벌 지정학 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안보 백서」는 아시아·태평양의 안보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9년 백서에서 아시아·태평양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평가한 바와 달리 2025년 백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군사동맹 확대, 미사일 방어체계 확장 등으로 인해 국제 안보환경이 위협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했다.²¹⁵⁾ 이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중국은 평화적 발전과 방어적 국가 방위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규범과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공정·공평·협력적 국제 군비통제 체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²¹⁶⁾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첫 사용 금지(no-first-use) 정책을 재확인하였으며, 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군사 시스템이 전략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²¹⁷⁾

한편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군사화·경쟁 위험을 언급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213) *Ibid.*

214) CSIS(검색일: 2025.12.10.)

2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검색일: 2025.12.10.)

216) *Ibid.*

217) *Ibid.*

는 점을 강조했다.²¹⁸⁾

2) 해양대외정책의 이행체계

중국의 해양대외전략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총괄한다. 국가 5개년 계획,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해양정책과 협력 추진방향 등의 실질적 설계가 이루어지고, 경제·산업·에너지·해양·개발원조 등 부문별 정책이 국무원을 통해 통합·조정된다. 국무원은 국가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의 부장, 각 위원회의 주임, 감사원장, 국무원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²¹⁹⁾

중국 국무원에서 구상한 해양대외전략은 산하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된다. 국방부, 자연자원부, 교통운수부 등 총 24개 부가 있으며, 이 중 자연자원부가 토지와 해양의 자원과 공간을 관리한다.²²⁰⁾ 자연자원부 산하의 주요 기관에는 지질조사국(China Geological Survey), 국가해양환경감측센터(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Center) 등이 있다. 중국지질조사국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지질·광물·해저 지질 조사, 심해·극지 연구, 지질 조사, 국제 공동 과학조사 등을 수행한다.²²¹⁾ 국가해양환경감측센터는 자연자원부 산하 핵심 기술·사업기관으로서, 해양환경 관측, 해양오염 모니터링, 생태 평가, 해양생태 데이터 수집·분석을 담당한다.²²²⁾

218) *Ibid.*

219)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검색일: 2025.12.9.)

220)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검색일: 2025.12.10.)

221) CGS(검색일: 2025.12.9.)

222) NMEMC(검색일: 2025.12.9.)

제3절 종합

EU는 유럽의 해양의제를 주도하는 중심 기관이자 회원국의 해양의제 이행을 규율하는 기구로서 기능한다. EU의 해양대외정책은 회원국들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EU 공동의 법제도를 구축하여 공동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이용하여 회원국들의 EU 공동 의제에 관한 진전과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최근 EU의 해양대외정책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과학·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EU의 해양대외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정보 역량 확대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의 해양의제 대응은 지역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해 연안 7개국은 해양에너지 개발과 재정협력 부문에서 특히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협력을 강조하는 벨기에의 해양전략은 EU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벨기에의 다자주의 외교전략과도 부합한다.

한편 벨기에의 해양안보 정책은 북해를 중심 축으로 두고 있으며, 블루 이코노미와 기후변화 대응,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략, 생태계 기반 해양보전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북해 중심의 해양국가라는 지리적 특성과 EU 및 NATO 회원국이라는 특성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바, 국가안보전략 상 해양안보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다. 그리고, 벨기에에는 해양안보 위협을 군사 단독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환경안보, 사이버안보 위협과 결합된 복합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벨기에에는 2024년 9월에 채택된 ‘북해안보협정(NorthSea Security Pac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영국, 덴

마크 등 북해 연안 5개국과 함께 북해 인프라 보호와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이 2013년 공동 개발·공동 번영·호혜적 이익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일대일로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구상안을 발표한 이래, 해양협력을 기초로 하는 국가전략으로 해운, 항만, 해양자원, 해양환경, 과학기술 등 부문에서 150여 개 국가 및 30여 개의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2017년 채택한 블루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 교류·대화·협력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해양안보 분야 대외전략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아세안 10개국과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공동으로 채택하였으나, 인공섬 건설, 군사력 확대 등 남중국해의 실질적 해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맹국에도 거래중심적 대가를 요구하고, 관세정책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활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²²³⁾

예를 들면,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과 같이 미국 조선·해운 산업 재건과 국가 해양 주권·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해양안보와 관련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관련 대외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미국의 해양대외전략의 향후 방향성 역시 해양안보 관점에서 해양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탐사·개발을 활성화하고, 조선·해양수산 분야의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223) 미국은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에 따라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보편관세(universal tariffs)를 부과하였으며,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통해 국가별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KOTRA(2025), 미국 관세정책 및 수입 통관 절차의 이해, pp. 6-11 참조.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비해 기후변화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파리협정을 탈퇴하였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기구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 역시 전면 중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해양대외정책은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조선·해운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해양개발과 조선·해운 등 민간기업의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04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 기반 구축방안

제1절 우리나라 주요 해양대외정책의 현황

1. 국제개발협력

1)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²²⁴⁾은 200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24번째 회원국으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2010년 ODA 정책의 법적 근거와 정책의 일관성·효과성 증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목적,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설치, 유무상 ODA²²⁵⁾의 통합추진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²²⁶⁾

224) 국제개발협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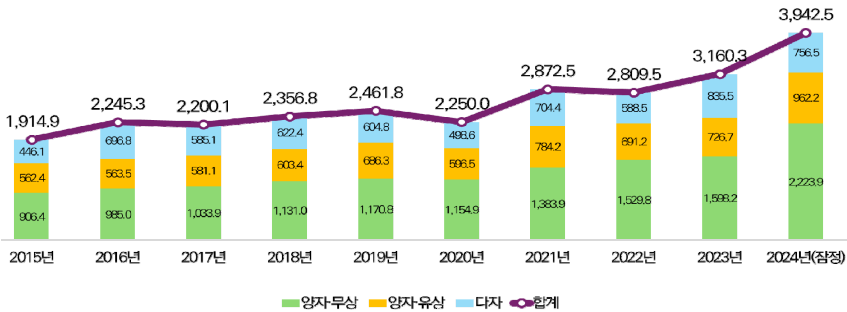
225)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임. ODA 통합누리집,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검색일: 2025.7.14.)

226) ODA 통합누리집, 우리나라 ODA(검색일: 2025.7.14.)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의 ODA 예산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폭이 더 커져 2024년(잠정) 실적은 39억 4,25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양자 간 원조와 다자 간 원조가 각각 80.8%, 19.2%의 비율로 지원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양자 원조 중심의 국제개발협력력을 추진하고 있어 개별 국가와의 직접적·전략적 협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연도별 ODA 지원 실적

(단위: 백만 달러(증여등가액))



자료: ODA 통계, 연도별 ODA 실적(검색일: 2025.7.14.)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수립되었는데, 국내적 원조시스템 구축(제1차)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제2차)로,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현안과 혁신적 협력 대응(제3차)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의 ODA 초기 단계로 원조 체계 정비와 국제협력 활성화에 집중한 반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무상 원조의 통합관리, 민관협력 및 다자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효과성 강화에 집중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팬데믹 등 글로벌 이슈 대응, 혁신적 접근을 통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력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다.

〈표 4-1〉 우리나라 역대 국제개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구분	제1차 기본계획 (2011~2015)	제2차 기본계획 (2016~2020)	제3차 기본계획 (2021~2025)
비전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	인류의 공영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목표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주요 중점과제	개발협력의 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강화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ODA 콘텐츠 재정바평가 민간-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글로벌 보건위험 대응강화 경제사회 발전기반 조성 수원국 혁신역량 강화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0); 관계부처 합동(2015); 관계부처 합동(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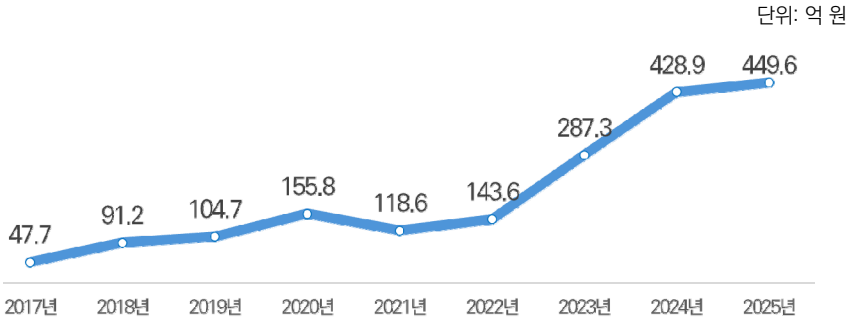
2) 해양수산 국제협력

(1)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별도의 특화된 전략 없이 개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2년 ‘감척어선 대외 무상원조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지정 등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²²⁷⁾ 해양수산 분야 ODA는 2017년 47.7억원에서 2025년 449.6억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기간 동안 9배 이상 확대되었다. 2017~2020년에는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였고, 2021년 일시적 조정 이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2024년 428.9억원, 2025년 449.6억원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7) 해양수산 ODA포털(검색일: 2025. 7. 14)

〈그림 4-2〉 연도별 해양수산 ODA 지원 실적



자료: 관계부처 합동의 연차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중 해양수산부 예산을 발채·재정리 하였음.

해양수산 ODA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특화 개발, 해운·해사 역량 강화, 해양플라스틱 관리 및 해양환경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글로벌 이슈인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개도국의 실질적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UU 어업 근절, 블루카본 관리, 선진 해운·해사 기술 전수 등 특화된 경험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ODA는 개도국이 처한 기후위기 취약성을 감안하여 해양조사·관측 및 모니터링·분석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블루카본 관리 및 화석연료 대체 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개별 지역의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4-2〉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추진방향('24~'25년)

구분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해양조사·관측, 모니터링·분석, 화석연료 대체 기술 및 블루카본 관리 등 탄소중립 지원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및 어촌특화 개발	- IUU 어업 근절을 위해 PSMA(항만국 조치 협정) 역량강화 및 국제워크숍 등 협력사업 확대 - 개도국 대상 수산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수산양식 기술 및 역량 강화,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어항·창고 건립 등 기반 구축을 통해 수산업 발전 - 단순 물자 지원에서 벗어나 어촌마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선, 양식산업 발전 및 관광 활성화 등 자립적 특화개발사업
해양환경 관리	- 해양폐기물 예방·수거·재활용 등 전(全) 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을 통해 글로벌 이슈인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술 지원과 블루카본 공동연구, 해양환경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
해운·해사 역량 강화	- 온실가스 저감 및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제협력력을 추진하여 해운·해사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 - 선진 해기교육시스템 전수 및 해적·해상 불법행위 방지 역량강화를 통해 국내 외국인 해기사 공급 확대에 기여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 pp. 173-177. ; 관계부처 합동(2025), pp. 151-156.

개도국의 수산자원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수산양식센터 건립, 수산과학기술 전수, 어항 및 창고 건립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과 항만국 조치 협정(PSMA)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 어촌 지역의 자생력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프라 개선, 양식산업 고도화, 관광 활성화 등 어촌 특화형 개발협력력을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자립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도국의 해운·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 해기교육시스템 전수와 해적·해상 불법행위 방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해기사 공급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등 신규 지역으로 해기사 양성

연수사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자율운항선박 등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해운·해사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 분야 ODA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인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수거·재활용의 전(全) 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블루카본 공동연구, 해양환경 국제협약 이행 지원 및 정책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의 해양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현안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2) Korea Blue Action Plan

대한민국 정부는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실현과 글로벌 해양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우리나라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 계획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어업, 해양경제,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해양안보 등 총 6개 영역에서 76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수립하였으며, 총 3조 7,593억원(26.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²²⁸⁾

228) 해양수산부(2025), p. 3.

〈표 4-3〉 6대 영역별 블루행동과 투자 규모

단위: 개, 억 원

영역	행동	주요 내용	투자 규모
기후변화	29	• 친환경 선박기술개발, 블루카본 확대 등 탄소중립 강화와 해양관측 역량강화, 수산양식 기술지원 등 ODA를 통해 글로벌 기후대응 능력 제고	10,110
지속가능어업	15	•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전자모니터링 기술개발, 어획증명서 확대 등 책임있는 어업 강화 • 개도국의 수산자원 및 어촌지역 활성화 지원	13,212
블루 이코노미	14	• MSP 및 위성계정 도입 등을 통한 과학적 해양관리 추진 • 해상풍력, 파력발전,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 해양경제 모델 개발	11,461
해양오염	13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어구·부표 보증금제 운영 확대 • UN 플라스틱 협약 논의 적극 참여	2,514
해양보호구역	3	•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 지정 선도	-
해양안보	2	• 기니만 지역의 해적 및 해상불법행위 방지 역량 강화 • AI 기반의 선박 디지털 상황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해양안보 증진	296
총계	76		37,593

자료: 해양수산부(2025), pp. 4-5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해양수산 통합행정 체계 구축 이후 약 30년간 축적해온 해양수산 정책역량과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4가지 핵심공약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 목표 달성을 위해 동아시아 최초로 BBNJ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해운·수산 분야에서는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친환경 선박과 저탄소 어선 기술을 개발하여 탄소중립과 해양산업의 탈탄소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글로벌 투명성 현장의 단계적 이행에 동참하여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전자

모니터링(EM) 기술 개발과 어획증명제도 확대 등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운영하여 폐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선박 운항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4-4〉 Korea Blue Action Plan의 핵심 공약

구분	주요내용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글로벌 논의 선도	•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 지정목표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은 BBNJ 협약을 동아시아 최초로 비준 • 국내외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지속 추진하며, CCAMLR·SPRFMO·NPFC 등 국제기구의 보호구역 논의에 적극 참여
해운·수산분야의 친환경 연료 전환 촉진	•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수소·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선박 및 저탄소 어선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탄소중립과 해양산업 탈탄소화를 선도
지속가능 어업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현장 이행	• 국제 불법어업 근절 행동연합(IUU Fishing Action Alliance)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투명성 현장의 중요성을 공감 • 전자모니터링(EM) 기술 개발과 어획증명제도 확대를 통해 어업과 수산물 유통의 글로벌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이행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	• 세계 최초로 도입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확대 운영 •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여 2028년부터 폐어구 발생 제로화

자료: 해양수산부(2025), pp. 4~5

「Korea Blue Action Plan」은 해양환경 문제 해결과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국제개발협력 계획으로서, 향후 이행 성과에 따라 해양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제 협력과 기술개발을 강조하는 본 계획의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도 잘 부합하여,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추진하는 만큼, 계획의 효과

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영역 간의 명확한 연계와 통합적 성과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사업 간 조정 및 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 주요 다자·소다자 및 양자협력

1) 다자·소다자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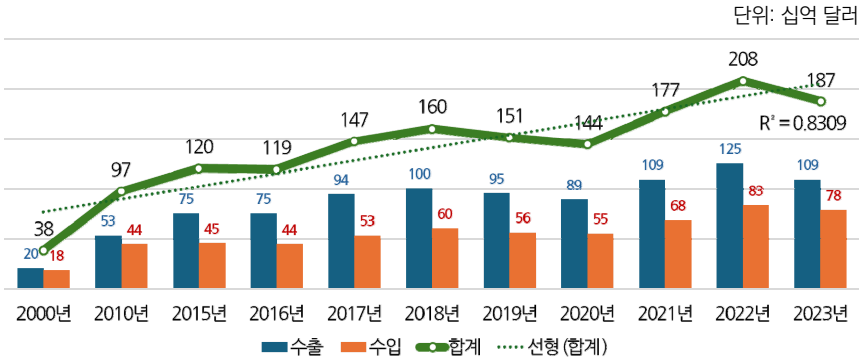
(1) 한-아세안 연대구상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아세안은 한국의 제2대 교역 및 제3대 투자 파트너이자 아세안+3(한·중·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다자협력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²²⁹⁾ 특히 아세안 지역 내의 주요 해상교통로인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한-아세안 간 전체 무역량은 2000년 380억 달러에서 2022년 2,080억 달러로 5.5배 증가했으며, 수출규모는 2000년 200억 달러에서 2022년 1,25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한-아세안 간 무역은 지난 2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한국의 전체 무역 및 경제구조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29) 외교부(2023), p. 1.

〈그림 4-3〉 한-아세안 무역량 추이



자료: 한-아세안센터(2024), p. xi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를 표방하는 한국이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3대 비전 아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구상이다.²³⁰⁾ 대한민국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확고히 지지하며, 이를 토대로 한-아세안 간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다.²³¹⁾ 이러한 맥락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은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아세안 지역과의 특화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아세안과의 호혜적이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 중심의 협력에 더해 전통안보 및 비전통안보, 그리고 아세안의 미래 발전 등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 분야로 확대하고자 한다.²³²⁾

230)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2.11.11.)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과 협력 원칙을 공개하면서,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함.(외교부(2023), p. 1.)

231) 외교부(2023), p. 2.

232) *Ibid.*, p. 2.

이 구상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SEAN)를 기반으로 양자 협력과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협력을 병행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안보와 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포괄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전기차·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변화·환경 및 보건 분야 협력과 한-메콩, 한-해양동남아 등 소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인적교류와 교육 협력 확대를 병행한다. 특히 2027년까지 한-아세안, 한-메콩,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을 연 4,800만 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유·무상 ODA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²³³⁾

〈표 4-5〉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8대 중점 추진과제

구분	주요내용
자유	①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②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아세안 협력 제고
평화	③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④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번영	⑤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 확대 ⑥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⑦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 ⑧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 각종 협력재원 확충

자료: 외교부(2023), p. 3.

〈표 4-6〉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해양협력 과제를 해양안보,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해양경제의 세 영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해양안보 분야는 역내 규범 기반 해양질서 유지와 아세안 회원국의 해상 대응 역량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한다. 해상법 집행 역량 강화, 공동훈련 참여, 수색·구조(SAR) 훈련, UNCLOS에 기반한 항행의 자유 원칙 지지는 역내 해양 안정성과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 기반적 협력으로 평가된다.

233) *Ibid.*, p. 6.

〈표 4-6〉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해양협력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해양안보	• 아세안 회원국의 해상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퇴역함 이전, 해상물류·군수 지원, 대테러·해적 대응, 수색·구조(SAR) 훈련) • 아세안 회원국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해상 공동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 •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해양협력 채널 구축 및 필리핀과의 해양정책 대화 강화 • UNCLOS에 기반한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유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지지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 동아시아 해역 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사업 추진(9백만 달러, '23-'28년) •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및 아세안-한 메탄감축 협력사업(AKCM) 추진(1,900만 달러, '23-'26년) • 지속가능한 아세안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 프로젝트(CASA) 추진(1,100만 달러, '23-'26년) •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와의 협력 강화 및 탄소중립·녹색전환 지원
해양경제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가칭) 추진을 통한 디지털 혁신 협력(공동 데이터, AI 등 분야 협력 및 역량 강화) •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출범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 협력 확대 • 아세안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사업 및 관련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 채널 확대(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양자 경제협력위원회 등 활용)

자료: 외교부(2023), pp. 3~11.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메탄 감축,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는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기후 협력을 제도화하고, 중장기적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해양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과학기술 협력센터,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사업 등은 해양을 매개로 한 경제협력을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KASI의 해양협력은 해양안보를 기반으로 해양환경과 해양경제로 확장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의 대아세안 해양 ODA, 기후·환경 협력, 디지털 기반 해양경제 전략을 연계·고도화하는 데 유의미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2) 극지협력

가.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에 제정된 「극지활동 진흥법」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극과 북극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22년에 관계부처 합동계획 형태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은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에 진입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남극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동 연구 및 국제규범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²³⁴⁾ 한편, 북극을 포함한 극지활동에 대해서는 범정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²³⁵⁾ 미국, 영국, 중국, 중국, 독일, 러시아 등 주요국은 북극 안보 강화 및 극지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 유지를 위해 극지연구 활동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²³⁶⁾

나. 해양분야 특징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은 차세대 이슈 주도를 위한 ‘핵심 연구인프라’를 확보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남극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남극 거버넌스 입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남극기지를 보유한 국가는 29개국이나 내륙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6개국만이 내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지 주변에 한정된 기존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내륙연구를 강화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즉, ① 심부빙하, ②블루아이스, ③ 천문·우주 관측 등 3대 분야의 연구 최적지에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선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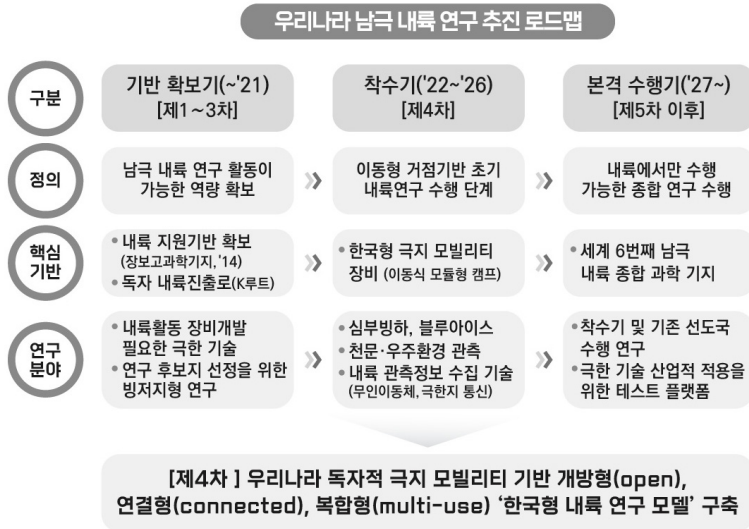
234) 관계부처 합동(2022b), pp. 18.

235) 관계부처 합동(2022c), p. 2.

236) 관계부처 합동(2022c), pp. 8-9.

스마트 무인 관측체계 등 내륙 탐사 지원기반을 고도화하고 있다.²³⁷⁾

〈그림 4-4〉 남극 대륙연구 추진 로드맵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b), p. 20.

한편, 북극의 경우에는 ‘국민을 위한 극지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활용한 북극점 공동연구 탐사, ② 대기-해양-해빙 통합모델 기반 북극발 한반도 재해기상 예측, ③ 북극 친환경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제로 연구인프라 조성 등 프론티어 과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²³⁸⁾ 또한 북극 수중 소음공해, 플라스틱 유입 등 새로운 환경위협 요소에 대한 관측체계를 구축하고, 남극 해양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의 실효적 관리를 위한 연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극지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세부전략 아래, ①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건조기술, ② 디지털·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통한 북극항로 운항 경쟁력 확보, ③ 북극 충돌·사고방지 시스템 등 자율운항 시스템의 개

237) 관계부처 합동(2022b), pp. 19-23.

238) 관계부처 합동(2022c), pp. 19-30.

발·실증, ④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운영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기타 무르만스크 등 북극항로 허브항과 국내항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극한지 특화 건설·장비·에너지 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²³⁹⁾

다. 주요 대외협력

남극과 관련한 대외협력은 제4차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현안 해결형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국제 공동 빙하퇴적물 시추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여 과거 기후변화 정보를 생산·수집·분석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6개국 9개 기관이 참여하는 ‘남극 빙권감시 관측망’을 통해 남극 주요 빙하 용융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구 및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²⁴⁰⁾ 그 밖에 남극조약 체제를 기반으로 한 남극 거버넌스 리더십 확보를 위해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극지과학심포지엄’과 연계하여 ‘남극해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 국내외 남극 협력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인 ‘서울 남극 포럼’을 창립하여 학술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고 있다.²⁴¹⁾

한편, 북극의 경우에는 북극권 8개국과 정부간 소통·협의 채널을 확보하고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북극 해양수산 양자대화’를 신설하고, 북극권 국가와 정부간 MOU를 확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제1차 극지활동계획에서는 ‘북극 Arctic-8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별로 북극정책 우선순위, 관심 분야, 우리나라와 양자관계

239) 관계부처 합동(2022b), pp. 37-39.

240) 관계부처 합동(2022b), pp. 27-28.

241) 관계부처 합동(2022b), pp. 34-37.

등을 종합 고려, 중점-전략적-잠재 협력국으로 설정하여 대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4-5〉 북극 Arctic-8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중점협력국		전략적 협력국	
덴마크	• (단기) 북극 고위도 육상(그린란드 지역)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장기) 송어 등 양식·가공기술 북극항로 친환경 활용	미국	• (단기) 기후변화 관련 해수부·해양대기청(NOAA) 협력사업 발굴 • (중·장기) 해양 환경 관리, 북극항로 안전 통항 연구, 원주민 지원
노르웨이	• (단기) 다산기지 기반 북극권 국제 공동 연구, 연어 양식 기술 등 • (중·장기) 자율운항 및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해양쓰레기 거버넌스	캐나다	• (단기) 보퍼트해 현장탐사 연구, 원주민 지식 활용 해양보호 관리 • (중·장기) 북극 동토층 대기환경변화 연구, 친환경 기술 기업 육성

중점협력국	
아이슬란드	• (단기) 오로라 등 고층대기 공동연구 과제 발굴, 소형전기어선 공동개발 • (중·장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정보제공 서비스 협력
스웨덴	• (단기) 오로라 등 고층대기 공동연구 과제 발굴,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 • (중·장기) 자율운항선박, ICT 융합 지능형선박 개발
핀란드	• (단기) 오로라 등 고층대기 공동연구 과제 발굴, 친환경 선박 기자재 수출 • (중·장기) 자율운항선박·인프라 구축, 해저케이블
러시아	• (단기) 소형어선 친환경 선택 전화, LNG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 (중·장기) 북극항로·항만 개발, 자율운항선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c), p.45.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부터 북극항로의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2026년 하반기에 국내 민간 선사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여 극지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할 계획이다.

또한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더불어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여부에 따라 협력방식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만약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를 추진하고,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²⁴²⁾

(3) 한-아프리카 협력

가.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1961~2011년 동안 아프리카 54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교역, 투자, ODA 등 다분야에서 외교관계를 이어왔다. 2000년 이후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에 58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최근에는 철도, 국도, 전력 등의 주요 인프라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추진하고 있다.²⁴³⁾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우호 관계를 유지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4월부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에 대한 옵서버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를 통해 AU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AU 협력기금과 AU 평화기금에도 기여하고 있다.²⁴⁴⁾ 한편, 2006년 3월 아프리카에 대한 포괄적 개발원조를 지원하기 위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소규모에 그쳤던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를 규모화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이다.²⁴⁵⁾

2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검색일: 2025.12.24.)

243)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25.12.1.)

244) 외교부(검색일: 2025.12.1.)

24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검색일: 2025.7.15.)

〈표 4-7〉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응	• COVAX 시설 지원 확대 • 아프리카 CDC 및 지역경제공동체(RECs)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영향 완화를 위한 기술 지원
개발 협력	• 공중보건 인프라 및 보건 서비스 개선 • 녹색기술(재생에너지, ESS) 투자 촉진 • 기후변화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기술지원 • 디지털 혁신 및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지원 • 여성 및 청년의 디지털 창업 및 경제적 참여 촉진 • 에너지 및 인프라(도로, 항만 등) 개발 지원 • 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 농업 현대화 및 식량 안보 증진 지원
무역 및 투자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포럼(KOAFEC) 개최 지속 • 한국-아프리카 비즈니스 협의체 설립 • 아프리카 최빈국 시장 접근성 확대 지원(무관세·무쿼터 확대 등) • 디지털 창업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 촉진 •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지원 •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대한 한국 민간 투자 촉진 • 단일 아프리카 항공 시장(SAATM) 지원
평화 및 안보	• 아프리카 평화안보구조(APSA) 지원 및 UN 평화유지 활동 참여 • 해양 안보 전략 지원(해적, IUU 어업 등 해양범죄 대응) • 평화유지 활동 의료 훈련 센터 설립 지원 • 테러 및 극단주의 대응 지원
문화 교류	• 문화·예술·스포츠·학술 분야 인적 교류 촉진 • 가상 문화 교류 플랫폼 개발 • 양측 문화유산 홍보 및 관광 개발 지원
이행 및 모니터링	• 한-아프리카 연례 정책 협의회 개최 • 국제기구(아프리카연합위원회, UNDP, WFP 등)와 협력 강화 • 2026년 제6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이행 보고서 제출

자료: 외교부·African Union(2022), Korea-Africa Framework of Cooperation 2022-202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는 2006년 한-아프리카 포럼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가 출범의 계기가 되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2년에 한-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아프리카 협력 추진 체계(Korea-Africa Framework of Cooperation 2022~2026)’를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보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 개발, 무역·투자 증진, 평화 및 안보 지원, 문화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연례 협의회를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른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개발과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와 안보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협력부문은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가 다수 포함되었다.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6월에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48개국은 ‘함께 하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정상회의에서는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의제로 하고, △ 교역 및 투자, △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 지속가능한 인프라, △ 직업훈련 및 교육, △ 디지털 전환 및 과학기술, △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 △ 평화·안보, 7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²⁴⁶⁾

2024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아프리카 19개국과 교역·투자, 농업, 해양 및 청색 경제, 기후변화, 핵심광물, 에너지 및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여 건의 정부 간 협약 및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 성과를 거두었다.²⁴⁷⁾ 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연합(AU)에 소속된 55개 회원국 가운데 48개국이 참석하였으며, 이 가운데 25개국에서는 국가원수가 방한한²⁴⁸⁾ 만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교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와의 관계 확대는 우리나라의 기

246) 한선아·황인정(2024), p. 7.

247) 한선아·황인정(2024), p. 8.

248) 국가안전전략연구원(2024), p. 2.

존 인도·태평양 중심의 지역 협력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²⁴⁹⁾

나. 해양분야 특징

한국-아프리카 협력은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원조 확대에서 시작하여 현재 다분야 협력체계로 전환되었다.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교통 인프라 부문 협력의 경우, 항만 인프라 구축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아프리카 유상원조 인프라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세네갈 다카르-고래섬 해상교통 개선 및 해상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해양 인프라 부문의 주요 개발협력사업에 해당한다.²⁵⁰⁾

다. 주요 대외협력

한-아프리카 협력은 다자 논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분야 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한-아프리카포럼이 대표적인 논의 플랫폼의 하나이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2006년 한-아프리카포럼 출범 이후 3년 주기로 포럼을 개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표 4-8〉 한-아프리카포럼 개최 현황

구분		주제	참가국
한-아프리카 포럼	2006	• 상호 이해 증진과 새로운 협력관계 및 발전 방안	25개국
	2009	• 새로운 파트너십: 녹색성장, 지속가능개발	15개국
	2012	• 개발협력, 통상투자, 평화안보	18개국
	2016	• 평화안보, 경제개발	14개국
	2022	•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시대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10개국

자료: 외교부(검색일: 2025.6.28.)

249)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4), p. 3.
250) 한선이·황인정(2024), p. 15.

한-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고위급 포럼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포럼이 있다.

〈표 4-9〉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포럼의 개최 현황

구분	주제
1차	2006 • 아프리카 15개국 장·차관급 참여, 논의 시작 및 플랫폼 설립(한국무역협회)
2차	2008 • 녹색성장, 지속가능개발 중심
3차	2012 • 개발협력·통상·평화안보 주제
4차	2013 • 평화안보·경제개발 논의
5차	2016 • 농업·산업화·금융포용 등 다각적 협력 논의
6차	2018 • 장관급 회의 개최, 세미나·민관포럼 병행
7차	2023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농업 혁신” 주제, 아프리카 38개국 참석

자료: 외교부(검색일: 2025.6.28.)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2024년에 출범했으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포럼은 2006년 최초 개최되어 현재는 제7차에 이른다. 경제협력포럼에서는 녹색성장과 농업, 산업 등의 경제협력을 위한 부문별 협력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 인도·태평양 전략

가. 주요 내용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고 GDP의 62%, 무역의 46%, 해상운송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정학적으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다.²⁵¹⁾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주요 군사강국이 위치해 있어 다수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경제통상 및 해양안보적 측면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IPS: Indo-Pacific Strategy)’을 수립·이행하고 있다.²⁵²⁾ 이들 국가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251) 대한민국 정부(2023), pp. 4-5; 임경한(2024), p. 2.

경제·통상,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여와 협력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²⁵³⁾ 우리나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였다.²⁵⁴⁾ 한편, 인도-태평양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023년 12월에는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① 규범·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구축, ②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③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④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⑤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⑥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²⁵⁵⁾

2024년 10월에 우리나라는 ‘한·프랑스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동남아·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및 인도양 연안국 등 역내 국가들의 복원력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해양안보 및 청색경제, △ 기후·환경, △ 보건, △ 해양과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아세안,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태평양공동체(SPC), 환인도양연합(IORA), 인도양위원회(IOC) 등 역내 지역 기구들과의 협력 및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²⁵⁶⁾

나. 해양분야 특징

우리나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규칙·규범 기반 질서 강

252)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전략 또는 유사전략을 발표한 국가 또는 국제조직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체코, 아세안 등 14개에 달함. 박재적 외(2023),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향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24, 박수진(2025),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전망과 과제, 2025 해양수산전략 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11에서 재인용.

253) 대한민국 정부(2023), p. 5; 최원기(2022), p. 3.

254) 외교부(검색일: 2025.9.10.)

255) 외교부(검색일: 2025.9.5.)

256) 외교부(검색일: 2025.9.2.)

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다는 점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통상, 해양안보, 역내 지역질서 유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존중,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들과 해양영역인식(MDA) 등의 세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개도국의 해양법 질서와 해양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 워싱턴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를 통해 2023년 8월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시 주요 합의사항인 3국 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시켰으며, △ 경제안보 및 회복력, △ 해양안보 및 법집행, △ 해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전략소통 및 공공외교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²⁵⁷⁾

다. 주요 대외협력

우리나라는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아세안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및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증진하고, 해양법 집행 등 해양안전과 안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며,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 존중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회복력, ODA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²⁵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외협력을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미·중 패권 경쟁, 탈세계화, 양분화, 융합화 및 복합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공급망

257) 외교부(검색일: 2025.9.2.)

258) 연합뉴스(2024.10.10.)(검색일: 2024.10.15.); 외교부 뉴스·공지(2024.10.11.)(검색일: 2024.10.15.)

의 재편,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등 신냉전의 복합위기는 해양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외협력은 미·중 간 군사적 경쟁, 디지털 패권 경쟁의 가속화, 해상교통로 보호 및 해양범죄 대응, 해저케이블 등 해저기반시설의 위협 공동대응, 해양 데이터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부문별, 단계별 접근이 요구된다.

2) 양자협력

(1) 한·미 해양협력

가. 친환경·녹색 해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와 미국 해사청은 2014년부터 양국의 해운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는 양국의 해운·물류 정책을 공유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제7차 한·미 해운협력 회의에서는 해운 분야 탈탄소화 정책과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등에 관련한 정책이 공유되었으며, ‘녹색해운 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²⁵⁹⁾

그동안 한·미 해운협력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s)’ 협력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저탄소 기술을 통해 해상운송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협력 모델이다.²⁶⁰⁾ 양국은 부산항과 미국 북서부 항만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친환경 연

259) 해양수산부(검색일: 2025.12.1.)

260) 주한 미국대사관(검색일: 2025.12.1.)

로 기반 무탄소 녹색 항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2025년 이후 경제성 조사 등을 포함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²⁶¹⁾

뒤이어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선도와 국익 창출을 위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한·미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²⁶²⁾ 우리 정부는 나아가 한·미 양국의 해운협력 성과를 확산하여, 향후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등 주요 해운국과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²⁶³⁾

나. 불법어업 대응

해양수산부는 한·미 국제어업관리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미국과 함께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관리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2019년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후 양국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²⁶⁴⁾

한·미 양국은 2024년 6월 제3차 협의회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 지역수산물기구 등에서 불법어업규범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개도국의 불법어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논의하는 등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확대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²⁶⁵⁾

2011년 한·미 FTA 체결 이후, 협정의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 환경 부문 이행점검을 위한 한·미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에서도 불법어업 대응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환경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지역수산물리

261) *Ibid.*

262) 해양수산부(검색일: 2025.12.2.)

263) *Ibid.*

264) 대한민국정책브리핑(검색일: 2025.11.4.)

265) 해양수산부(검색일: 2025.11.4.)

기구 등을 통한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과학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 접근법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혼획(bycatch) 최소화, 멸종위기종의 보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어획물 및 수산물의 데이터 수집과 추적성(traceability) 시스템의 고도화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²⁶⁶⁾

(2) 한·EU 해양협력

한국과 EU는 1996년 「한-EU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과 EU는 2018년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립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안보,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²⁶⁷⁾

2023년 우리 정부와 EU는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EU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을 체결했다. 이는 파리협정에 따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다. 기후행동,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양자 간 협력 분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양측은 기후행동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 탄소가격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적 협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고, WTO 규범에 부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메탄 감축 및 기후 적응과 재원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해양생물다양성, 순환경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되었으며,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해서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탄소 포집·활용·저장, 녹색수송 등 녹색기술 개발을

266) 대한민국정책브리핑(검색일: 2025.11.5.)

267) 외교부(검색일: 2025.12.2.)

위한 공동연구 및 정책 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²⁶⁸⁾

한국과 EU의 그린 파트너십 세부이행 방안은 향후 한-EU 기본협력협정, 한-EU FTA 및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3) 한·중 해양협력

가. 해양협력

한·중 양국은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해양협력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이 회의를 통해 양국은 그간의 해양협력을 재조명하고, 법제도, 어업, 해양경제 및 해양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3년 제2차 회의에서는 양국 해양경찰청 간 실무협의체 설립 등 소통 채널 구축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어업질서 유지, 환경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진 그간의 협력 성과를 재확인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²⁶⁹⁾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5년 4월에 개최되었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과 중국 외교부, 자연자원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부터는 새로이 출범한 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분과위원회는 2개 분야에 관한 논의를 위한 조직으로 서해 구조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원회와 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을 다루는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²⁷⁰⁾

268) 외교부(검색일: 2025.11.2.)

269) 외교부(검색일: 2025.11.4.)

나. 해운·해사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국장급 정례회의인 한·중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해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는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선박의 안전관리 협력 등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이다.²⁷¹⁾

이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2024년 10월 5년 만에 재개되었다. 2024년 제20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양국은 그 간 중단되었던 항만국통제관 인적 교류 및 한·중 운항 국제 여객선의 합동 점검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해양 디지털 통신 및 항로표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²⁷²⁾

2025년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도 유사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 자율운항선박 및 해양디지털 통신 등 기술개발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관련 국제 기준 논의가 진행될 때 의제문서 공동 제출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²⁷³⁾

다. 어업

우리나라와 중국은 2000년 8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주장하는 황해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 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각국의 배타적 어업 수역, 공동관리 잠정조치 수역, 과도수역을 정하고, 공동어업위원회를 통해 조업 구역과 규모를 조정한다.²⁷⁴⁾

270) 외교부(검색일: 2025.11.5.)

271) 해양수산부(검색일: 2025.11.5.)

272)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검색일: 2025.11.5.)

273) 해양수산부(검색일: 2025.11.5.)

274) 프리진뉴스(검색일: 2025.12.9.)

공동어업위원회 외에도 양국은 협정수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무허가 조업, 조업수역 위반 등 중대위반 혐의로 어선을 단속하는 경우 각국에서 처벌받도록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불법 설치된 어구 강제철거 협력 등을 추진 중이다.²⁷⁵⁾

(4) 한·일 해양협력

가. 해운·해사

한국과 일본은 1996년부터 매년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선박안전 관련 국제기준 마련과 규정 이행의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이다.²⁷⁶⁾

2025년 9월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양국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양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선체부착생물 관리협약 제정,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개정 등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회의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²⁷⁷⁾

나. 해양환경

한국과 일본은 1994년 이후 매년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환경정책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²⁷⁸⁾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제21차 개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원인으로 중단되었다가 6년 만에 재개되었다.

6년 만에 재개된 2025년 제2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275) 뉴데일리경제(검색일: 2025.12.9.)

276) 해양수산부(검색일: 2025.11.13.)

277) *Ibid.*

278) 외교부(검색일: 2025.11.13.)

은 역내 해양환경 문제 대응 등 양자협력과 더불어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각국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 유엔 플라스틱협약,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해양환경 등 환경 관련 의제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²⁷⁹⁾

²⁷⁹⁾ *Ibid.*

제2절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의 진단

1. 해양 대외전략의 SWOT 분석

1) SWOT 분석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의 내부역량(Strengths, Weaknesses)과 외부환경(Opportunities, Threats)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4대 전략 유형(SO, WO, ST, WT)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해양대외전략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해운산업 분야 기술 및 관련 사업에 있어, 뛰어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암모니아 저·무탄소 선박 및 연료 전환 기술, 자율운항선박 규제, 북극항로, 해상안전·수색구조 협력을 선도할 수 있다. 이는 IMO의 기술표준과 환경·안전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0년 ODA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첫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개발 협력 브릿지 국가’로서의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할 수 있다. 즉, 선박·항만 통합 데이터 플랫폼, 해상 감시 및 정찰,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과학조사 등에 활용되는 무인 수상체계(USV: Unmanned Surface Vehicle) 및 무인수중체계(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기술, 해양영역인식(MDA) 등 해양안보 역량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추고 있어 해양수산 ODA 사업을 특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년에는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글로벌 해양리더십

을 입증하였다. 다만, 해양대외전략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하고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없어 분절적·파편적 형태의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한계요인이다. 또한 글로벌 해양 이니셔티브를 주도한 경험이 많지 않은 점도 해양대외전략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2026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인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새로운 글로벌 해양규범 형성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와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블루 이코노미와 기후적응과 연계한 해양수산 ODA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북극항로 및 극지연구를 둘러싼 주요 국가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점, 항행의 자유 및 해양안보와 관련한 다자·소다자 및 양자협력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은 해양대외전략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4-10〉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의 SWOT 분석

구분	주요 내용
강점 (S)	• 조선·해운·항만 분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및 산업 경쟁력 • 유엔해양법협약, IMO, BBNJ 협정 등 국제 해양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 • 한-아세안, 한-아프리카, 한-중앙아 등 다자 협력 채널 보유 • 무인 수상·수중체계 기술, AI, 해양디지털 기술 • 스마트항만, 블루푸드테크, 해양예측·관측 기술 및 경험 보유 • 해양영역인식 체계(MDA), 해양경찰청 및 해군 등 해양안보 역량 • 2025년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OOC) 개최 경험
약점 (W)	• 해양대외전략의 분절적 구조 •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환경부 간 정책조정 미흡 •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양환경법, 다자해양협력 전문인력 부족 • 해양 연구개발(R&D)의 낮은 투자규모 • 한국 주도 글로벌 해양브랜드 부족

구분	주요 내용
기회 (O)	• BBNJ 협정 발효에 따른 해양거버넌스 재편 • 블루 이코노미 및 기후적응 연계 해양수산 ODA 수요 급증 • 북극항로 및 극지연구 경쟁 가속화 • 항행의 자유, 해양안보 관련 다자·소다자 및 양자협력 수요 증가 •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
위협 (T)	•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인도-태평양 해양질서의 이념적 분열 심화 • 남중국해, 북극해, 심해저 광물자원 등 해양자원 분쟁 및 영유권 갈등 확대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전 분야에 부정적 영향 증가 •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POPs 등 해양오염원의 증가 및 다양화 • 트럼프 2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해상운송 리스크 증가

자료: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한편, 2025년 12월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UN Ocean Conference)의 개최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양대외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과 해양자원, 해양수산업의 부정적 영향, 국제 해양질서를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는 해양대외전략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① 인도-태평양 해양질서의 이념적 분열 심화, ② 남중국해, 북극해, 심해저 광물자원 등 해양자원 분쟁 및 영유권 갈등 확대, ③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전 분야에 부정적 영향 증가, ④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POPs 등 해양오염원의 증가 및 다양화 등은 해양대외전략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 위협요인이자 극복해야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4대 SWOT 전략방향

(1) SO 전략방향: 강점 극대화를 통한 기회 확대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기회를 확대하는 S-O 전략으로는 첫째, 우수한 조선·항만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블루 이코노미 ODA 허브를 구축하고, 둘째, IMO협약,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상 등 다자규범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며, 셋째, 해양-기후변화-재정 메커니즘을 연계한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새로운 글로벌 규범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볼 수 있다.

(2) WO 전략방향: 글로벌 해양현안 해결을 위한 리더십 강화

다자 해양외교에 대한 경험 부족은 2025년 4월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OOC)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전환기를 맞았다. 이를 기점으로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 확장 및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해 실행력을 더욱 가속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해양현안의 중요성이 증대될수록 이를 기회요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해양대외전략의 컨트롤타워인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국가안보위원회(NSC) 산하에 상설조직으로 신설하고, 국제해양법 및 국제환경규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둘째, 개도국의 해양지식 및 해양정보 격차 해소와 해양예측 및 관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해양연구개발 국제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ST 전략방향: 해양기술·산업 역량기반 복합위협 대응

해양과학기술, 조선·해운산업, 김산업, 해양영역인식(MDA) 역량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외부위협에 대응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한-아세안 협력 강화, 스마트 해양감시기술을 통한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의 역내 긴장 완

화에 기여하고,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다자간·양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IMO협약,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사회에서 규칙·규범 설계자(rule-setter and norm-shaper)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남북극 과학기지, 쇄빙선 등 인프라와 극지연구 경험을 토대로 극지 및 북극항로 협력을 통해 해양과학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4) WT 전략방향: 중견국 연대 강화 및 해양 이니셔티브 선도

우리나라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외부위협을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전략으로 트럼프 2.0 시대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견국 연대(Middle Power Coalition)’를 통해 국제협력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아세안, 한-중, 한-미-일 등 다층 외교 채널을 통해 해양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대외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등 글로벌 해양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칭)글로벌 청색재정 플랫폼(Global Blue Finance Platform)’ 창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 경제이사국(DESA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BBNJ 협정 사무국 등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확대, 글로벌 해양해양수산 기구의 청년 인턴십 파견 등을 통해 글로벌 해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가칭)해양협력 연대(Friends of the Ocean)’를 통해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해양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해양질서 형성에 공동 대응하고, 규범·가치 기반 해양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해양대외전략의 성과와 한계

1) 전문가 설문 개요

해양대외전략과 관련 전문가 63명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1일(금)부터 8월 22일(수)까지 온라인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1〉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해양대외 협력 추진방향 및 과제	• 해양대외전략 수립 및 강화 필요성 • 해양대외전략 강화가 필요한 이유 • 해양대외전략 강화가 불필요한 이유 • 한국의 해양 분야 대외전략 평가 • 해양대외전략의 최우선 목표 • 해양대외전략 개선이 중요한 이유 • 해양대외전략 우선 강화 분야 • 해양대외전략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국제 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해양대외전략의 적절성 평가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는 해양대외전략 관련 학계, 연구계, 정부부처, 기타 비영리기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기초로 해양대외전략 수립 및 강화의 필요성, 해양대외전략 강화가 필요한 이유, 해양대외전략 강화가 불필요한 이유, 한국의 해양 분야 대외전략에 대한 평가, 국제 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해양대외전략의 적절성에 대해 설문하였다.

〈표 4-12〉 전문가 설문조사의 응답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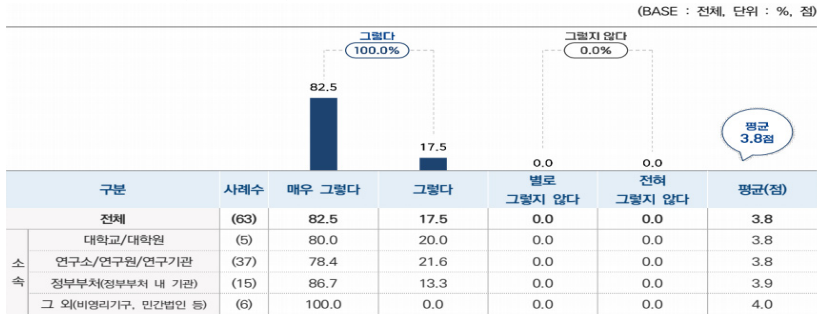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개)	비율(%)
전체	63	100.0
소속	대학교/대학원	5
	연구소/연구원/연구기관	37
	정부부처(정부부처 내 기관)	15
	기타(비영리기구, 민간법인 등)	6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대외전략 수립 및 강화 필요성

해양대외전략 수립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전체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82.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6〉 해양대외전략 수립 및 강화 필요성



자료: 저자 작성

해양대외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해상교통로, 해양영역인식 등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서’가 6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후·해양환경,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등 대외협력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통합되어 있지 않다’(50.8%), ‘해양경제, 해양산업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50.8%), ‘국제 규범 및 해양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3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해양대외전략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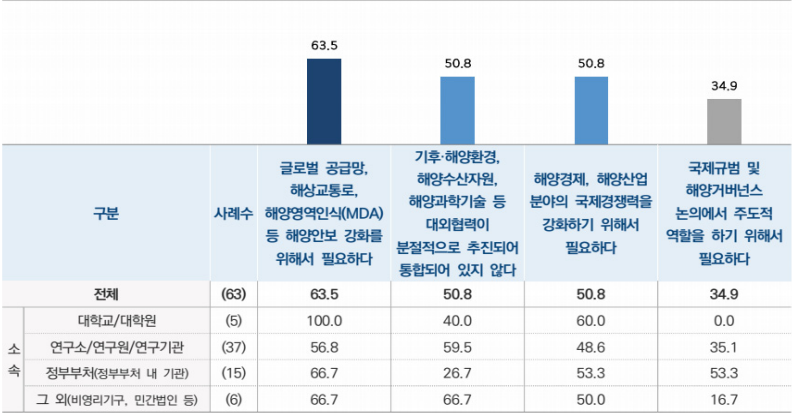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해양대외전략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에 대해, 전문가는 현재 한국의 해양분야 대외전략은 ‘관련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행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부족하다’(42.9%), ‘관계 부처마다 개별적·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너지가 부족하다’(41.3%)고 평가했다.

〈그림 4-8〉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에 대한 평가

(BASE : 전체,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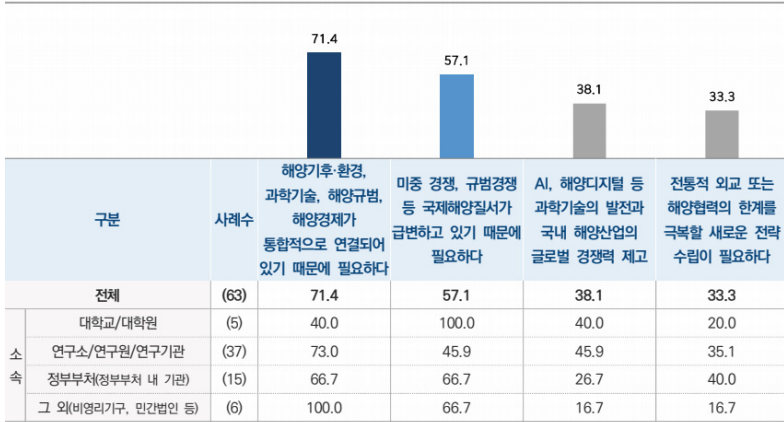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 해양대외전략 개선의 필요성

해양대외전략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71.4%의 전문가들은 ‘해양기후·환경, 과학기술, 해양규범, 해양경제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미·중 경쟁, 규범경쟁 등 국제 해양질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57.1%)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해양대외전략 개선의 필요성

(BASE : 전체, 단위 : %, 복수응답)



자료: 저자 작성

3. 해양대외전략의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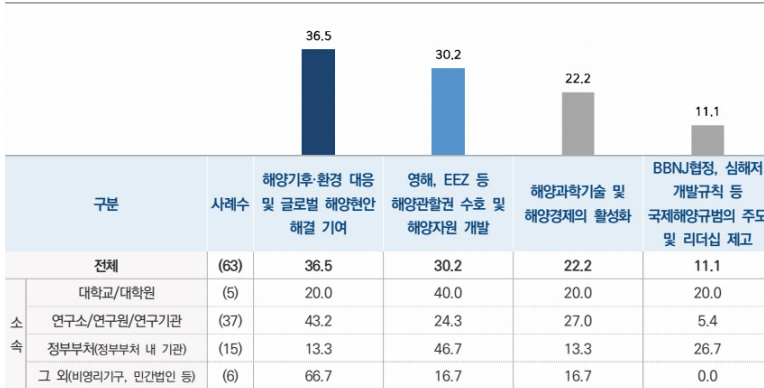
1) 해양대외전략의 목표 및 고려사항

(1) 해양대외전략의 목표

해양대외전략의 최우선 목표에 대해, ‘해양기후·환경 대응 및 글로벌 해양현안 해결 기여’를 가장 많은 36.5%의 전문가들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영해, EEZ 등 해양관할권 수호 및 해양자원 개발’이 30.2%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학교 또는 대학원 전문가, 정부부처 담당자의 경우에는 ‘영해, EEZ 등 해양관할권 수호 및 해양자원 개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0〉 해양대외전략의 목표

(BASE : 전체, 단위 :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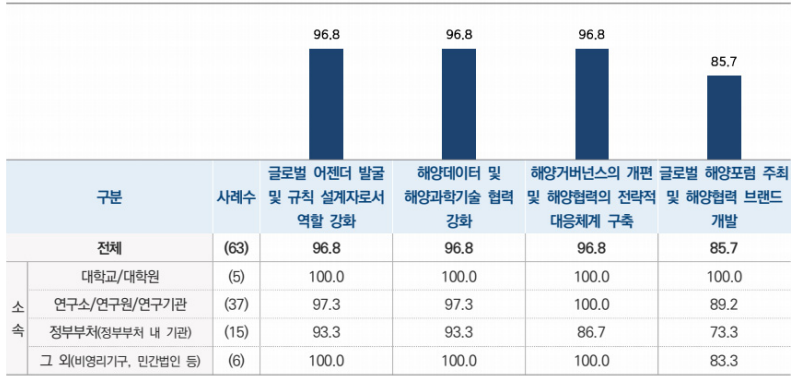
(2) 해양대외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우리나라의 국제 해양질서 변화에 따라 향후 해양대외전략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어젠다 발굴 및 규칙 설계 자로서 역할 강화’, ‘해양데이터 및 해양과학기술 협력 강화’, ‘해양거버넌스의 개편 및 해양협력의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을 가장 높은 96.8%로 평가하였으며, ‘글로벌 해양포럼 주최 및 해양협력 브랜드 개발’은 85.7%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해양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규칙 설계자’로서 실제적 기여와 함께 데이터 및 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협력, 해양거버넌스 차원의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제4회 유엔해양총회의 개최 및 K-해양협력 이니셔티브 발굴 및 추진 등이 요구된다.

〈그림 4-11〉 해양대외전략 수립 시 우선적 고려사항

(BASE : 전체, 단위 : TOP2%)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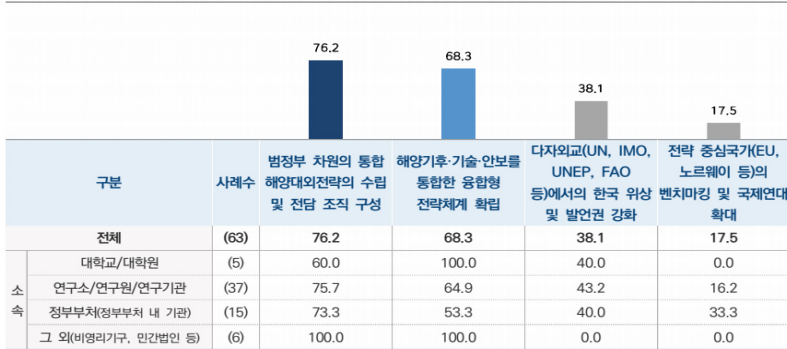
2) 해양대외전략의 개선방향

(1) 해양대외전략의 개선 분야

해양대외전략을 수립할 경우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해양대외전략 수립 및 전담 조직 구성’(76.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양기후·기술·안보를 통합한 융합형 전략체계 확립’(68.3%)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개선해야 할 분야로는 다자외교에서의 한국 위상 및 발언권 강화(38.1%), 주요국의 해양대외전략 벤치마킹 및 국제연대 확대(17.5%)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4-12〉 해양대외전략의 수립 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

(BASE : 전체,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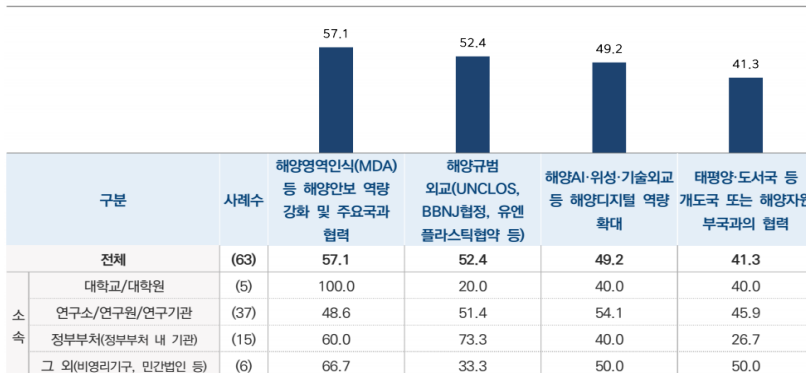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대외전략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할 분야

해양대외전략을 수립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강화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양영역인식 등 해양안보 역량 강화 및 주요국과 협력’(57.1%), ‘해양규범 외교’(52.4%), ‘해양AI·위성·기술외교 등 해양디지털 역량 확대’(49.2%), ‘태평양·도서국 등 개도국 또는 해양자원 부국과의 협력’(41.3%)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13〉 해양대외전략의 수립 시, 우선적으로 강화할 분야

(BASE : 전체, 단위 : %, 복수응답)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해양대외전략의 기반 구축 방안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및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다층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증가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와 BBNJ 협정의 발효, IMO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의 형성과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2장의 해양대외전략의 진단결과를 기초로 해양대외전략의 체계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2025년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 이후에는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협력을 넘어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와 글로벌 해양강국을 정책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해양대외정책 설계·이행기반 강화

1) 추진방향

국제 해양질서는 해양공간을 둘러싼 권원, 이용, 관리, 보호가 복합적으로 중첩되면서 해양영토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연안, EEZ, 공해는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연속적인 정책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양은 국가의 관리·안보·규범 이행이 동시에 작동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대외정책이 해양공간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와 이행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 해양협력은 해양환경·기후변화, 해양안보, 해상연계성, 해양과학기술, 규범 이행 등 해양어젠다가 분야별로 전문화·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의제 설정이나 형식적 협력 방식만으로는 복합적 해양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 정책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국제사회는 국가 이익과 전략적 필요와의 정합성을 협력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실천 중심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해양이익에 기여하는 대외협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표 4-13〉 해양대외정책 설계·이행기반 강화 방향

구분	국제 해양질서 변화	해양대외정책 설계·이행 방향
해양영토성 강화	• 해양공간을 둘러싼 권원·이용·관리·보호의 중첩 심화, 연안-EEZ-공해의 연속적 정책 공간화	• 글로벌-지역해-국가 해양공간별 다층적 정책 설계·이행전략 정교화
해양어젠다 전문화	• 해양환경·기후변화, 해양안보, 해상 연계성, 해양과학기술, 규범 이행 등 어젠다의 세분화·고도화	• 해양어젠다별 정책 목표와 수단의 명확화 및 전문화를 통한 해양대외 정책 설계
해양이익 우선성	• 협력 참여 자체보다 국가 이익·전략적 필요와의 정합성 중시	• 해양안보·해양산업·규범 영향력·해양공간 관리 등 국익 연계 협력의 선택과 집중
설계-이행 연계 필요성	• 해양 규범의 이행 책임 강화, 선언 중심 협력의 실효성 저하	•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주도성 제고와 국내 해양정책 연계 설계·이행기반 강화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변화는 포괄적 전략이나 개별 사업 단위의 설계·이행 중심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양대외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양공간의 특성, 어젠다별 전문성, 국가 해양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이행 연계 구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해양대외정책은 전략과 사업, 이행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행 가능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결국 해양대외정책 설계·이행기반 강화는 해양영토성의 강화, 해양어젠다의 전문화, 해양이익의 우선성이라는 국제 해양질서 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존 정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2) 추진내용

해양대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국제협력의 전략기획과 실행정책 설계의 중심적 조정 주체로 기능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 해양협력이 다층화·전문화되는 환경에서는 개별 부서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제 해양 어젠다와 주요 협력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가해양전략과 연계하여 해양대외정책의 중점 분야와 우선순위를 구조화하는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회의의 대응이나 협력 제안 역시 이러한 전략적 틀 속에서 기획·조정함으로써, 해양대외정책이 단발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축적·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양대외정책은 전략 수립에 그치지 않고 이행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 단계까지 포괄해야 한다. 다자 협약, 양자·소다자 협력, 현장 사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구조를 고려할 때, 정책 목표와 연계된 수단과 사업 유형, 이행 경로를 사전에 연계하는 실행 정책 설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 과제는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정책 목표-수단-이행이 결합된 정책 단위로 관리될 수 있다. 또한 해양대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부서별 계획·현장 사업 간 수직적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해양전략을 기준으로 부서별 국제협력 계획과 개별 사업이 정렬되도록 기획·선정·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이행 간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협력 성과가 국내 해양정책으로 환류되고, 국내 정책 경험이 다시 대외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해양대외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정책 조정 및 이행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직 확대나 별도 전담 조직 설치보다

는, 기존 조직 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체계화함으로써 전략 기획-정책 설계-사업 이행-성과 관리가 연계되는 내부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다.

종합하면, 해양대외정책 설계·이행기반 강화는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해양수산 통합 거버넌스 기능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이 일관되게 설계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이러한 내부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해양대외정책은 개별 협력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4-14〉 이행 거버넌스의 여건 및 추진 방향

구분	현재 여건	추진 방향
전략 기획	• 국제회의·다자협상 대응, 개별 협력 요청 처리 등 사안별·반응적 기획 중심	• 국제 해양 어젠다와 협력 플랫폼을 종합 분석하여 해양대외정책의 중점 분야와 우선순위를 선제적으로 설정하는 전략기획 기능 강화 • (가칭)국가해양대외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 • 법정계획화 및 제도개선
정책 조정	• 부서별 국제협력 과제의 분산 추진으로 국가 전략-부서 계획-사업 간 연계가 제한적	• 국가 해양전략을 기준으로 부서별 국제협력 계획과 사업을 정렬하여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직적 정합성을 확보 •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국가해양안보 협의회’ 신설·운영
이행 관리	• 개별 사업 단위의 관리·평가 중심으로 정책 성과의 축적과 환류가 제한적	• 전략-설계-사업 이행-성과 관리가 연계되는 이행 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 성과의 축적과 연속성 확보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의 해양분야 대외정책은 해양수산부, 외교부, 환경부, 해군, 해양경찰청 등이 개별 법률과 조직에 따라 산발적·파편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있다. 사실상 해양분야 대외정책은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국제기구 의제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만, 해양대외전략이 해양

수산발전 기본계획, 국제협력기본계획 등 유관계획의 하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분절화·파편화된 정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칭)국가해양대외전략’ 수립을 위한 관련 법률 및 「해양수산 직제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해양대외전략을 법정 계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해양대외전략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정책 이행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위원회(NSC) 산하에 ‘(가칭)국가해양안보 협의회’를 신설하여 해양안보, 조선·해운, 해상교통로 및 해양테러 등의 해양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국제협력 플랫폼 간 연계 거버넌스 구축

1) 추진방향

국제 해양협력은 글로벌, 지역해, 국가 차원의 서로 다른 정책 공간에서 각기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대외정책의 효과성은 개별 협력의 확대 여부보다 플랫폼 간 연계가 정책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규범 논의, 지역 단위 협력, 국가 간 사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목표와 이행 간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 플랫폼은 글로벌-지역해-국가라는 정책 공간별 기능에 따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플랫폼은 규범과 원칙을 제시하고, 지역해 플랫폼은 이를 지역 특성과 우선 어젠다에 맞게 조정·구체화하며, 국가별 협력은 이를 현장에 적용해 성과를 창출하고 환류하는 구조로 정비되어야 한다.

국가별 협력은 대상 국가의 역량과 수요에 따라 차별화가 요구된다. 주

요 해양강국과의 협력은 규범·기술·표준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중남미 등)와의 협력은 역량 강화와 현장 이행 중심으로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 구조를 통해 해양대외정책은 협력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 4-15〉 국제협력 플랫폼 연계 방향

구분	연계방향	사례
글로벌 플랫폼	국제 해양 규범과 공동 원칙을 형성하고, 지역해·국가 협력의 정책 기준을 제시	UN Ocean Conference, IMO, UNCLOS 체제, CBD 등
지역해 플랫폼	글로벌 규범을 지역해 어젠다의 방향과 정합적으로 조정·구체화하고, 지역 공동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협력으로 연계	APEC, ASEAN, PEMSEA, COBSEA 등
국가별 협력 플랫폼	글로벌·지역해 논의를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이행 결과를 상위 플랫폼으로 환류	주요 해양 강국과의 해양협력(한-미·한-일·한-중), 글로벌 사우스(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중남미 등) 대상 해양 ODA·역량 강화 협력

자료: 저자 작성

2) 추진내용

국제협력 플랫폼 간 연계 거버넌스 구축은 해양수산부가 국제협력 채널을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별 역할과 협력 어젠다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정책 흐름 속에서 연계·운영하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지역해, 국가별 협력 플랫폼이 담당해야 할 해양 어젠다의 성격을 분명히 설정하고, 상위 플랫폼의 논의가 하위 플랫폼의 실행과 성과로 연결되도록 협력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국제해양규범과 원칙, 공해 거버넌스, 해운 탈탄소화, 해양생태계 복원 기준, 해양법 이행 역량 강화 등 국제적 규범 형성과

기준 설정이 요구되는 어젠다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플라스틱 협약과 BBNJ 협정의 이행 논의에서는 협상 참여를 넘어, 과학적 근거와 이행 메커니즘, 개발도상국 지원을 결합한 주도적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지역해 플랫폼은 글로벌 규범을 지역의 환경·경제·해양 이용 특성에 맞게 조정·구체화하는 정책 조정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ASEAN,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해양오염 및 플라스틱 저감, IUU 어업 공동 대응, 해양생태계 복원, 블루 이코노미, 해양안전 및 해상범죄 공동 대응 등 지역별 특징을 반영하여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는 지역해 어젠다의 방향성과 글로벌 규범 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자와 협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4-16〉 국제협력 플랫폼별 해양 협력 어젠다 및 협력방향

구분		해양 협력 어젠다(안)	협력방향
글로벌 플랫폼		• 규범·원칙·기준 설정 • 해양 플라스틱 협약, BBNJ 이행체계, 해운 탈탄소화, 공해 거버넌스, 해양법 이행 역량 강화 등	• 국제 규범 형성과 이행 논의에서 과학적 근거와 정책 설계 경험을 기반으로 주도적 역할 수행
지역해 플랫폼		• 정책 조정·공동 대응 • 해양 플라스틱 저감, IUU 어업 공동 대응, 해양생태계 복원, 블루 이코노미 협력, AI 기반 해양 데이터·관측 등	• 글로벌 규범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구체화하고, 지역해 어젠다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공동 이행 모델 설계
국가별 협력 플랫폼	선진국	• 전략·기술·표준 협력 • 해운 탈탄소화 기술, AI 해양 플랫폼, 해양·해운 사이버 보안, 해양법 이행 방식	• 규범·기술 역량을 활용한 전략 협력을 통해 국제 규범 영향력과 규범 이행 방식의 고도화 확보
	글로벌 사우스	• 이행·역량 강화 • 해양 플라스틱 대응, IUU 어업 관리, 해양생태계 복원, 연안공동체 회복, 블루 이코노미 지원 등	• 글로벌 규범의 현장 이행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축적하는 실천 중심 협력 추진

자료: 저자 작성

국가별 협력 플랫폼에서는 협력 대상의 정책 역량과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어젠다 접근이 요구된다. 규범·기술 역량을 보유한 해양 선진국과의 협력은 해운 탈탄소화, AI 해양 플랫폼, 해양·해운 사이버 보안, 해양법 이행 등 전략·기술·표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은 해양 플라스틱 대응, IUU 어업 관리, 해양생태계 복원, 연안공동체 회복, 블루 이코노미 기반 생계 지원 등 현장 이행과 역량 강화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협력에서 축적된 이행 성과는 지역해 및 글로벌 플랫폼 논의로 환류되어, 유엔 플라스틱 협약과 BBNJ 협정 등 주요 규범의 실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 플랫폼 간 연계 거버넌스는 글로벌 규범 주도-지역해 정책 조정-국가별 이행과 성과 축적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정립될 수 있다.

3. 신 국제 해양질서 주도를 위한 K-해양 이니셔티브 추진

1) 추진방향

‘공해자유의 원칙’이 지배했던 공해(公海)와 인류공동 유산인 심해저는 해양과학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해양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와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IUU어업 등이 해양안보 위협요인과 결합되면서 중요한 해양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국제 해양질서의 핵심목표인 ‘항행의 자유’와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는 국제 해양질서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해저 케이블의 해양안보적 중요성 확대, 해상풍력 에너지 설비 파손 및 사이버 공격, 유엔제재 등 국제제재 회피선박(shadow fleet, dark fleet) 문제, 자율운항 선박 및 무인체계 확대 등의 글로벌 해양현안은 기존 국제 해양

질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선 글로벌 해양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BBNJ 협정과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상, IMO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해양 이니셔티브를 발굴·출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4-17〉 신 국제 해양질서의 대응 방향

구분	주요내용	정책 방향
BBNJ 협정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공해, 심해저) 해양이용 활동 규제 • BBNJ 협정 발효('26.1.) • 세부적 국제표준 필요	• BBNJ 협정 국내 이행기반 강화 • 대양 해양과학조사 활성화 • 해양활동의 과도한 규제 방지 • 국제표준 개발에 선제적 대응 • 유사 입장국과 협별 강화
유엔 플라스틱 협약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다자규범 • '27년 내 채택가능성 • 해양플라스틱 생산-소비-유통-관리-재활용 등 전반에 걸친 변화 대응 필요	•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기여하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 • 어구 등 해양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정책 필요 • 해양플라스틱 수거체계 광역화 및 재활용체계 활성화
IMO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 선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기술개발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 선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 지원 정책 마련

자료: 저자 작성

2) 추진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3월 19일에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BBNJ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글로벌 규범을 준수하고 선도하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바 있다. 또한 IMO의 온실가스 규제, 넷제로 펀드, 선체부착생물 지침의 협약화 등 새로운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년 1월 발효예정인 BBNJ 협정의 국내 이행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BBNJ 협정의 중요 사항인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위한 세부 국제기준 및 절차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국제공동 시범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규칙 설계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또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의 개최국으로서 유엔 SDG14번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2016년 이래 2025년 현재까지 유엔 지속가능발전(SDGs) 14번의 세부 목표인 ①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 대응 예방·감축, ②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③ 해양산성화 영향 최소화 및 대응, ④ IUU 어업 및 파괴적 어업의 종식, 과학기반 수산자원의 관리, ⑤ 해양보호구역 확대, ⑥ 유해 수산보조금 규제, ⑦ 개도국의 해양기반 경제이익 증진 및 역량강화, ⑧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의 이행 증진 등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중요하다. 또한 SDG 14번 목표는 전체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가장 적은 재정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원조달 방식의 다각화와 재원규모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²⁸⁰⁾

이에 ‘(가칭)글로벌 청색재정 플랫폼(Global Blue Finance Platform)’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IUU 어업,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 순환 해양경제 구축 등 해양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해양질서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주도의 K이니셔티브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각국 정부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금융기구, 민간기업, 개인자선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하되,

280) 훼손된 해양의 복원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약 174억 5,2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17개 전체 SDG 목표 중 14번 목표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재원인 연간 25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고 있어 연간 149억 2백만 달러가 부족함. Despina F. Johansen, Rolf A. Vestvik(2020), p.5; UN OC(2024).(검색일: 2025.5.30.)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효과성 분석과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엔 플라스틱 약 문안협상이 2026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문안협상 대응과 함께 국내 영향 분석 및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 생산기업, 1회용 플라스틱 및 대체플라스틱 생산기업,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등의 입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더욱 촘촘히 하고, 국내영향 분석 및 단계별 로드맵 개발이 필요하다.

〈표 4-18〉 K-해양 이니셔티브의 추진방향

구분	세부 내용	추진방향
국제법 질서 대응	• BBNJ 협정 발효 • IMO 온실가스 감축 •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협상 • 신 국제 해양질서의 세부 기준	• 제3차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위원회, 제1차 당사국총회 대비 • BBNJ 협정 국내 이행법률 및 관련 정책 수립 • 공해, 심해저 EIA, 구역기반관리수단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프로그램 •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국내영향 분석 및 대응 로드맵 수립
해양현안 대응	• 글로벌 해양자원 부족 •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 해양-기후 위기 대응 • AI기술, 자율운항 선박, 무인체계 등 첨단 해양기술 수요 증가 및 국제표준 경쟁 심화	• ‘(가칭)글로벌 청색재정 이니셔티브(Global Blue Finance Initiative)’를 제4차 UN해양총회 때 발족 추진 • 유엔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IMO가 공동 참여하는 ‘글로벌 해양-기후 넥서스 청색전환’ 협력 프로그램 제안 • 첨단 해양기술 개발 및 고도화,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확충

자료: 저자 작성

해양과 기후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생물다양성협약, IMO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가칭) 글로벌 해양-기후 넥서스 청색전환(G-Ocean Blue Transit: Global Ocean-Climante Nexus for Blue Transit)’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AI기술, 자율운항 선박, 무인체계 등 첨단 해양기술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개별국가의 기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 해양관측, 수중 드론 및 수중 로봇 기술, 디지털 트윈, 스마트 항만 및 블루푸드테크 기술의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과학기술과 관련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해양대외전략은 관련 국내정책과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다자·소다자간 해양협력, 양자간 해양협력에 〈표 4-18〉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의 세부의제와 우리나라의 자발적 공약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

1) 추진방향

기후위기,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블루 이코노미, 해양안보 등 국제 해양현안은 다층적·복합적이고, 국제 해양질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과 관련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요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와 주요 의제 설정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위해 국제기구 진출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뛰어난 조선·해운 및 수산양식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진출한 청년·초기 경력 인력이 소수에 그치고 관련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과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 친환경·첨단선박,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과정,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교육 과정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으나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은 제한적이다.

현재 IMO,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UNESCO 정부간해양위원회(IOC),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전문 인력은 중장년층 전문가 중심이며, 청년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사례는 극히 미흡하다. 특히 전·현직 IMO 사무총장,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 및 재판관, UNESCO 정부간해양위원회(IOC) 의장,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총회 의장,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사무국장,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총회 의장 등도 공무원, 학자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제기구 진출은 단순 인력 파견이 아니라 국제표준 제안, 의제 주도, 전문가 그룹 리더십 확보를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양수산 글로벌 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은 청년 및 초기경력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 기준으로 9위인 2.349%를 분담하고 있으나,²⁸¹⁾ 예산 대비 국제기구 진출 인력 수는 적은 상황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조선·해운산업, 해양관측·예측, 해양재해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진출 분야를 선정하고, 부문별·단계별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81) 지표누리 e-나라지표(검색일: 2025.10.20.)

〈표 4-19〉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 진출 가능 주요 국제기구

구분	주요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 사항
해운·항만	• IMO • ESCAP • UNCTAD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	•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유관기관 등과 협력 • 국제기구의 자격요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국제기구 근무 또는 인턴십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멘토링 • 해양수산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력 필요 • DB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 인턴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산 한도 내)
수산·해양환경	• FAO • OECD 수산위원회 •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 RFMO • UNEP • IUCN	
해양과학기술·국제법	• UNESCO-IOC • ISA • ITLOS • ICJ	

자료: 국제기구 정보를 기초로 저자 작성

한편,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제기구의 자격요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기구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근무경험이나 인턴십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멘토링, DB관리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인턴십 및 체재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과 초기 경력자가 해양수산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추진내용

BBNJ 협정, IMO 넷제로 규제, 유엔 플라스틱협약 등 글로벌 해양규범 강화는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이다. 따라

서 국제 해양질서의 형성 과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율운항선박, AI기술과 접목한 해양과학기술, 블루 이코노미, 해양 데이터 분석, 국제해양법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과학기술, 해양산업,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여수 해양법아카데미,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해양법 전문가 양성과정 등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 대학 등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과 해양수산 관련 유관기관 인턴십, 유엔의 ‘초기경력 해양전문가 프로그램(ECOP : Early Career Ocean Professionals Programme)’ 등 국제기구 인턴십 및 단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협력 강화 및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표 4-20〉 해양수산 부문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추진방향

구분	글로벌 주요 현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해운·항만	-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연료 - 선박 배출권거래제 - 수중드론 등 무인체계 - AI기술 및 디지털 트윈	- 해양수산연수원, 해양관련 대학,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필요 - IMO, UNCTAD, ESCAP 등 관련 국제기구 및 진출분야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수산·해양환경	- IUU어업, 지역수산기구 대응 - 블루카본 확충 및 국제인증 30x30 달성, 해양생태계 복원	- FAO, 지역수산관리기구, UNEP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기구 경험
해양과학기술·국제법	- 해상교통로, 해저케이블 등 해양안보 - 극지 및 대양연구 - 심해저 광물자원 및 에너지 - 해양관할권 및 분쟁예방·해결 -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신 국제 해양질서	- 해양안보 및 국제법 분야 전문인력 양성, ITLOS, ICJ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 - 극지 및 대양연구, 심해저 자원 개발 관련 UNESCO-IOC, ISA 등 관련 기구 진출 지원 - 여수해양법아카데미, 해양법 전문가 양성과정 등 기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 유엔 초기경력 해양전문가 프로그램과 연계

자료: 저자 작성

05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17세기 초 휴고 그로티우스의 자유해론과 배타적 지배를 주장하는 폐쇄해론은 고전 국제법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²⁸²⁾ 19세기 이후 항행기술과 국제무역이 발달하면서 국제 해양질서는 선박사고 예방 등 해상안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1618년~1648년 30년 종교전쟁을 종식시킨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은 17세기 유럽의 현실이 반영한 것이며, 400년간 근대 국제관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²⁸³⁾ 웨스트팔리아체제의 절대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 “합의된 것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원칙은 근대 국제 해양질서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²⁸⁴⁾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1945년에 유엔의 출범과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채택, 1989년 냉전 종식 등 국제사회의 큰 변동이 발생하면서 국제 해양질서 또한 성문화와 체계화가 진전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 해양질서는 기술의 발전, 전쟁, 국제기구의 설립 등으로 영향을 받는다.

282) World Ocean Review(검색일: 2025.10.20.)

283) 이해정(2002), p. 28.

284) 이상우(2005), p. 13.

국제 해양질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심해저이행협정과 유엔공해어업협정 등의 이행협정을 새롭게 채택·발효하는 방식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발전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공해와 심해저까지 해양활동이 확대되면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 우려가 커지게 되었고 이는 2023년 BBNJ 협정의 채택으로 귀결되었다. BBNJ 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새롭게 채택된 국제규범으로 ‘공해자유원칙’ 중심의 국제 해양질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또한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협상과 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및 탈탄소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 증가는 국제 해양질서의 확장성과 이행강제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최근 국제 해양질서의 특징은 해양환경과 해양자원·기술·산업이 연계되어 규제조치와 유인조치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트럼프 2기 이후 미국우선주의와 외교적·안보적 협상에서 관세의 도구화와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광물의 수출을 규제하는 ‘공급망의 무기화(supply chain weaponization)’²⁸⁵⁾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 불균형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무역 불균형을 줄이려 했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백신 등 의약품을 포함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미국 제조기반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²⁸⁶⁾

미국이 2025년 이후 파리협정, WTO, WHO 등 다자기구의 탈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전에 비해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

285) 핵심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무역 수단을 활용하여 전략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공급망의 무기화라고 할 수 있음.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통제, 태양광 부품 및 배터리 등 대체불가능한 중간재의 수출제한 등은 공급망의 무기화의 대표적인 사례임. Steven Carnovale, Carmela Di Mauro, Hamid Moradlou, Samuel Roscoe(2025.6), p. 8. 김기봉·이치훈(2025.7.10.), p. 1.

286) Seungjoo Lee(2022), pp. 340-343.

며,²⁸⁷⁾ 이는 국제 해양질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기술개발, 노동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과 조정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해양대외전략의 방향 설정과 이행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 해양질서 전환에 대응하여 해양대외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해양대외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국제 해양질서의 개념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양은 수산자원,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광물자원 등 전략적 자원의 주요 공급처로서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원의 존재는 각국의 경제적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촉진하여 해양을 둘러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의 해양 관련 대외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블루 이코노미,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해양안보 관련 해양정책과 관련 법제도,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블루 이코노미, 해양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북극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BBNJ 협정 및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상 등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87) 미국은 2025년에 파리협정과 WHO 탈퇴를 통보하였으며, 파리협정은 2026년 1월 27일에, WHO는 2026년 1월 22일에 탈퇴가 완료될 예정임. The White House(2025.1.20.)(검색일: 2025.9.20.); 파인비(2025.1.22.)(검색일: 2025.9.20.), 위키리스크한국(2025.3.28.)(검색일: 2025.9.20.)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해양대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SWOT 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대외정책을 진단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국제 해양질서 대응 협력 사업, 정책과제, 기술개발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아프리카 협력, 한-미 해양협력, 한-중 해양협력, 한-일 해양협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대외정책에 대한 SWOT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해양대외전략을 진단하였다. 또한 해양대외전략의 추진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사항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고, 정책제언과 후속 연구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에 대응하여 해양대외전략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양질서 전환 요인과 특징을 확인하고, 그에 대응한 해양대외전략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단계로는 실현가능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해양대외정책의 설계 및 이행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는 국제협력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해양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로는 글로벌 해양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로는 해양수산 글로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제기구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글로벌 해양현안 대응을 위한 리더십 강화

해양대외전략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해양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해저 케이블, 마약·밀수 등 글로벌 해양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MO, FAO, APEC, 지역수산물리기구(RFMO) 등 다자적·소다자 기구, 지역기구에서의 의제 발굴 및 대안제시를 통해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전략적 해상교통로(SLOC) 보호를 위한 협력을 주도하여 에너지 및 핵심 물자 수송로의 안전을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자원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협약 등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불법어업(IUU), 해양영토 분쟁 등에 대비하여 국제법적 체계를 정립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개별 사업 단위 또는 단기 사업 중심의 협력이 아닌 5년 이상의 프로그램적 해양협력 형태가 바람직하다. 또한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 형성 과정에서 '규범·규칙 설계자'로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손실-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전 지구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2. 국내 해양수산기술 기준의 국제표준화 및 해양과학기술 선도

기후위기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자 새로운 규제 장벽인 만큼,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해양대외전략이 요구된다. 친환경 선박 기술 및 저탄소 항만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수출함으로써, 국제해운·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잘

피, 염습지, 맹그로브 등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Blue Carbon)에 대한 국제공동 연구, 비식생 갯벌의 IPCC 블루카본 산정기준 개발, 신규 블루카본 글로벌 인증체계 제시 등과 같이 해양-기후 넥서스 해법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해양과학 기술력은 해양강국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술협력을 통해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즉 AI기술, 위성 등을 활용한 해양관측 데이터를 공유하여 재난 대응 및 해양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해양디지털 트윈, 무탄소 선박, 자율운항선박, 선체부착생물의 관리, IMO 배출권거래제 등 최근 국제표준화 또는 국제협약화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국내기준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고, 해양과학기술 국제공동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관측, 수중 드론 및 수중 로봇 등 수중 기술, 디지털 트윈, 스마트 항만 및 블루 푸드테크 분야의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해양과학기술 국제공동개발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블루 이코노미의 수요가 커지는 것과 비례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양과학기술 기반 ODA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수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해양과학기술 기반 ODA’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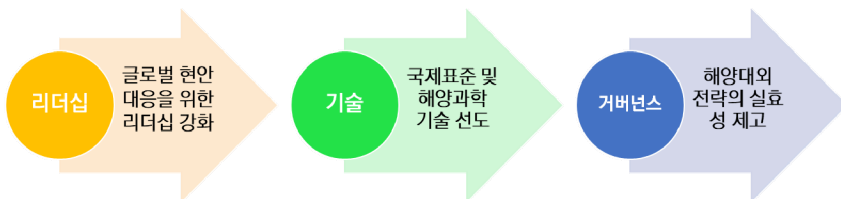
3. 국제 해양질서에 대한 전략적·통합적 대응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국제 해양질서의 큰 틀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다만, 2021년 발효된 ‘중양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2025년에 발효요건을 충족한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협상, IMO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 새로운 해양질서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해양질서는 해양오염, 해양바이오, 수산업, 플라스틱 생산·재활용 및 대체플라스틱 개발, 해양자원 탐사·개발,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별협약 차원이 파편적·분절적 대응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범부처가 함께 수립하는 ‘(가칭)국가해양대외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 밀수, 해적행위 등 전통적 해양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해양오염, 해저케이블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위원회(NSC) 산하에 ‘국가해양안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4〉 해양대외전 기반구축 방향



자료: 저자 작성

4. 해양대외전략의 단계별 로드맵 수립·이행

1) 1단계: 해양대외전략 기반 재정립(2026~2027년)

해양대외전략 로드맵 1단계는 해양대외전략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제4차 유엔해양총회 로드맵과 연동한 조직 확충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해양수산부 소관법률 개정을 통한 (가칭)국가해양대외전략 수립의 법적 근

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AI기술, 디지털 트윈, 수중드론, 로봇기술 등 수중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위한 ODA사업과 연계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해양대외전략의 기반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2) 2단계: 해양대외전략 이행력 확대(2028~2030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 준비와 병행하여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BBNJ 협정 가이드라인 개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블루 이코노미 및 해양과학기술 외교채널을 신설하고, ‘Global Blue Finance Platform’의 구축을 위한 어젠다 발굴,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해양현안인 기후변화,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등의 해양오염은 해양과학기술-해양산업-민관산학 협력 등 해양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3) 3단계: 글로벌 3대 해양강국 실현(2031~2035년)

3단계는 글로벌 3대 해양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BBNJ 협정 당사국총회 유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유엔 플라스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 해양협력 파트너십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지침 개발을 선도하고,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에서 제안하는 ‘Global Blue Finance Platform’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글로벌 해양현안인 해양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해양지식-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중기술의 고도화, 육상 기술의 해양 적용, 해양-기후기술의 연계 등을 통한 신 해양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제3절 후속 연구

본 연구는 기후위기,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경쟁 가속화, 미국우선주의 강화 등 다층적·복합적인 국제 해양 질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국제해양법질서의 개념과 특징, 국제해양법질서 전환요인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해양대외전략과 추진방향, 중점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 규모, 이행평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해양대외전략을 수립한 후 이행평가를 통해 정책적·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구상·이천기·김혁중(2025),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강선주(2020),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제정치논총, 제60집 2호.
- _____(2022.11.21.), 2022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지정학 위기와 글로벌 거버넌스, IFANS FOCUS, 2022-30K.
- 고명현·임정희(2022),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Issue Brief, 2022-35, 아산정책연구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전략적 의미 및 고려사항, 이슈브리프 558호.
- 곽성일·조승진·정재완·이재호·신민금·박나연·김소은(2022),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제22권 제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요약본),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2-1호).
- 관계부처 합동(2016),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 관계부처 합동(2017),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제3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0-1호).

관계부처 합동(2019),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2-1호).

관계부처 합동(2020),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4-1호).

관계부처 합동(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6-1호).

관계부처 합동(2021),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6-2호).

관계부처 합동(2022a),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0-1호).

관계부처 합동(2022b),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

관계부처 합동(2022c),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

관계부처 합동(2023),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4-1호).

관계부처 합동(2024),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8-1호).

관계부처 합동(2025),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52-1호).

국가안전전략연구원(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전략적 의미 및 고려사항, 이슈 브리프 558호.

국제금융센터(2021.4.30.),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지점, Choke point 리스크 점검, Issue Analysis.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8-1호).

김보람(2025), IMO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경제적 규제 승인, 상세지침 개발 등 후속 작업 예정,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Vol.14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석현(2025), 그리티우스의 생애와 법사상, 국제법학회논총, 제7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김기봉·이치훈(2025.7.10.),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 점검,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 김재천(2022),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전략의 성격과 성패의 관건, 신아세아, 29권 2호.
- 김현주(2022),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와 동북아시아의 현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김태유·김민배·김우철·김창욱·박동규·배영자·신현한·윤동열·이대식·정성훈·조재한·조홍중·허은녕·홍대식·홍성민(2024), 선착의 효(First Mover Takes All), 샘앤파커스.
- 대한민국 정부(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 중국의 일대일로 10년의 성과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 박수진(2025),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전망과 과제, 2025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 박수진·이혜영(2025), BBNJ 협정 발효를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 결과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재적·백우열·서정건·이재현·주재우·최윤정·최희식(2023),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혜진(2024),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반길주(2021), 신냉전기 구조(structure)-행위(action) 연계역학 고찰: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추이와 대중국경제 전개양상, 동서연구, 제33권 제3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반길주(2025), 인-태지역의 새로운 안보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아산정책연구원(2024.1.2.), 주요국들의 연대결성 경쟁, 계속되는 상호견제, Issue Brief, 2024-1.
- 오병선(2005), 근대초기의 자연법론의 전개와 논점, 서강법학연구, 제7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시진(2025), Grotius의 유산: Grotius의 법사상 전통 형성과 국제법 발전에의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제7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
- 오일석·김경숙·윤정현·김유철(2022),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제22권 제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부(2023), 한-아세안 연대구상.
- 외교부·African Union(2022), Korea-Africa Framework of Cooperation 2022-2026.
- 원동욱(2024),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중국의 대응 : 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7권 제4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이상봉(2023), 국민국가의 공간적 변용과 탈근대성 재구성: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대한정치학회보, 31집 3호.
- 이상우(2005), 21세기 국제질서: 탈 웨스트팔리아체제의 흐름,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No.116,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상현(2017), 미국의 대외전략: 전략적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0월호.
- 이수진·이신화(2019), 외교정책결정자의 개인적 특성과 미국의 군사적 개입격차: 오바마 대통령의 크림반도 및 남중국해 대응 비교, 국제관계 연구, 제24권 제1호.
- 이승주(2017.5.), 초불확실성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 EAI Issue Briefing.
- 이혜정(2002), 웨스트팔리아와 국제관계의 근대성: 러기의 비판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2집 제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임해용(2025), 인도-태평양 지역과 경제안보시대의 전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장준호(2006), 국제규범의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국제정치학회논총, 제46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전형진·박용안·이순철·박원빈(2023),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제23권 제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섭(2022), 신국제법 강의-이론과 사례, 박영사.
- 정현욱(2022), 국가 해양전략 기본구상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조원득(2025), 인도-태평양의 전략환경과 한국의 역내 주요 협력 평가와 과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조윤영·김석우(2016), 국제체제의 환경적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성격의 변화, 세계

- 지역연구논총, 제34권 제4호, 한국세계지역학회.
- 조정란,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이슈(2023), Trade&Security 저널, Vol.5, 무역안보관리원.
- 최원석·한형민·조성훈·홍진희·윤형준·차정미(2024),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제24권 제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순영(2025), 트럼프 2기 환경정책 변화와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영향, 자본시장포커스, 2025-10호, 자본시장연구원.
- 최인아·김경훈·배기현·이재호·김소은(2025),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고도화에 대한 합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인아·오지영·김영선·김소은·장한별(2023),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지연·박수진·김주현·이혜영·염재원(2025),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 해양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전환 가속화와 강력한 다자협력 촉구」, 동향분석 제210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선이·황인정(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와 향후 협력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아세안센터(2024), 2024 한-아세안 통계집.
- 한국은행(2023.4.14.),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해외경제포커스, 제2023-6호.
- 한선이·황인정(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와 향후 협력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승헌(2025),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의 의의와 과제, KIPA 개발협력정책 이슈브리프, Vol. 1, 한국행정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한-아세안 센터(2024), 2024 한-아세안 통계집.
- 해양수산부(2025), Korea Blue Action Plan.
- Seungjoo Lee(2022), Changes in Interdependenc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New Dynamics of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Vol. 10 No. 2.
- KOTRA(2025), 미국 관세정책 및 수입 통관 절차의 이해.

국외 문헌

- Ibukun Jacob Adewumi(2021), Exploring the Nexus and Utilities Between Regional and Global Ocean Governance Architecture, *Frontiers in Marine Science*, Vol.8., <https://doi.org/10.3389/fmars.2021.645557>.
- Australian Government(2022), Australi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ASEAN(2019),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 Belgian government(2022), Belgi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 Blasiak, R., et al.(2023), The Ocean Decade as an instrument of peace. *Current Opinion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64, 10131, .pp. 1-7.
- DG Environment Service(2017),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for Belgium
- Government Technology(2017.12.12.), Undersea Cables: Too Valuable to Leave Vulnerable?.
- EC(2022), Setting the course for a sustainable blue planet.
- EC(2025), The EU Blue Economy Report 2025.
- European Parliament(2024), Belgium's climate action strategy.
- Mahon, R., & Fanning, L (2019), Regional ocean governance: Polycentric arrangements and their role in global ocean governance. *Marine Policy*, 107, 103590, pp. 1-13.
- NIC & ISS(2010), Global Governance 2025: At a Critical Juncture.
- OECD(2019), Rethinking Innovation for a Sustainable Ocean Economy.
- OECD(2021), A new era of digitalisation for ocean sustainability?: Prospects, benefits, challenge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No. 111.
- OECD(2025), The Ocean Economy to 2050
- Pike, E. P., et al. (2024). Ocean protection quality is lagging behind quantity: Applying a scientific framework to assess real marine protected area progress against the 30 by 30 target. *Conservation Letters*, 17(4), e13020. <https://doi.org/10.1111/conl.13020>.

- Davenport (2018), The High Seas Freedom to Lay Submarine Cables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Challenges in High Seas Governance, *AJIL Unbound*, vol.12, <https://doi.org/10.1017/aju.2018.48>.
- Delf Rothe, Christine Hentschel, Ursula Schröder(2025). Recomposing the climate-security nexus: A conceptual introduction. *Geoforum*, 159, pp. 1-9, 104195. <https://doi.org/10.1016/j.geoforum.2024.104195>.
- Despina F. Johansen, Rolf A. Vestvik(2020), The cost of saving our ocean - estimating the funding gap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Marine Policy*, 112, p.5, <https://doi.org/10.1016/j.marpol.2019.103783>.
- Dita Birahayu(2023), Maritime Digital Diplomacy: Legal Revitalization and Reform of Modern and Solutive Diplomacy, *Audito Comparative Law Journal*, Vol.4, Issue 3.
- Gjerde, K., Boteler, B., Durussel, C., Rochette, J., Unger, S., Wright, G.(2018),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Options for Underpinning a Strong Global BBNJ Agreement through Regional and Sectoral Governance', *Strong High Seas Project*.
- Rachel Tiller, Elizabeth Mendenhall(2023), And so it begins-The adoption of th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reaty, *Marine Policy*, 157, 105836, <http://doi.org/10.1016/j.marpol.2023.105836>.
- Robin Mohan, Licia Fonning(2019), Regional ocean governance: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mechanisms for polycentric systems, *Marine Policy*, Vol. 107, <https://doi.org/10.1016/j.marpol.2019.103589>
- Sarah Maria Denta(2022), End plastic pollution and plastic waste- Regulation and Collaboration, *CCBS LAW Research Paper No. 22-12*, openhagen Business School.
- Seong, J. et al.(2022.11.), Global flows: The ties that bind in an interconnected world, *McKinsey Global Institute*.
- Steven Carnovale, Carmela Di Mauro, Hamid Moradlou, Samuel Roscoe(2025.6), Weaponizing Supply Chains: (Re)Configuring PSM strategies and practices in the era of geopolitical disruptions, *Journal of Purchasing and Supply*

Management, Vol. 31, Issue 3

Suárez de Vivero, J. L., & Rodríguez-Mateos, J. C. (2024). Facing a New Ocean Decade: Geopolitical Change and Challenges in Ocean Governance. *Geopolitics*, 29(1), pp. 148–173.

Suárez-de Vivero, J. L. & Rodríguez Mateos, J. C.(2017), Forecasting geopolitical risks: Oceans as source of instability, *Marine Policy*, 75, pp. 19–28.

_____(2024), Facing a New Ocean Decade: Geopolitical Change and Challenges in Ocean Governance, *Geopolitics*, 29(1), pp. 148–173.

The Economist Group(2023), *Global Maritime Trends 2050*, Commissioned by Lloyd's Register.

The White House in USA(2024), *National Strategy for a Sustainable Ocean Economy*.

UN(2023), *A new agenda for peace (Our Common Agenda Policy Brief 9)*.

UNCTAD(2025a),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5: Staying the course in turbulent waters*.

UNCTAD(2025b), *World Investment Report 2025: International investment in the digital economy*.

UNCTAD(2025c), *5th United Nations Ocean Forum on Trade-related aspects of SDG 14*.

UNEA(2022), RES.5/14.

UNEP(2025), UNEP/PP/INC.5/L.5.

UNEP(2025.9.10.),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on the work of its resumed fifth session, UNEP/PP/INC.5/9

UNESCO(2022), *An introduction to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UNESCO-IOC(2020),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30) - The Science We Need for the Ocean We Want*.

UNESCO-IOC(2024), *Barcelona Statement, 2024 Ocean Decade Conference*.

- UNESCO-IOC(2025), Ocean Decade Progress Report: July 2024-June 2025.
- UNOC(2025), Ocean Action panel 2: Increasing ocean-related scientific cooperation, knowledge, capacity-building, marine technology and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cience-policy interface for ocean health, A/CONF.230/2025/5,
- UNOC(2025), Ocean Action Panel 5: Fostering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including supporting small-scale fishers, A/CONF.230/2025/87.
- UNOC(2025), Ocean Action panel 6: Advancing sustainable ocean-based economies, 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and coastal community resilience, leaving no one behind, A/CONF.230/2025/9
- Wang(2023), International law-making process of combating plastic pollution, Marine Policy, vol.147, <https://doi.org/10.1016/j.marpol.2022.105376>.
- WMO(2025),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4.
- WTO(2022),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 Zhang, Mao, & Zhang(2023), China's maritime strategy in the new vision, Marine Policy 155, 105769, <https://doi.org/10.1016/j.marpol.2023.105769>.

인터넷 자료

- 김민호, [경제시평]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문샷 싱킹, KDI 언론기고, https://www.kdi.re.kr/share/pressContriView?bd_no=4125&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8.1.)
- 뉴데일리경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8/12/2025081200143.html>(검색일: 2025.1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엔이 주목하는 한국의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35086965>(검색일: 2025.7.15.)
- _____, 한,미, 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 나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33>(검색일: 2025.11.4.)

-
- _____,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및 환경협의회(EAC) 개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0901&call_from=seoul_paper(검색일: 2025.11.5.)
- _____, 16일 한미 해운협력회의 개최...MOU 추진,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16902>(검색일: 2016.12.4.)
- _____,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실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956>(검색일: 2025.12.24.)
- _____,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발표,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9150>(검색일: 2025.12.2.)
- 디지털 비즈온, 블루 파트너십 원칙 담긴 의미는?, <https://www.digital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527>(검색일: 2025.12.9.)
- 주한 미국대사관,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on Green Shipping Corridors Collaboration, <https://kr.usembassy.gov/113023-united-states-republic-of-korea-joint-statement-on-green-shipping-corridors-collaboration/>(검색일: 2025.12.1.)
- 연합뉴스(2025.10.21.), 미국,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서 석유·가스 시추 허용(검색일: 2025.10.22.)
- 외교부, 한-아프리카 포럼, https://www.mofa.go.kr/www/wpge/m_23299/contents.do(검색일: 2025.6.28.)
- _____, 포괄적 기후·환경 협력 강화 위한 「한-EU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 체결, https://are.mofa.go.kr/www/brd/m_24815/view.do?seq=9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item=10(검색일: 2025.11.2.)
- _____, 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6.16)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421&page=1&pitem=10(검색일: 2025.11.4.)
- _____,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4.23.)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043&page=1&pitem=10(검색일: 2025.11.5.)

- _____, [보도자료] 제2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https://brisbane.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6803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25.11.13.)
- _____, 아프리카연합, https://www.mofa.go.kr/www/wpge/m_23296/contents.do(검색일: 2025.12.1.)
- _____, [보도자료]「제7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 개최, https://brisbane.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68060&page=1(검색일: 2025.12.2.)
- _____, [보도자료](2022.12.28.),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 개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215&page=3&pitem=10(검색일: 2025.9.10.)
- _____, [보도자료](2024.10.15.), 한-프랑스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505&page=1&pitem=10(검색일: 2025.9.2.)
- _____, [외교정책](2023.12.20.),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 https://chn.mofa.go.kr/www/brd/m_25840/view.do?seq=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25.9.5.)
- _____, 뉴포커스(2024.1.9.),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70465(검색일: 2025.9.2.)
- 유엔 협약 정보시스템(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국제기구 사무국 소재 국가순위, <https://www.perplexity.ai/search/restoring-americas-maritime-do-rjKzSRckQ.CeTfvm9zCvuA> AI(검색일: 2025.10.20.)
- 위키백과, 외교정책, https://ko.wikipedia.org/wiki/%EC%99%B8%EA%B5%90_%EC%A0%95%EC%B1%85(검색일: 2025.6.1.)
- 위키리스크한국(2025.3.28.), 미국, WTO분담금 지급중단… 국제 무역 질서 영향 우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65948>(검색일: 2025.9.20.)

-
- 인천연구원(2025.4.30.), 미국의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과 전략적 전환, 최신중국동향, vol.391, <https://www.ii.re.kr/korchn/board/read?boardManagementNo=25&boardNo=17826&menuLevel=1&menuNo=30>(검색일: 2025.8.10.)
- 지표누리 e-나라지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79&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10.20.)
- 파인비(2025.1.22.), 미국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기후변화 협정 갈취, <https://www.findb.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검색일: 2025.9.20.)
- 프리진뉴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중국의 서해 구조물, 미국은 한국과 함께 강력 대응해야”, <https://www.freez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9>(검색일: 2025.12.9.)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5.4.18.), 미국 해양지배력 회복, https://www.kistep.re.kr/gpsNewsForeignView.es?mid=a30301000000&list_no=51655(검색일: 2025.8.10.)
- 한국무역협회,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기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no=2601>(검색일: 2025.12.1.)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6.17.),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기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7408&bbsSeq=10&menuSeq=971>(검색일: 2025.11.4.)
- _____, [보도자료](2025.9.20.),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공해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3244&bbsSeq=10&menuSeq=971>(검색일: 2025.9.22.)
- _____, [보도자료](2025.10.20.), 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서울에서 개최,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3426&bbsSeq=10&menuSeq=971>
- _____, [보도자료](2025.9.17.),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 제주에서 개최,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3206&menuSeq=971&bbsSeq=10>(검색일: 2025.11.13.)
- _____, [동정](2023.8.17.), 한국과 미국간 해운항만 정책 공유 등 해운분야 협력방안

- 모색, <https://www.mof.go.kr/iframe/doc/ko/selectDoc.do?docSeq=52834&menuSeq=971&bbsSeq=10>(검색일: 2025.12.1.)
- 해양수산 ODA포털, 해양수산 ODA, https://oceanaid.or.kr/page_NQPR40(검색일: 2025.7.14.)
- Alaska Beacon(2025.3.20.), Interior secretary announces plans to advance new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oil leasing, https://alaskabeacon.com/2025/03/20/interior-secretary-announces-plans-to-advance-new-arctic-national-wildlife-refuge-oil-leasing/?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8.22.)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https://asean.org/declaration-on-the-conduct-of-parties-in-the-south-china-sea-2/>(검색일: 2025.12.9.)
- Belgium, Atlas of Marine Protection, <https://old.mpatlas.org/region/country/BEL/>(검색일: 2025.7.15.)
- _____, MSP roadmap, <https://www.mspglobal2030.org/msp-roadmap/msp-around-the-world/europe/belgium/>(검색일: 2025.7.15.)
- CGS, Missions, https://en.cgs.gov.cn/CGS/201603/t20160309_266235.html(검색일: 2025.12.9.)
- China Oceanic Development Foundation, 16 Principles for Blue Partnership, <https://www.cfocean.org/html/web/en/OurPrograms/BluePartnershipAction/WorkDynamics4/940.html>(검색일: 2025.12.9.)
- CIMSEC(2019.7.1.), Maritime Order and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https://cimsec.org/maritime-order-and-americas-indo-pacific-strategy/>(검색일: 2025.7.10.)
- Civileats.com(2026.1.13.), https://civileats.com/2026/01/13/congress-moves-to-preserve-noaa-funding-for-fisheries-and-climate-research/?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1.13.)
-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2025), Climate Indicators: Sea Surface Temperature, Copernicus Earth Observation Programme, <https://climate.copernicus.eu/climate-indicators/sea-surface-temperature>(검색일: 2025. 11.5)

-
- Crisis Group(2021.11.29.), Competing Visions of International Order in the South China Sea, <https://www.crisisgroup.org/asia-pacific/china-south-china-sea/315-competing-visions-international-order-south-china-sea>(검색일: 2025.10.12.)
- CSCI, Maritime Domain Awareness, <https://www.csci-va.com/case-study-post/maritime-domain-awareness/>(검색일: 2025.5.3.)
- _____, What China's 2025 White Paper Says About Its Maritime Strategy, <https://www.csis.org/blogs/new-perspectives-asia/what-chinas-2025-white-paper-says-about-its-maritime-strategy>(검색일: 2025.12.10.)
- Dealroom, Blue Economy, <https://dealroom.co/guides/blue-economy>(검색일: 2025.9.26.)
- DLA PIPER, Deep Sea Mining Uncovered: Part Two, https://www.dlapiper.com/en-us/insights/publications/2025/07/deep-sea-mining-uncovered-part-two?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6.1.)
- EAEU, About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eaeunion.org/?lang=en#about> (검색일: 2025.7.3.)
- EC(2022), Maritime Spatial Planning Country Information, <https://maritime-spatial-planning.ec.europa.eu/media/document/12774>, p. 3.(검색일: 2025.6.1.)
- EC, Reducing emissions from the shipping sector,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transport-decarbonisation/reducing-emissions-shipping-sector_en?utm(검색일: 2025.6.5.)
- _____,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nature-and-biodiversity/nature-restoration-regulation_en(검색일: 2025.6.10.)
- _____, Common fisheries policy (CFP),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policy/common-fisheries-policy-cfp_en(검색일: 2025.6.15.)
- _____, Deep-sea fisheries: Increased protection for deep-sea species,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deep-sea-fisheries-increased-protection-deep-sea-species-2021-05-12_en?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6.16.)

- _____, Fit for 5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fit-for-55/?utm>
(검색일: 2025.6.18.)
- _____, Maritime transport, https://blue-economy-observatory.ec.europa.eu/eu-blue-economy-sectors/maritime-transport_en(검색일: 2025.6.23.)
- _____, EU Blue Economy Observatory-Belgium, https://blue-economy-observatory.ec.europa.eu/country-profiles/belgium_e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6.29.)
- _____, Offshore renewable energy, https://energy.ec.europa.eu/topics/renewable-energy/offshore-renewable-energy_en(검색일: 2025.7.1.)
- _____, Commission adopts Ocean Pact with €1 billion to protect marine life and strengthen blue economy, https://commission.europa.eu/news-and-media/news/commission-adopts-ocean-pact-eu1-billion-protect-marine-life-and-strengthen-blue-economy-2025-06-11_en(검색일: 2025.7.2.)
- _____, The European Ocean Pact,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european-ocean-pact_en (검색일: 2025.7.3.)
- _____, Commission publishes 2025 report on EU blue economy,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commission-publishes-2025-report-eu-blue-economy-2025-05-22_en(검색일: 2025.7.4.)
- _____, The North Seas Energy Cooperation, https://energy.ec.europa.eu/topics/infrastructure/high-level-groups/north-seas-energy-cooperation_en(검색일: 2025.7.15.)
- _____, Maritime security strategy,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ocean/blue-economy/other-sectors/maritime-security-strategy_en(검색일: 2025.9.1.)
-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검색일: 2025.6.8.)
- _____,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The common fisheries policy today and tomorrow: a Fisheries and Oceans Pact towards sustainable, science-based, innovative and inclusive fisheries managemen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

-
- /EN/TXT/?uri=CELEX:52023DC0103(검색일: 2025.6.10.)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About us of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https://www.eea.europa.eu/en/about>(검색일: 2025.7.14.)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Marine protected areas in Europe's seas, <https://www.eea.europa.eu/en/analysis/indicators/marine-protected-areas-in-europes-seas?utm>(검색일: 2025.6.8.)
- European Parliament(2019), Ocean Governance and Blue Growth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policy responses,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9/635557/EPRS_BRI%282019%29635557_EN.pdf(검색일: 2025.4.5.).
- European Parliament(2024a), Briefing-Begium's Climate Action Strategy,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7175/EPRS_BRI\(2024\)767175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7175/EPRS_BRI(2024)767175_EN.pdf)(검색일: 2025.7.14.)
- European Union(2024b),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2024680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C_202406808(검색일: 2025.7.13.)
- European MSP Platform, <https://maritime-spatial-planning.ec.europa.eu/countries/belgium>(검색일: 2025.7.15.)
- EveryCRSReport.com,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FY2026 Budget Request and Appropriations(2025.9.5.), <https://www.everycrsreport.com/reports/IF13024.html>(검색일: 2025.9.20.)
- FAO,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https://www.fao.org/iuu-fishing/en/>(검색일: 2025.6.2.)
- FAO, SDG Indicators Data Portal, <https://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data-portal/data/>(검색일: 2025.6.30.)
- Friends of Ocean Action, Sustainable Blue Partnership Cooperation Network, <https://www.weforum.org/friends-of-ocean-action/sustainable-blue-partnership-cooperation-network/>(검색일: 2025.12.9.)
- Greenworldwide(2025.4.9.), White House Unveils Maritime Action Plan to Stornge U.S.Shipping, <https://www.greenworldwide.com/white-house->

- unveils-maritime-action-plan-to-strengthen-u-s-shipping/?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20.)
- Industrial Cyber, EMSA guidance focuses on addressing cybersecurity onboard ships, securing digitized maritime sector, https://industrialcyber.co/transport/emsa-guidance-focuses-on-addressing-cybersecurity-onboard-ships-securing-digitized-maritime-sector/?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9.20.)
- IISD, Summary of the Thirtieth Annual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Second Part): 7-25 July 2025, Earth Negotiations Bulletin, ISA-30 2nd Part Final, <https://enb.iisd.org/sites/default/files/2025-07/enb25259e.pdf>(검색일: 2025.9.1.)
- IISD, Summary of the Resumed Fif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5-15 August 2025, Earth Negotiations Bulletin, INC 5.2 Final, <https://enb.iisd.org/plastic-pollution-marine-environment-negotiating-committee-inc5.2>(검색일: 2025.8.28.)
- IISS, New EU maritime security strategy: adjusting the compass?,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military-balance/2023/04/new-eu-maritime-security-strategy-adjusting-the-compass/?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10.1.)
- Interreg North Sea, What we do, <https://www.interregnorthsea.eu/about-us>(검색일: 2025.7.15.)
- IMF DOTS, Access to Economic and Financial Data, <https://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검색일: 2025.3.5.)
- IMO, Introduction to IMO, <https://www.imo.org/en/about/pages/default.aspx> (검색일: 2025.4.16.)
- _____,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 <https://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pages/mepc-es-2.aspx>(검색일: 2025.10.20.)
- ISA,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s, <https://www.isa.org.jm/>

-
- protection-of-the-marine-environment/regional-environmental-management-plans/(검색일: 2025.6.1.)
- ISA, Standardized approach to the development, approval and review of REMPs, https://www.isa.org.jm/protection-of-the-marine-environment/regional-environmental-management-plans/standardized-approach/?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2.)
- ISA, New Sustainable Seabed Knowledge Initiative launched to advance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Area, https://www.isa.org.jm/news/new-sustainable-seabed-knowledge-initiative-launched-advance-marine-scientific-research-area/?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14.)
- IUCN(2024), The impact of deep-sea mining on biodiversity, climate and human cultures, <https://www.iucn.nl/en/story/the-impact-of-deep-sea-mining-on-biodiversity-climate-and-human-cultures/#note30114919>(검색일: 2025.7.14.)
- Johansen & Vestvik(2020), The Cost of Saving Our Ocean – estimating the funding gap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5년 만의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재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8634&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검색일: 2025.11.5.)
- Kingdom of Belgium, Belgium turns its gaze seaward, <https://diplomatie.belgium.be/en/policy/policy-areas/highlighted/belgium-turns-its-gaze-seaward> (검색일: 2025.6.29.)
- King&Spaiding(2025.4.29.), Executive Order “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Revitalizing the U.S. Shipbuilding and Maritime Industry, https://www.kslaw.com/news-and-insights/executive-order-restoring-americas-maritime-dominance-revitalizing-the-us-shipbuilding-and-maritime-industry?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12.)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Advancing Global Ocean Governance and Building Blue Partnerships, https://www.fmprc.gov.cn/mfa_eng/xw/wjbxw/202512/t20251212_11771664.html(검색일: 2025.12.12.)

- 2025.12.9.)
- _____, China releases white paper on arms control in new era, https://www.fmprc.gov.cn/mfa_eng/xw/wjbxw/202511/t20251127_11761653.html (검색일: 2025.12.10.)
- NMEMC, 國家海洋環境監測中心 紹介, <https://www.nmemc.org.cn/>(검색일: 2025.12.9.)
- ON&T(2025.6.27.), ISA Launches Deep-Sea Biobank Initiative, https://oceannews.com/news/science-technology/isa-launches-deep-sea-biobank-initiative/?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1.)
- ODA 통계, 연도별 ODA 실적,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mainLayout>, (검색일: 2025. 7. 14)
- ODA 통합누리집, 우리나라 ODA,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4(검색일: 2025. 7. 14)
- _____,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34(검색일: 2025.7.14.)
- _____,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s://www.odakorea.go.kr/kor/bbs/PlanAndResulList>(검색일: 2025.7.14.)
- ODA 통계, 연도별 ODA 실적,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mainLayout>(검색일: 2025.7.14.)
- Passportglobal(2025.8.1.), U.S. Tariff Rates by country, <https://passportglobal.com/us-tariff-rates-by-country-2025/>(검색일: 2025.8.1.)
- SHIPS for America Act, https://garamendi.house.gov/sites/evo-subsites/garamendi.house.gov/files/evo-media-document/SHIPS%20for%20America%20Act_Section%20by%20Section%20%2812.9.24.%20-%20General%29.pdf?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12.)
- SDG뉴스(2025.12.2.), 트럼프 관세정책 IEEPA, <https://www.sd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129>(검색일: 2025.12.5.)
- TeleGeography, Submarine Cable Map 2025, https://submarine-cable-map-2025.telegeography.com/?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 2025.8.2.)
-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ate Structure

-
-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npc.gov.cn/zgrdw/englishnpc/stateStructure/2007-12/06/content_1382098.htm(검색일: 2025.12.9.)
-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 officials highlight priorities for marine economy development, https://english.www.gov.cn/news/202508/13/content_WS689c48b1c6d0868f4e8f4cc6.html(검색일: 2025.12.9.)
- _____, Ministers, https://english.www.gov.cn/statecouncil/202303/12/content_WS5f334b75c6d029c1c26379c3.html(검색일: 2025.12.10.)
-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english.scio.gov.cn/beltandroad/2019-04/22/content_76329624.htm(검색일: 2025.12.9.)
- The White House(2025.1.20.), Unleashing American Energy,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american-energy/?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8.15.)
- The White House(2025.1.20.),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withdrawing-the-united-states-from-the-worldhealth-organizatio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9.20.)
- The White House(2025.4.9.), 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storing-americas-maritime-dominance/>(검색일: 2025.10.12.)
- The White House(2025.4.24.), 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unleashing-americas-offshore-critical-minerals-and-resources/?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30.)
- The White House(2025.6.6.), National Ocean Month,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6/national-ocean-month-2025/?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30.)
- Trading Economics, South Korea-Trade,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trade-percent-of-gdp-wb-data.html>(검색일: 2025.4.15.)
- Trump plans executive order to strengthen US shipbuilding, blunt China

- domination,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plans-executive-order-strengthen-us-shipbuilding-blunt-china-domination-2025-03-06/?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12.)
- UN, Oceans & Law of the Sea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ttps://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overview_convention.htm?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4.3.)
- UN, Progress report for Contributing EUR 500 000 to support the Sustainable Seabed Knowledge Initiative (SsKi), https://sdgs.un.org/partnership-progress/contributing-eur-500-000-support-sustainable-seabed-knowledge-initiative-sski?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6.8.)
- UN DESA, <https://population.un.org/wpp/>(검색일: 2025.3.5.)
- UN 홈페이지, BBNJ 정부간회의, <https://www.un.org/bbnj/>(검색일: 2025.5.10.)
- UNCTAD(2021),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1,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rmt2021_en_0.pdf(검색일: 2025.4.20.)
- UNCTAD(2024),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4: Navigating maritime chokepoints. <https://unctad.org/publication/review-maritime-transport-2024>(검색일: 2025.10.15)
- UNCTAD(2025.2.24.), The Ocean Economy is Booming. But for how long, <https://unctad.org/news/ocean-economy-booming-how-long>(검색일: 2025.7.8.)
- UNCTAD, Global Trade Update(June 2025): Sustainable Ocean Economy : A key and fast-growing sector at risk, <https://unctad.org/publication/global-trade-update-june-2025-sustainable-ocean-economy>(검색일: 2025.7.18.)
- UNCTAD, Community News, https://www.clustercollaboration.eu/content/unctad-ocean-economy-business-3-billion-people-worth-6-trillio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5.30.)
- UNEP,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 <https://www.unep.org/inc-plastic-pollution>(검색일: 2025.9.3.)
- UNESCO, UN Ocean Decade Actions, <https://oceandecade.org/vision-mission/>

-
- (검색일: 2025.7.14.)
- USMA, About USMMA, https://www.usmma.edu/academics/curriculum/about-curriculum?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9.3.)
- UNEP 홈페이지(2025.8.15.), Chair's revised text proposal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https://www.unep.org/inc-plastic-pollution/session-5.2/documents/in-session>(검색일: 2025.9.2.)
- UNOC(2024), Inputs to SG's background note for the preparatory meeting for the 2025 UN Ocean Conference, Section IV.1-investing in SDG 14, https://sdgs.un.org/sites/default/files/2024-04/240311_inputs%20to%20SG%E2%80%99s%20BN%20for%20preparatory%20meeting%20for%202025%20UN%20Ocean%20Conference%20.pdf(검색일: 2025.5.30.)
- UN SDG 홈페이지,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https://sdgs.un.org/goals/goal14>(검색일: 2025.5.15.)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Prioritize American Energy Security, https://www.doi.gov/pressreleases/interior-launches-overhaul-offshore-wind-rules-prioritize-american-energy-security?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8.30.)
- WEF(2023.1.17.), Deglobalisation: what you need to know, <https://www.weforum.org/stories/2023/01/deglobalisation-what-you-need-to-know-wef23/>(검색일: 2025.10.15)
- Wikipedia, International order,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order?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4.23.)
- Wikipedia, Science policy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ttps://en.wikipedia.org/wiki/Science_policy_of_the_second_Trump_administratio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7.30.)
- Wikipedia, NorthSeal, https://en.wikipedia.org/wiki/NorthSeal?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8.23.)
- Wikipedia,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international_law(검색일: 2025.9.20.)

- Wikipedia, Tariffs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ttps://en.wikipedia.org/wiki/Tariffs_in_the_second_Trump_administration(검색일: 2025.9.30.)
- Windward, Six Essential Takeaways for Maritime Leaders from America's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https://windward.ai/blog/6-takeaways-from-americas-national-security-strategy/?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12.12.)
- World Bank, GDP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US-CN-JP>(검색일: 2025.7.2.)
- World Ocean Review, A constitution for the seas, <https://worldoceanreview.com/en/wor-1/law-of-the-sea/a-constitution-for-the-seas/>(검색일: 2025.10.20.)
- World Resources Institute(2025.9.20.), Statement: High Seas Treaty Reaches 60 Ratifications, Poised to Enter into Force, <https://www.wri.org/news/statement-high-seas-treaty-reaches-60-ratifications-poised-enter-force> (검색일: 2025.9.27.)
- WTO, Members submitting acceptance of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ulesneg_e/fish_e/fish_acceptances_e.htm(검색일: 2025.6.3.)

법령 정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 증진을 위한 협정(조약 제1631호, 2003.4.24.)
-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제1415호, 1997.7.23.)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567호,

2001.6.30.)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조약 제2300호, 2016.6.5.)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제1264호, 1994.12.30.)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조약 제2618, 2026.1.17.)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약칭, 유엔공해어업협정)(조약 제1886호, 2008.3.2.)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pened for signature 4 August 1995, 2167 UNTS 3 (entered into force 11 December 2001).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opened for signature 28 July 1994, 1836 UNTS 3 (entered into force provisionally 16 November 1994 and definitively 28 July 1996).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opened for signature 19 June 2023 (not yet in force) ('BBNJ Agreement').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pened for signature 5 June 1992, 1760 UNTS 79 (entered into force 29 December 1993)('CBD').

COUNCIL REGULATION(EC) No 1005/2008

European Climate Law

EU Directive 2009/125/EC

EU Regulation 2021/241

EU Regulation 2024/1781

EU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2/61

FAO(2001),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IPOA-IUU').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pened for signature 10 December 1982, 1833 UNTS 3 (entered into force 16 November 1994)('UNCLOS').

[50 USC 4501-4568] 미국 방위생산물법 1950(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부 록

1. 전문가 설문조사지

해양대외전략의 추진방향 및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국제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적과 무장강도 사건은 감소하였으나, 항행안전의 확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해양오염은 위협은 여전하고,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비롯하여 마약·밀수·해적행위 등 해양범죄,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다층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해양질서와 해양거버넌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해양대외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해양이슈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EU, 노르웨이, 벨기에 등의 해양 관련 대외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해양대외전략의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양대외전략의 현황과 개선 방향, 향후 전략 수립시 고려사항에 대한 정치, 외교,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분의 깊이 있는 답변은 해양대외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수집된 정보는 통계적 분석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한-아세안 해양협력의 비전과 실천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문분야	

- 해양은 인류에게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 등 자연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안지역의 재해예방과 오염정화 등 해양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는 다양하고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양은 인간활동으로 발생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흡수하는 지구의 최대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기후조절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 그러나, 해양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해수온 상승 및 해양산성화 등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 증가, 해양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한편, 유엔 BBNJ협정 채택(‘23.6),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협상(‘25.8월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예정),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국제 불법어업 근절 행동연합(IUU Action Alliance)’ 등 글로벌 해양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심화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지정학·경제적 리스크를 가속화하고, 강대국과 중견국들이 상호견제·협력하여 세력균형을 이루는 다극체제로 전환되면서, 가치동맹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해양질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해양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환경적 요인이 증가하고 복합위기로 작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해양대외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대외전략의 목표와 추진방향, 이행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 해양대외전략(Maritime Foreign Strategy)이란 해양외교, 해양규범, 해양환경 및 해양기술 협력을 통해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외정책을 의미

1. 우리나라는 해양대외전략을 수립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 ‘해양대외전략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2개 선택해 주세요.

- ① 글로벌 공급망, 해상교통로, 해양영역인식(MDA) 등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② 기후·해양환경,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등 대외협력이 본질적으로 추진되어 통합되어 있지 않다
 ③ 해양경제, 해양산업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④ 국제규범 및 해양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 ‘해양대외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2개 선택해 주세요.

- ① 이미 충분한 외교 채널과 정책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전략은 중복된다
 ② 해양이슈는 국제협약과 국제협력 차원에서 접근·조율하면 되고, 별도의 국가전략은 필요 없다
 ③ 부처별 인력, 예산, 전문성이 상이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이 어렵다
 ④ 해양 보다는 군사안보·경제 등 다른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4. 현재 한국의 해양분야 대외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BBNJ협정 등 국제규범, 해양안보, 해양과학기술, 해양ODA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
 ② 관련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행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부족하다
 ③ 해양기후·환경의 보전 보다 해양 및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④ 관계 부처마다 개별적·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너지가 부족하다

5. 해양대외전략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해, EEZ 등 해양관할권 수호 및 해양자원 개발
- ② BBNJ협정, 심해저 개발규칙 등 국제해양규범의 주도 및 리더십 제고
- ③ 해양기후·환경 대응 및 글로벌 해양현안 해결 기여
- ④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경제의 활성화

6. 현재 해양대외전략의 개선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2개 선택해 주세요)

- ① 미중 경쟁, 규범경쟁 등 국제해양질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 ② AI, 해양디지털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 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③ 해양기후·환경, 과학기술, 해양규범, 해양경제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 ④ 전통적 외교 또는 해양협력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7. 해양대외전략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 2개 선택해 주세요)

- ① 해양규범 외교(UNCLOS, BBNJ협정, 유엔 플라스틱협약 등)
- ② 해양영역인식(MDA) 등 해양안보 역량 강화 및 주요국과 협력
- ③ 태평양·도서국 등 개도국 또는 해양자원 부국과의 협력
- ④ 해양AI·위성·기술외교 등 해양디지털 역량 확대

8. 해양대외전략의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2개 선택해 주세요)

- ① 범정부 차원의 통합 해양대외전략의 수립 및 전담 조직 구성
- ② 전략 중심국가(EU, 노르웨이 등)의 벤치마킹 및 국제연대 확대
- ③ 해양기후·기술·안보를 통합한 융합형 전략체계 확립
- ④ 다자외교(UN, IMO, UNEP, FAO 등)에서의 한국 위상 및 발언권 강화

9. 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해양대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각 전략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해양대외전략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10-1 [전략 1] 글로벌 어젠더 발굴 및 규칙 설계자로서 역할 강화**

- 글로벌 해양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의제 문서/정보문서 제출, WG 산실 제안 등)
- 개도국 해양과학기술·재원 협력 플랫폼 구축
- BBNJ 협정의 발효·이행 및 유엔 플라스틱협약 조속 타결 지지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적절하지 않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추가 제안)

10-2 [전략 2] 해양데이터 및 해양과학기술 협력 강화

- 글로벌 해양기후 데이터 협력 강화
- 해양디지털, AI, 초격차 해양기술 발굴 및 협력

-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체계(예방, 감축, 모니터링, 기술, 자원 등)
 - (가칭) 글로벌 해양플라스틱 행동프로그램(GMPAP: Global Marine Plastic Action Programme) 제안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적절하지 않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추가 제안)

10-3 [전략 3] 해양거버넌스의 개편 및 해양협력의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 양자·다자·소다자 협력의 전략별 강화
 - 양자: 과학기술 협력, ODA 등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다자 : UN, IMO 등 국제규범 형성 및 글로벌 의제 주도
 - 소다자 : 한-노르웨이-캐나다 협의회, ASEAN+3 등 유연한 유사국간 중점 협력
 -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등 다부처 해양대외협력 시범사업 추진
 -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우주-해양 융합협력, 북극항로 등
 - 비정부기구(NGO), 학계, 민간기업 등 비국가 주체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 국가해양대외전략 수립 및 법정계획화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적절하지 않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추가 제안)

10-4 [전략 4] 글로벌 해양포럼 주최 및 해양협력 브랜드 개발

-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
 - (가칭) K Ocean Connectivity Initiative 제안 (개도국의 해양데이터·과학기술 격차 해소, 초격차 해양기술의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역량강화)
 - 해양기후변화 외교채널 신설
 - Global One Blue Finance 플랫폼 구축·운영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적절하지 않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추가 제안)

2.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 현황

〈표 1-1〉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 사례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①	• 과제명: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 • 연구자(년도): 최인아 외 (2025) • 연구목적: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실증분석 및 새로운 제도 도입방안 마련	• 계량분석에 의한 실증분석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 적용	• 아세안의 대외협력 기초 •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 • 한-아세안 협력 방향
	• 과제명: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연구자(년도): 강구상·이천기·김혁중(2025) • 연구목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야별 행정조치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문헌연구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야별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쟁점(통상, 에너지 및 환경, 기타) •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 과제명: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이슈 • 연구자(년도): 조정란(2023) • 연구목적: 글로벌 복합 통상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제시	• 문헌연구	• 2023년 7대 글로벌 통상 이슈 • 미·중 갈등의 심화 •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이슈 •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과제명: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전형진 외 (2023) • 연구목적: 글로벌 복합 통상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제시	• 문헌연구	• 인도 경제의 성장과 수출입 구조 분석 • 인도 해운·항만 제도와 기업 협력 여건 • 인도 항만물류 인프라 현황-3대 권역을 중심으로 •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별 국제협력 제안 • 한국-인도 해운·항만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안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연구자(년도): 최원석 외 (2023) • 연구목적: 주요국의 공급망 및 과학기술외교정책 등 경제안보 정책이 초래할 위험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한국의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의 부상 •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안정화 • 주요국의 경제안보정책: 과학기술외교 • 한국의 대세계 공급망 및 기술 영향력 분석
• 과제명: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오일석 외 (2022) • 연구목적: 아세안 신흥안보 상황과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발전을 위한 모델 제안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신흥안보 위험의 안보화 과정과 협력 분야 식별 • 아세안 신흥안보 상황과 협력 현황 •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발전을 위한 모델 제안
• 과제명: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 연구자(년도): 최인아 외 (2023) • 연구목적: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주요국의 해양전략을 분석하고, 국가 해양전략 구상의 방향성과 수립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사례연구 • 비교·분석 방법, 전문가 자문	•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 현황과 지역적 특징 • 주요국의 태평양 도서국 지원 정책과 협력 평가 •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확대 방안
• 과제명: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 연구자(년도): 박성일 외 (2022) • 연구목적: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제시	• 문헌연구, 사례연구 • 비교·분석 방법, 전문가 자문	• 공급망 재편 • 디지털 무역 • 기후변화 대응 • 보건 및 개발협력 •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신냉전기 구조 (structure)-행위(action) 연계 역학 고찰 :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추이와 대중국경제 전개양상 • 연구자(년도): 반길주(2021) • 연구목적: 신냉전기 미국의 해양전략 양상 및 특징을 분석하고, 해양안보적 함의를 고찰	• 문헌연구 • 구조-행위 반응 모델 분석	• 국제체제의 속성과 미국의 해양 전략 변화 추이 • 신냉전 시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 전개 양상과 특징 • 학문적·정책적 함의
• 과제명: Australi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연구자(년도): Australian Government(2022) • 연구목적: 호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분야별 감축 방안	• 문헌연구 • 자문 및 설문조사	• 호주의 2030년 및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호주의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을 위한 기본 원칙 • 호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의 주요 내용
• 과제명: Ocean Governance and Blue Growth • 연구자(년도): European Parliament(2019) • 연구목적: EU의 해양안보, 해양 오염,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어업 등 해양거버넌스 및 정책분석	• 문헌연구	• 해양의 혜택 • 해양에 대한 개발압력 • EU와 글로벌 정책 • EU의 해양환경 보호 • 지속가능한 청색경제
• 과제명: China's maritime strategy in the new vision • 연구자(년도): Zhang, Mao, & Zhang(2023) • 연구목적: 비전통적 해양 문제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양전략 구현 기회와 과제 분석	• 문헌연구	• 글로벌 해상법 • 해양경제 개발 및 생태계 보호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및 중국의 해양전략
• 과제명: Maritime Digital Diplomacy: Legal Revitalization and Reform of Modern and Solutive Diplomacy • 연구자(년도): Dita Birahayu (2023)	• 문헌연구	• 디지털 해양외교와 인도네시아의 도전 • 주요국과 비교·분석 • 디지털 해양외교의 활성화 및 법적 개혁 방향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②	연구목적: 디지털 시대 해양 디지털 외교의 특징과 인도네시아 해양 디지털 외교의 전략 제시		
	- 과제명: National Strategy for a Sustainable Ocean Economy - 연구자(년도): The White House in USA(2024) - 연구목적: 미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한 비전과 부문별 전략목표 제시	문헌연구	- 미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비전 - 전략적 목표 및 교차적 관행 -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보호, 복원, 유지 - 인간과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지원 -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발전
	- 과제명: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 연구자(년도): 박해진 외 (2024) - 연구목적: 신통상규범의 확대 및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분야의 실태 진단을 통한 규범의 국내수산업 수용력과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 CGE 모형 분석	- 신통상규범의 환경·노동 이슈와 수산 분야 사례 - 국내 수산 분야의 신통상규범 수용력 분석 -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국내 수산 분야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국내 수산 분야의 대응방안
	- 과제명: 국가 해양전략 기본구상 연구 - 연구자(년도): 정현욱 외 (2023) - 연구목적: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주요국의 해양전략을 분석하고, 국가 해양전략 구상의 방향성과 수립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사례연구 - 비교·분석 방법, 전문가 자문	- 해양전략의 개념과 구성요소 - 국제질서의 변화와 아태지역 해양 현안 - 아태지역 주요국의 해양전략과 시사점 - 국가해양전략 기본구상의 방향과 과제
	- 과제명: And so it begins-The adoption of th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reaty - 연구자(년도): Rachel Tiller, Elizabeth Mendenhall (2023)	문헌연구	- BBNJ 협정 채택 당시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사항 분석 - BBNJ 협정 채택 당시 각국 대표단의 발언 분석 - 러시아의 BBNJ 협정 미참여에 따른 영향 분석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연구목적: BBNJ 협정 채택 당시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사항 분석		
- 과제명: The High Seas Freedom to Lay Submarine Cables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Challenges in High Seas Governance - 연구자(년도): Davenport (2018) - 연구목적: 공해에서 해저 케이블 설치의 자유화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문제의 균형점 모색	문헌연구	- 국가 관할권 이원해역의 해저 케이블 설치 현황 - 공해자유원칙의 적용 - 공해 내 해저케이블 부설 이슈
- 과제명: International law-making process of combating plastic pollution - 연구자(년도): Wang(2023) - 연구목적: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법 제정 노력과 UNEA의 임무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협약 제정에 관한 이해 증진	- 문헌연구 - 법제 분석	-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국제적 입법 절차 현황 - 국제 입법 절차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국제협약 제정에 관한 향후 전망
- 과제명: End plastic pollution and plastic waste - 연구자(년도): Sarah Maria Dent(2022) - 연구목적: 플라스틱 오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제협약 마련 외에도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대응 필요성 제기	문헌연구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정 합의까지의 배경 - 플라스틱 오염 관련 유엔 지속가능목표 - 플라스틱 오염 및 민-관 파트너십

주: ❶ 지역협력 등 국가의 대외정책 관련 연구, ❷ 국제규범 변화에 대응한 정책 연구
 자료: 관련 선행연구 보고서를 기초로 저자 작성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청색경제 이행지표 개발 및 투자효과 분석	김주현
02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이슬기
03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여진
04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김미주
05	해양 복합위험의 실효적 대응 방안 연구	민영훈
06	해양 위성정보 활용 방안 연구	조성진
07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안지은
08	소비자 맞춤형 식품시장 성장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대응 방안 연구	임경희
09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정명화
10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박혜진
11	수산물 업사이클링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이남수
12	어촌과 연안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바다생활권 도입방안 연구	박상우
13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김병주
14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류희영
15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	전서연
16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다예
17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혜령
18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김근섭
19	재난·재해 대비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물류공급망 대응 방안 연구	최나영환
20	국제물류시장 공정경쟁질서 확립 방안 연구	김동환

I 2024년

01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최일선
02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좌미라
03	시민친화적 바닷가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정지호
04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석문
05	특별관리해역 관리제도 재편 방안 연구	최수빈
06	해양관할구역 과세권한의 체계적 배분방안 연구	이혜영
07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서연
08	수산물 무역(수출입) 단기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기옥
09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10	어촌다움에 기반한 어촌공간관리 방안 연구	이승혜
11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	김한나
12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허성례
1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세원
14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전략 연구	김근섭
15	항만 하역능력의 서비스 수준 개선 연구	이화섭
16	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근섭
17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혜리
18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나영환
1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강무홍
20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이성우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연구	이정아
02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박수진
03	유기수산물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오서연
04	선원 복지 개선방안 연구 - 선내 급식을 중심으로	허성례
05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을 중심으로	김세원
06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전혜은
07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박상우
08	해양생태계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	정세미
09	해양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육근형
10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정책 방향 연구	이종필
11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선박 이상 행위를 중심으로	민영훈
12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	김가현
13	부산항 터미널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 효율 개선 방안 연구 - 법·제도 측면 -	김우선
14	새만금호 수질관리 강화 방안 연구	장원근
15	미 상호주의 대응 수산분야 비관세장벽 영향 연구	이정미
1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정아

I 2024년

0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03	해양안보 MDA 체계 구축·활용 방안 연구	민영훈
0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한장협
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06	부산항 물동량 유치방안 연구	김은우
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채수란
08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아
09	내수면여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순
10	어업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방안	심성현
11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황수진
12	연안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지원방안	류희영
13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김보경
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1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장원근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윤미경
17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신정훈
18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발전방안 연구	권보배
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플랫폼 활용 제고 방안 연구	김성은
02	동아시아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자원 조성 방안	이윤정
03	한-아세안 해양협력 전략적 강화방안 연구	최지연
04	수산업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체계 구축연구	박찬엽
05	해조류 활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조현주
06	미국 무역환경 변화와 해운·조선산업의 영향 분석 연구	김한나
07	해상운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효과 분석	최영재
08	스마트항만 개발 효과 산정 방법론 연구	안승현
09	항만 수급분석 체계화 및 지침 마련 연구	신정훈
10	비컨테이너 부두 하역능력 산정을 위한 적정 점유율 기준 연구	이화섭
11	국가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거점센터 구축연구	조지성
12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중개 플랫폼 모델 개발	권보배
13	미국 이력 추적 의무화에 따른 수산물 수출기업 대응실태 분석 연구	박혜진
14	AI 활용 글로벌 수산이슈 및 무역전망체계 고도화 연구	한기욱
15	섬어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이상규

Ⅰ 2024년

0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김엄지
02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박수진
03	해양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연구	최희정
04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중심으로	조현주
05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방안 연구(한태 무역을 중심으로)	한기욱
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혜진
07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 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 철광석, 화학공업생산물, 기타광석, 잡화를중심으로	이나영
11	접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수시연구 2025-02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인쇄 2025년 12월 29일

발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인 조 정 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효민디앤피 (051-807-5100)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A Study on Building a Foundation for Maritime Foreign Strategy
in Response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